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보고서 1-1

2026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조사결과보고서

2026. 4.
한국리서치

목차 CONTENTS

Chapter

01

조사 개요 1

1절. 조사 개요 3

1.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개요 3

2. 시민대표단 모집 4

3. 시민대표단 구성 9

4. 미래세대 구성 10

2절. 설문 구성 11

1. 설문조사 문항 구성 11

2. 기후위기 대응 관련 핵심 의제 문항 12

3. 기후위기 대응 관련 인식 문항 13

4. 기후위기 관련 지식 측정 문항 15

5. 공론화 과정 평가 및 결과 수용성 문항 16

Chapter

02

조사 결과 17

1절. 핵심 의제 문항 19

1. 감축목표(의제1) 19

2. 감축경로(의제2) 31

3. 이행방안(의제3) 42

2절. 기후위기 대응 관련 인식 58

1. 기후위기 인식 58

2. 기후 관련 진술문에 대한 인식 63

3.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69

4. 기후위기 책임 주체 74

목차 CONTENTS

5. 탄소중립에 대한 인지 정도	77
6.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대한 태도	81
7. 탄소감축 방식	86
8. 탄소중립 정책을 통한 기대	91
9.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점	94
1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편이나 비용 부담	99
11.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의 관련성 인식	103
12.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구조나 체계 전환에 대한 입장	107
13. 탄소중립 추진의 필요 비용 부담 방법	112
14.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고려사항	116
15.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가장 우선시행되어야 할 정책	120
16. 탄소중립 추진 주체	124
17.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할	129
18.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태도	134
19. 기후위기 정보 접촉 정도	139
20. 접촉 경로별 기후위기 정보 신뢰 정도	141
3절. 속의효과	143
1. 종합 결과	143
2. 문항별 정답률	145
3. 연령대별 정답률	147
4절. 공론화 평가	148
1. 전반적 만족도	148
2. 공론화 효과 및 태도	150
3. 자료집 숙지 및 조사 참여 태도	152

목차 CONTENTS

4. 숙의 과정별 도움정도	155
5. 가장 도움이 된 숙의 과정	157
6. 숙의자료집 평가	159
7. 전문가 발표 평가	161
8. 분임토의 평가	163
9. KBS 생중계와 보도의 영향	165

Chapter

03

시민대표단 의견	167
-----------------------	-----

기후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보고서

CHAPTER 01

조사개요

01

1.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개요

구분	기초조사 (숙의 전 조사)	1차 조사 (자가숙의 후 조사)	2차 조사 (토론회 후 조사)
조사대상	시민대표단 전수	기초조사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중 숙의토론회 참석자	1차 조사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중 숙의토론회 참석자
응답자 수	10,000명	시민대표단 319명 미래세대 40명	시민대표단 312명 미래세대 40명
분석 표본수	시민대표단 312명 미래세대 40명 ※ 조사결과 비교·분석은 숙의과정을 완료하고 3회 조사에 모두 참여한 시민대표단 312명, 미래세대 40명 기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0.98\%p$	95% 신뢰수준에서 $\pm 5.55\%p$	
가중치 산정	성별·연령·지역 기준 모집단 분포에 맞도록 가중치 부여(셀가중)	시민대표단 추출 단계에서 고려한 다음의 총화변수를 모집단 분포에 맞게 가중치 부여(림가중) 성*연령 (14), 권역 (6), 기후위기 인식 (3), 탄소감축 동의 정도 (3)	
조사시기	사전 숙의 전 실시 (2월 11일~2월 28일)	1일차 토론회 직전 (3월 28일 9시 30분)	4일차 토론회 직후 (4월 5일 18시)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CATI)	자기기입식 대면면접조사	

2. 시민대표단 모집

○ 모집 과정

- 시민대표단 표본추출은 이상추출법(二相抽出法, two-phase sampling)을 적용함.
- (1단계)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견분포를 확인하여 300명 모집에 반영하기 위해 1만 명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음.
- (2단계) 300명 시민대표단은 기초조사를 응답한 10,000명을 대상으로 모집단의 권역, 성별, 연령대와 기초조사에서 확인된 기후위기 대응 및 감축경로에 대한 입장 분포를 반영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음.

[표] 기초조사 및 시민대표단 모집조사 개요

구분	1만 명 기초조사	시민대표단 모집조사
모집단	전국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남녀	기초조사 응답자 10,000명
표집틀	휴대전화 및 가구 유선 RDD 전화번호 (무선 : 271,726 유선 : 18,989)	기초조사 응답자 10,000명
목표표본	10,000명	300명
유효표본	10,000명	363명(불참률을 고려해 121% 모집)
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추출	성별, 연령별, 권역별, 기후위기 관련 입장(기초조사 기준) 기준 비례할당추출하되, 모집단 내 0~14세 인구 비중(약 10%)을 조사대상 연령구간에 반영하기 위해 15~19세와 20~29세에 각각 50%씩 배분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응답률	7.2% (총 138,891명과 통화하여 10,000명 응답)	-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CATI)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CATI)
조사기간	2026년 2월 11일(수) ~ 2월 28일(토)	2026년 3월 2일(월) ~ 3월 11일(수)

[표] 1만 명 기초조사 목표표본

(단위 : 명)

지역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대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국	10,000	262	250	644	596	762	694	838	812	947	934	852	874	651	884
서울	1,844	41	40	128	146	159	159	146	150	156	162	135	150	117	155
부산	643	15	14	38	36	44	41	51	50	56	59	57	64	50	68
대구	461	12	11	29	26	33	29	36	37	44	46	40	43	31	44
인천	593	15	15	38	36	49	45	53	50	56	56	51	52	33	44
광주	269	8	8	19	18	20	18	23	23	26	27	20	22	15	22
대전	280	8	7	21	20	23	20	23	23	26	26	22	23	16	22
울산	213	6	6	14	10	17	13	19	18	22	22	20	19	12	15
경기	2,654	74	71	178	162	220	200	243	233	257	255	214	215	143	189
강원	299	7	7	18	14	19	16	22	21	29	27	31	31	24	33
충북	312	8	8	20	16	23	19	25	23	30	29	30	29	22	30
충남·세종	488	15	14	30	25	36	31	44	41	48	42	42	40	34	46
전북	340	9	9	20	17	20	18	25	24	34	31	32	32	29	40
전남	349	9	8	19	15	20	17	26	23	36	31	36	33	31	45
경북	498	13	11	28	21	30	25	38	35	49	46	51	50	42	59
경남	628	18	17	36	27	40	35	53	50	65	62	60	60	44	61
제주	129	4	4	8	7	9	8	11	11	13	13	11	11	8	11

[표] 1만 명 기초조사 완료표본

(단위 : 명)

지역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대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국	10,000	281	259	643	650	791	742	837	821	953	936	852	833	651	751
서울	1,849	41	45	128	151	159	159	146	150	156	162	135	150	117	150
부산	639	15	14	38	41	49	46	51	50	56	59	57	64	50	49
대구	460	12	8	29	31	33	34	36	37	44	46	40	43	31	36
인천	620	18	18	38	41	54	50	55	55	56	56	51	51	33	44
광주	273	9	9	19	18	25	18	23	23	26	27	20	22	15	19
대전	300	8	7	26	25	28	25	23	23	26	26	22	23	16	22
울산	219	6	5	14	10	22	13	20	23	26	25	20	13	12	10
경기	2,613	74	69	162	167	220	200	243	233	257	255	214	205	143	171
강원	300	9	8	18	14	18	16	22	20	29	27	31	31	24	33
충북	316	10	11	20	21	23	24	25	23	30	29	30	28	22	20
충남·세종	485	18	13	30	30	36	36	44	41	48	42	42	40	34	31
전북	337	12	11	20	17	20	23	25	24	34	31	32	26	29	33
전남	353	10	8	24	20	20	17	31	23	36	31	36	23	31	43
경북	492	14	11	33	25	35	30	43	35	49	41	51	45	42	38
경남	615	20	17	36	32	40	40	39	50	67	66	60	60	44	44
제주	129	5	5	8	7	9	11	11	11	13	13	11	9	8	8

[표] 시민대표단 목표표본 구성

(단위 : 명)

	전체	15-19세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국	300	15	15	26	23	22	17	22	22	25	26	22	24	17	24
서울/인천/경기	154	7	7	14	13	11	10	11	11	13	13	11	13	9	11
충청/강원	26	2	2	3	3	4	3	4	4	3	2	2	4	2	3
호남/제주*	32	2	1	4	3	3	0	2	3	2	4	2	1	2	3
대구/경북	29	2	2	2	2	2	2	2	2	2	2	2	2	2	3
부산/울산/경남	44	2	3	3	2	2	2	3	2	5	5	5	4	2	4

*제주는 이동의 편의를 고려해 서울KBS 권역으로 참석함

[표] 기후위기 인식 변인의 모집단 및 표본구성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기후위기 상황이다	기후위기 상황이 아니다	모름	계
1만 명 기초조사 결과	10,000	69.3	14.1	16.6	100.0
시민대표단 모집 결과 (비가중)	312	69.9	13.5	16.7	100.0
시민대표단 모집 결과 (가중 보정)	312	69.3	14.1	16.6	100.0

[표] 탄소감축 동의 변인의 모집단 및 표본구성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탄소배출 0% 목표에 동의한다	탄소배출 0%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름	계
1만 명 기초조사 결과	10,000	51.2	18.1	30.7	100.0
시민대표단 모집 결과 (비가중)	312	51.6	18.6	29.8	100.0
시민대표단 모집 결과 (가중 보정)	312	51.2	18.1	30.7	100.0

○ 시민대표단 표본추출 시 일반국민의 의견 분포를 반영하는 이유

- 공론화에서 참여자를 선정할 때는 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지역 비율뿐만 아니라, 공론화의 핵심 의제와 관련한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모집해야 함. 이는 숙의 전 일반 여론과 숙의 후 변화된 여론의 차이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 이번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의 경우 1만 명 기초조사 단계에서 핵심 의제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의견 분포를 파악함.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주요한 공론화는 쟁점 주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여 시민대표단(참여단)을 모집하였음.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입제도 공론화, △연금개혁 공론화 등도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와 마찬가지로 이상추출법(二相抽出法, two-phase sampling)에 따라 조사시점의 여론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여 시민참여단을 구성함.
 - △개헌 공론화(2018년), △선거제 공론화(2023년) 등은 이상추출법을 적용할만한 시간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았던 관계로, 독립추출법을 적용하여 전국민 여론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여 쟁점에 대한 여론을 파악한 후, 해당 비율에 따라 시민참여단을 모집함. 즉, 공론화의 여건에 따라 시민대표단(참여단)을 모집하는 방식은 이상추출법 또는 독립추출법을 활용하였지만, 공론화 쟁점에 대한 모집단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대표단(참여단)을 구성한 점에서는 차이가 없음.
- 이는 전세계 공론조사의 보편적 절차이자 방식이며, 학습과 토의 후의 공론(公論)은 일반 여론에 기반한 숙의적 전환(deliberative turn)의 결과라는 숙의민주주의의 원론적 가정을 반영한 것임.
- 정책결정을 위한 공론화에서 쟁점 의견을 5:5 등 임의적인 비율로 구성하여 시행한 공론화는 없음.

[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입장별 분포

	사례수 (명)	건설 재개	건설 중단	판단 유보	계
2만 명 조사	20,006	36.6%	27.6%	35.8%	100.0%
최종 시민참여단	471	36.7%	29.1%	34.2%	100.0%

[표] 대입제도 공론화 시민참여단 입장별 분포

	사례수 (명)	학생부위주 전형 확대	현재 수준 유지/판단유보	수능위주 전형 확대	계
2만 명 조사	20,000	31.5%	26.5%	42.0%	100.0%
최종 시민참여단	490	31.0%	27.1%	41.8%	100.0%

[표]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 입장별 분포

구분	사례수 (명)	소득보장 강화	재정안정 중시	모름	계
1만 명 조사	10,063	49.0%	34.4%	16.6%	100.0%
최종 시민대표단	492	49.0%	34.3%	16.7%	100.0%

○ 본 공론화 시민대표단의 선정 방식

- 본 공론화는 기초조사(1만 명)를 통해 확인된 기후위기 인식 입장 비율 및 탄소감축 동의 정도에 대한 입장 비율을 기반으로 한 비례적 대표성을 기본으로 하되,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장기 정책 의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래세대 관점과 권역 간 균형을 함께 반영한 확장된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기후위기 대응 및 감축경로의 영향을 장기적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세대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0~14세 인구 비중(약 10%)을 15~19세와 20~29세 연령대에 각 50%씩 배분하는 방식으로 연령 구조를 보정함.
- 또한, 권역별 인구 비례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 권역으로의 표본 과잉 집중을 방지하고 전국 단위 공론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권역 간 표본 규모를 제한적으로 조정함. 인구 비례 기준(수도권 158명, 부산·울산·경남 44명, 대구·경북 29명, 광주·전북·전남 28명,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41명)을 바탕으로, 최종 배분은 수도권 150명, 부산·울산·경남 45명, 대구·경북 30명, 광주·전북·전남 30명,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45명으로 조정함.
- 다만, 연령 구조 및 권역 간 표본 조정으로 인해 일부 집단이 실제 인구 비례 대비 과대 또는 과소 표집될 수 있으므로, 숙의 결과 분석 시에는 기초조사(1만 명)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일반 국민 전체의 의견 분포에 대한 대표성을 통계적으로 보정함. 이를 통해 시민대표단의 구성 방식이 최종 결과의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였음.

○ 미래세대 모집 이유

- 이번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서는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래세대 대표단을 별도로 구성하였음.
-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장기적인 영향을 가지며 특히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미래세대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됨.
- 특히 이번 기후위기 관련 헌법소원 역시 청소년 기후행동 등 미래세대가 중심이 되어 제기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공론화 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두드러짐. 이에 따라 미래세대의 의견을 공론화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미래세대 시민대표단 40명을 별도로 구성하였음.

3. 시민대표단 구성

구분		조사완료		가중치 적용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312)	100.0	(312)	100.0
성별	남성	(148)	47.4	(155)	49.6
	여성	(164)	52.6	(157)	50.4
연령	15-19세	(29)	9.3	(16)	5.1
	20-29세	(49)	15.7	(39)	12.4
	30-39세	(41)	13.1	(45)	14.6
	40-49세	(47)	15.1	(51)	16.5
	50-59세	(71)	22.8	(59)	18.8
	60-69세	(32)	10.3	(54)	17.3
	70세 이상	(43)	13.8	(48)	15.4
권역	서울	(67)	21.5	(58)	18.4
	인천/경기	(89)	28.5	(101)	32.5
	대전/충청/강원	(45)	14.4	(43)	13.8
	광주/전라/제주	(32)	10.3	(34)	10.9
	대구/경북	(29)	9.3	(30)	9.6
	부산/울산/경남	(50)	16.0	(46)	14.8

* 미래세대의 관점을 반영하고 권역 간 균형 확보를 위해 연령대 및 권역별 표본을 조정하여 모집함. 다만, 분석 단계에서는 기초조사(1만 명) 결과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실제 인구 비례에 부합하는 대표성을 확보함. 이로 인해 조사완료 기준의 사례수·비율과 가중치 적용 후 사례수·비율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미래세대 구성

구분		조사완료	
		사례수(명)	비율(%)
전체		(40)	100.0
성별	남성	(18)	45.0
	여성	(22)	55.0
학년	초등학교 5~6학년	(21)	52.5
	중학교 1~3학년	(19)	47.5
권역	서울/인천/경기/제주	(8)	20.0
	대전/충청/강원	(8)	20.0
	광주/전라	(8)	20.0
	대구/경북	(8)	20.0
	부산/울산/경남	(8)	20.0

* 미래세대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 결과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1. 설문조사 문항 구성

	항목	차수
	핵심 의제 문항	1차, 2차
기후위기 대응 관련 인식 문항	기후위기 인식	기초, 1차, 2차
	기후 관련 진술문에 대한 인식	1차, 2차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기초, 1차, 2차
	기후위기 책임 주체	1차, 2차
	탄소중립에 대한 인지 정도	1차, 2차
	정부의 2050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대한 태도	기초, 1차, 2차
	선호하는 탄소감축 방식	기초, 1차, 2차
	탄소중립 정책을 통한 기대	1차, 2차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점	1차, 2차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편이나 비용 부담	기초, 1차, 2차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의 관련성 인식	1차, 2차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구조나 체계 전환에 대한 입장	1차, 2차
	탄소중립 추진의 필요 비용 부담 방법	1차, 2차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고려사항	1차, 2차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가장 우선시행되어야 할 정책	1차, 2차
	탄소중립 추진 주체	1차, 2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할	1차, 2차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태도	1차, 2차
	기후위기 정보 접촉 정도	2차
	접촉 경로별 기후위기 정보 신뢰 정도	2차
	기후위기 관련 지식측정 문항	1차, 2차
	공론화 과정 평가 및 결과 수용성 문항	2차

2. 기후위기 대응 관련 핵심 의제 문항

문항 번호	의제	보기 구성
문1	(의제1) 감축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 2.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 3.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 4. 잘 모르겠다
문2	(의제2) 감축경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2.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3.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4. 잘 모르겠다
문3	(의제3) 이행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제품을 규제해야 한다. 2.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해야 한다. 3. 정부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 산업,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 4. 정부는 기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예산과 민간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3. 기후위기 대응 관련 인식 문항

문항 번호	문항	문항 내용
문4	기후위기 인식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문5	기후 관련 진술문에 대한 인식	다음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진술문입니다. 각 진술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기후위기가 크게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다. (2)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3) 특별한 조치를 취해도 심각한 기후위기를 피하기엔 늦었다.
문6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귀하는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7	기후위기 책임 주체	귀하께서는 기후위기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다음 중 누구(또는 어디)에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문8	탄소중립에 대한 인지 정도	귀하께서는 '탄소중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문10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대한 태도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11	선호하는 탄소감축 방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에 더 공감하십니까?
문12	탄소중립 정책을 통한 기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귀하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13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14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편이나 비용 부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비용이나 불편을 감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감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문15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의 관련성 인식	귀하께서는 기후위기와 경제구조가 얼마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번호	문항	문항 내용
문16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구조나 체계 전환에 대한 입장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제구조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입장에 공감하십니까?
문17	탄소중립 추진의 필요 비용 부담 방법	귀하는 탄소중립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8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고려사항	귀하는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19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가장 우선시행되어야 할 정책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이나 기업은 축소되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나 해당 기업이 있는 지역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및 지역이 배제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란 원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20	탄소중립 추진 주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체는 다음 중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순위까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2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회의 역할 가운데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 아래 보기에서 순서대로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문22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태도	귀하는 다음 진술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탄소중립정책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2) 기업들은 당장 부담이 커도 탄소중립 추진에 동참해야 한다. (3)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은 우리나라에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
문23	기후위기 정보 접촉 정도	귀하는 다음 경로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접하십니까? (1) 뉴스 방송 (2) 뉴스를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 (3) 포털사이트 정보 (4) SNS(소셜네트워크) 정보 (5) 유튜브(YouTube) 정보 (6) 지인들과의 대화(의견 교환)

문항 번호	문항	문항 내용
문24	접촉 경로별 기후위기 정보 신뢰 정도	<p>귀하는 다음 경로별로 접하신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나 내용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p> <p>(1) 뉴스 방송 (2) 뉴스를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 (3) 포털사이트 정보 (4) SNS(소셜네트워크) 정보 (5) 유튜브(YouTube) 정보 (6) 지인들과의 대화(의견 교환)</p>

4. 기후위기 관련 지식 측정 문항

구분	문항	문항 내용
문항1	이상기후 현상 이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문항2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지수(GWP) 인지	다음과 같은 온실가스 중, 지구온난화 지수(GWP)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문항3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연도 인지	귀하께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언제까지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문항4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인지	정부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축 후 여분 또는 부족한 배출권에 대해 다른 사업장과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문항5	파리협정 인지	전세계 195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지구 평균 지표 기온상승을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1.5°C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표를 설정한 것은 다음 중 어느 문서로 알고 계십니까?

5. 공론화 과정 평가 및 결과 수용성 문항

구분	문항 개수	문항 구성
숙의 과정별 도움 정도	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집 2. 이러닝 동영상 자료 3. 홈페이지 활용(Q&A, 자료실 등) 4. 전문가 발표 5. 전문가 질의응답 6. 분임토의 7. 지인과의 대화 및 의견교환 8. 언론보도 9.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
숙의자료집 숙독 정도	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학습자료집 2. 이러닝 동영상 자료 3. 의제자료집 상편 4. 의제자료집 하편
숙의자료집 평가	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집은 토론에 필요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구성됐다 2. 자료집은 상반된 입장이 균형있게 구성됐다 3. 자료집은 이해하기 쉬운 말과 내용으로 구성됐다 4. 자료집은 내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문가 발표 평가	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가 발표는 토론에 필요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구성됐다 2. 전문가 발표는 상반된 입장이 균형있게 배정됐다 3. 전문가 발표는 이해하기 쉬운 말과 내용으로 구성됐다 4. 시민대표단 질의에 대한 전문가 답변이 적절했다 5. 시민대표단 질의에 대한 각 전문가의 응답 기회는 공정했다 6. 전문가 질의응답 시간은 충분했다 7.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은 내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분임토의 평가	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임토의는 토론에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2. 모든 분임원의 발언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됐다 3. 분임원들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4. 분임원들은 의견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해 주었다 5. 분임진행자는 중립적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6. 분임토의의 시간은 충분했다 7. 분임토의는 목적에 맞는 만족할만한 결과가 도출됐다 8. 분임토의는 내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가장 도움이 된 숙의 과정	1	
KBS 생중계와 보도 영향	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론화 참여를 결정하는데 2. 분임토의를 하는데 3. 질의응답을 하는데 4. 학습하고 숙의하는데 5. 시민대표단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는데 6. 주위 사람들과 기후위기와 관련한 논의를 하는데
공론화 참여 태도 및 인식 변화	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는 조사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했다 2. 나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지식이 늘었다 3. 나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4. 국회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5. 나는 다음에 시민대표단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할 것이다
공론화 전반적 만족도	1	

기후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보고서

CHAPTER 02

조사결과

02

1. 감축목표(의제1)

문1.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를 정할 때 그 “구체적인 목표치가 전 지구적인 감축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하는 감축목표가 다음 중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 세계 평균감축률이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한 전 세계 평균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이란 각 국가가 경제 규모, 산업 구조, 배출량, 감축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전 세계 감축 노력에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 수준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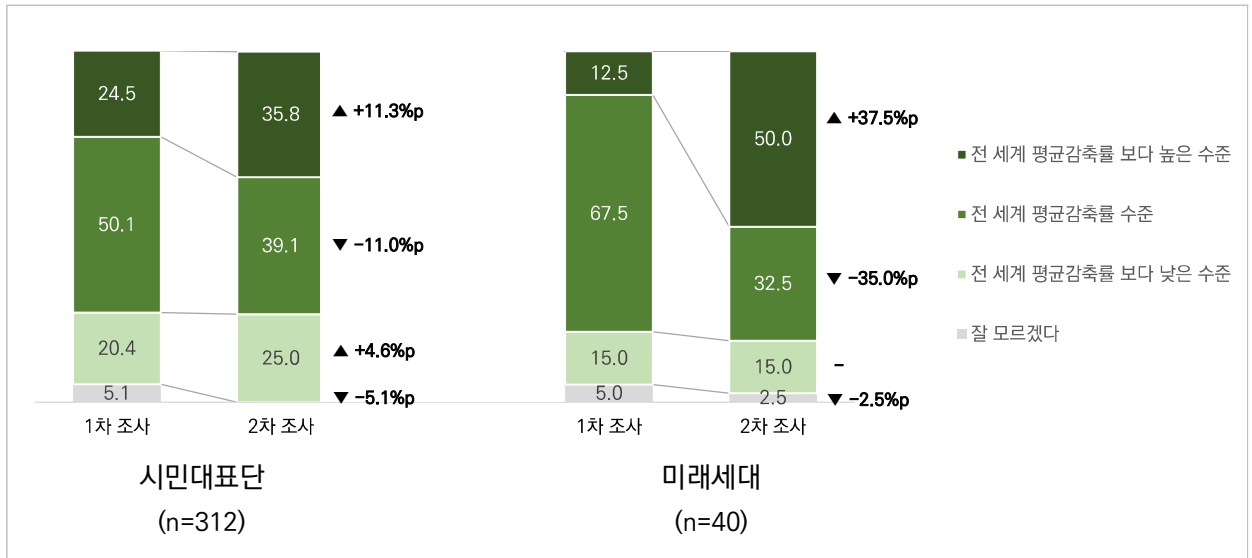
- ①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
- ②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
- ③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
- ④ 잘 모르겠다

○ 최종 조사 결과

- 감축목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시민대표단은 숙의 이후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 응답이 24.5%에서 35.8%로 증가하고,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 응답은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됨.
- 미래세대는 숙의 이후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 응답이 12.5%에서 50.0%로 크게 증가하며, 감축 필요성에 대해 더 강한 인식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남.

[의제1 감축목표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응답 결과 비교]

(단위 : %)



[의제1 감축목표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응답 결과 비교]

(단위 : %)

구분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	잘 모르겠다
시민대표단 (n=312)	1차	24.5	50.1	20.4	5.1
	2차	35.8	39.1	25.0	0.0
	GAP	+11.3%p	-11.0%p	+4.6%p	-5.1%p
미래세대 (n=40)	1차	12.5	67.5	15.0	5.0
	2차	50.0	32.5	15.0	2.5
	GAP	+37.5%p	-35.0%p	-	-2.5%p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의 감축목표 인식은 숙의 전후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며,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 응답이 1차(12.5%)에서 2차(50.0%)로 크게 증가함.
- 반면,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 응답은 1차(67.5%)에서 2차(32.5%)로 감소하여, 숙의 이후 보다 적극적인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 응답은 15.0%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잘 모르겠다' 응답은 5.0%에서 2.5%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의견이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임.

[의제1 감축목표 미래세대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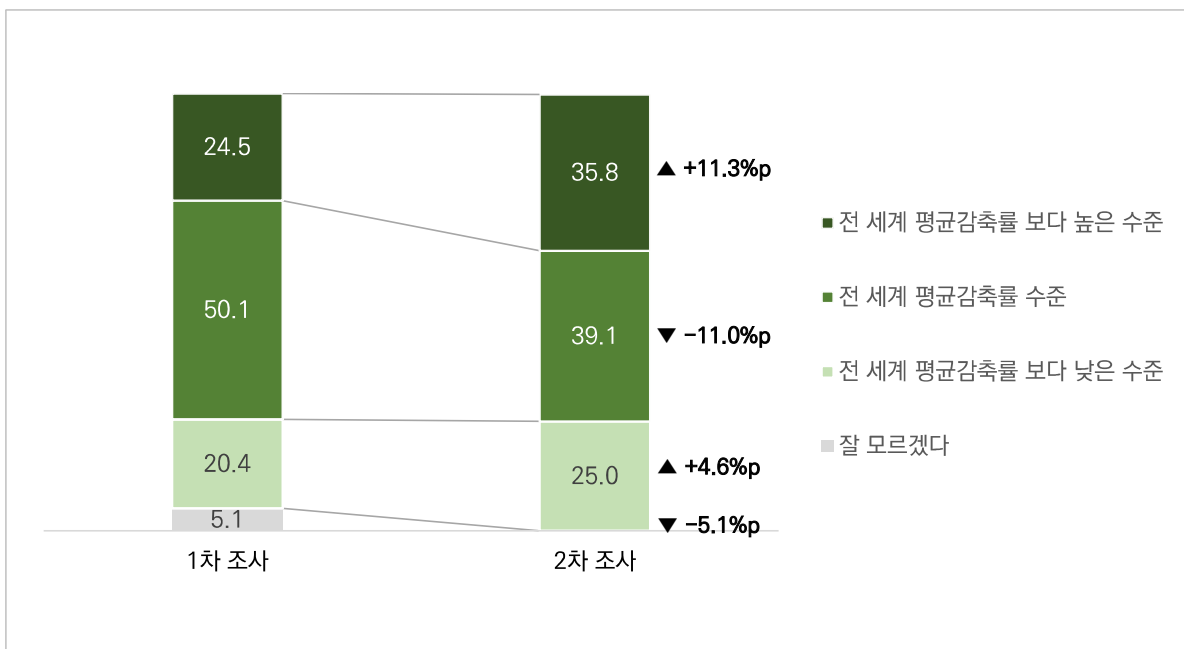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	잘 모르겠다
1차 조사	(40)	12.5	67.5	15.0	5.0
2차 조사	(40)	50.0	32.5	15.0	2.5
GAP	(40)	+37.5%p	-35.0%p	-	-2.5%p

○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

- 1차 조사에서는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 응답 비율이 50.1%,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이 24.5%,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이 20.4%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에 응답함.
- 공론화 과정을 거친 2차 조사에서는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의 응답 비율이 39.1%로 감소한 반면,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이 35.8%, ‘전 세계 평균 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이 25.0%로 증가하여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의 응답이 감소하고,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과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의 응답이 증가함.
- 세부적으로,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의 응답은 11.3%p 증가하였고,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의 응답은 4.6%p 증가함.
-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5.1%(1차)에서 0.0%(2차)로 감소하여, 의견이 구체화된 것으로 나타남.

[의제1 감축목표 조사 결과]

(n=312, 단위 : %)



○ 1차-2차 입장 변화 추이

- 1차에서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에 응답한 76명 중 39명(51.3%)은 2차에서도 '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을 선택하였으며, 20명(26.3%)은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으로, 17명(22.4%)은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으로 입장을 변경함.
- 1차에서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에 응답한 163명 중 76명(46.6%)은 2차에서도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을 선택하였으며, 55명(33.7%)은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으로, 32명(19.6%)은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으로 입장을 변경함.
- 1차에서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에 응답한 58명 중 25명(43.1%)은 2차에서도 '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하였으며, 20명(34.5%)은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으로, 13명(22.4%)은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으로 입장을 변경함.
- 1차에서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 15명 중 2차에서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동한 응답자는 5명(33.3%),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으로 이동한 응답자는 7명(46.7%), '전 세계 평균 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동한 응답자는 3명(20.0%)임.

[의제1 1차 조사-2차 조사 의견 변화]

구분			2차 조사				전체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	잘 모르겠다	
1차 조사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	명	39	20	17	-	76
		(%)	51.3%	26.3%	22.4%	-	100.0%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	명	55	76	32	-	163
		(%)	33.7%	46.6%	19.6%	-	100.0%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	명	13	20	25	-	58
		(%)	22.4%	34.5%	43.1%	-	100.0%
	잘 모르겠다	명	5	7	3	-	15
		(%)	33.3%	46.7%	20.0%	-	100.0%
	전체	명	112	123	77	-	312
		(%)	35.9%	39.4%	24.7%	-	100.0%

○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분석

- 성별로는 남성(37.0%)과 여성(41.3%) 모두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에 응답한 비율이 높고(남 30.3% vs 여 19.9%),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에 응답한 비율이 높음(여 38.9% vs 남 32.8%).
- 연령별로는 20-29세, 40-49세, 70세 이상에서는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외 연령대에서는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 30-39세는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과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의 응답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며, 50-59세는 전 연령집단 중 유일하게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30.9%)에 응답한 비율이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에 응답한 비율(27.6%)보다 높음.
- 권역별로는 인천/경기, 대전/충청/강원, 대구/경북에서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서울, 광주/전라/제주, 부산/울산/경남에서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전 권역 집단 중 유일하게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의 응답(26.9%)이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의 응답(20.0%)보다 높음.

[의제1 감축목표 응답자 특성별 표]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	잘 모르겠다
전체		(312)	35.8	39.1	25.0	-
성별	남성	(155)	32.8	37.0	30.3	-
	여성	(157)	38.9	41.3	19.9	-
연령	15-19세	(16)	29.5	53.3	17.2	-
	20-29세	(39)	40.5	36.5	22.9	-
	30-39세	(45)	37.0	37.8	25.2	-
	40-49세	(51)	39.2	31.7	29.1	-
	50-59세	(59)	27.6	41.5	30.9	-
	60-69세	(54)	33.7	41.7	24.7	-
	70세 이상	(48)	42.0	40.0	18.0	-
권역	서울	(58)	33.0	43.1	23.8	-
	인천/경기	(101)	40.8	31.6	27.6	-
	대전/충청/강원	(43)	37.1	32.4	30.5	-
	광주/전라/제주	(34)	26.9	49.7	23.4	-
	대구/경북	(30)	57.3	33.1	9.6	-
	부산/울산/경남	(46)	20.0	53.1	2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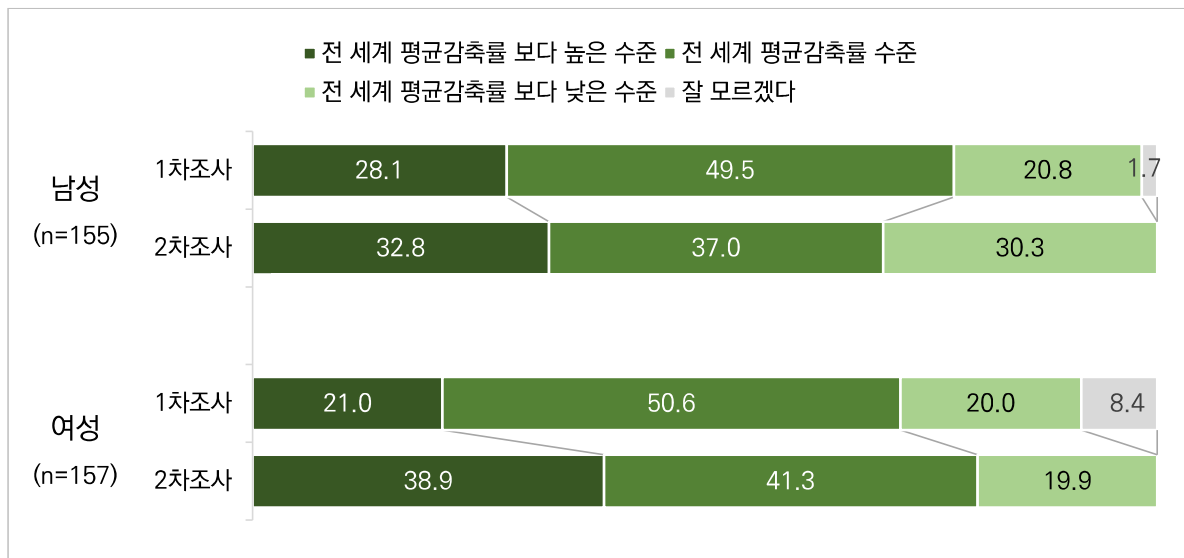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 의견 변화 분석

❖ 성별 의견 변화

- 남성은 1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에 응답한 비율이 49.5%로 반수에 가까웠으나, 공론화 이후 2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에 응답한 비율은 37.0%로 감소하고,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은 4.7%p,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은 9.5%p 증가함.
- 여성은 1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에 응답한 비율이 50.6%로 과반수였으나, 공론화 이후 2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에 응답한 비율은 41.3%,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낮은 수준'은 19.9%로 감소하고, '전 세계 평균감축률 보다 높은 수준'은 17.9%p 증가함.

[성별에 따른 의제1 감축목표 의견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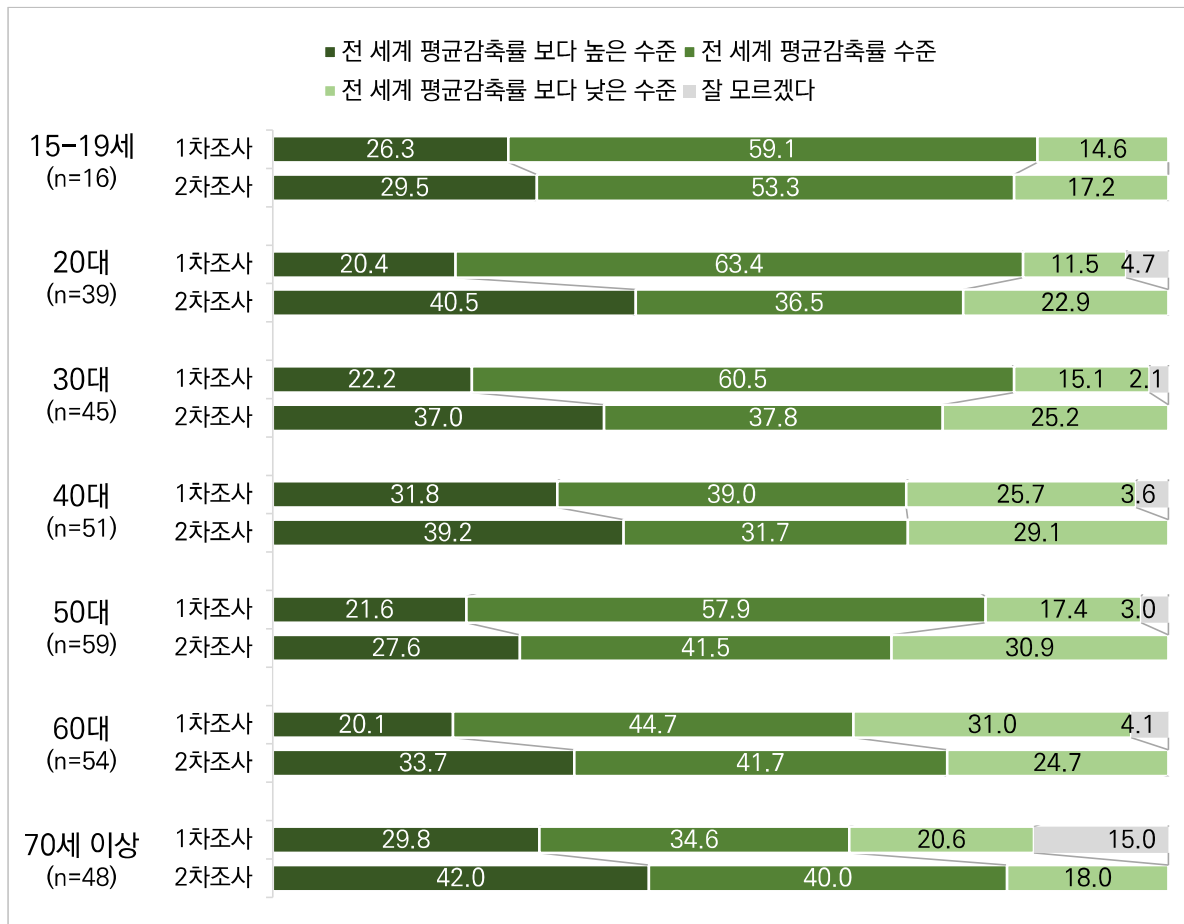
❖ 연령대별 의견 변화

- 15-19세: 1차에서 '전 세계 평균수준'(59.1%) → 2차에서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29.5%) 및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17.2%)으로 다소 분산됨.
 - 15-19세는 1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수준'이 59.1%로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 26.3%,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 14.6%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하지만 공론화 이후 2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수준'은 53.3%로 감소하고,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 29.5%,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 17.2%로 다소 분산됨.
- 20-29세, 30-39세: 1차에서 '전 세계 평균수준'(63.4%, 60.5%)의 높은 응답률 → 2차에서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40.5%, 37.0%) 및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22.9%, 25.2%)으로 크게 분산됨.
 - 20-29세는 1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수준'이 63.4%로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 20.4%,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 11.5%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음. 하지만 공론화 이후 2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수준'은 36.5%로 감소하고,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 40.5%,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 22.9%로 분산됨. 2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남.
 - 30-39세는 1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수준'이 60.5%로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 22.2%,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 15.1%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음. 하지만 공론화 이후 2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수준'은 37.8%로 감소하고,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 37%,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 25.2%로 분산됨. 다만 '전 세계 평균 수준' 응답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보다 0.8%p 높게 나타남.
- 40-49세, 50-59세: 1차에서 '전 세계 평균수준'(39.0%, 57.9%)의 높은 응답률 → 2차에서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39.2%, 27.6%) 및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29.1%, 30.9%)으로 분산됨.
 - 40-49세는 1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수준'이 39.0%로 가장 높고,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31.8%,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 25.7%로 나타남. 하지만 공론화 이후 2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전 세계 평균수준'이 31.7%,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 29.1%로 나타남.
 - 50-59세는 1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수준'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21.6%,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 17.4%로 나타남. 그러나 공론화 이후 2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수준'의 응답은 41.5%로 감소한 반면,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은 27.6%,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은 30.9%로 증가함. 전 연령 집단 중 유일하게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응답한 비율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 60-69세: 1차에서 '전 세계 평균수준'(44.7%) 및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31.0%)의 높은 응답률 → 2차에서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33.7%)으로 일부 이동.
- 60-69세는 1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수준' 응답이 44.7%로 가장 높았고, 전 연령 집단 중 유일하게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 응답(31%)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20.1%)보다 높았음. 하지만 공론화 이후 2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수준'과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응답은 감소한 반면,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응답은 13.6%p 증가함.
- 70세 이상: 1차에서 '전 세계 평균수준'(34.6%) → 2차에서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42.0%)으로 선화.
- 70세 이상은 1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수준'이 34.6%로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 29.8%,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 20.6%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5.0%로 높게 나타남. 하지만 공론화 이후 2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수준'과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은 각각 40%, 42%로 증가하고,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 비율은 18.0%로 감소함. 공론화 이후 '잘 모르겠다' 응답은 사라졌으며,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로 변화함.

[연령에 따른 의제1 감축목표 의견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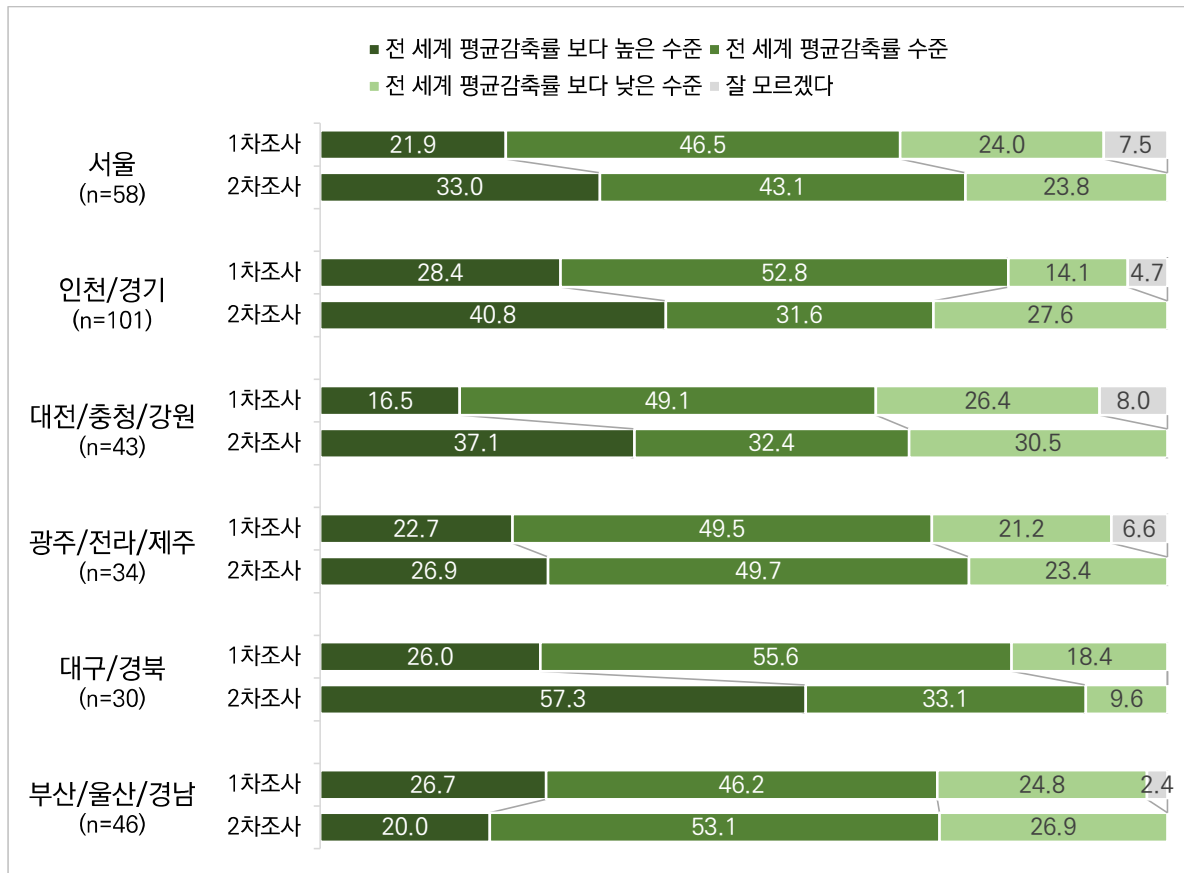
❖ 권역별 의견 변화

- 서울: 2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 수준'과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 간의 비율 차이가 감소함.
 - 서울은 1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 수준'이 46.5%,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21.9%,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 24%로 나타남. 공론화 이후 2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은 23.8%로 소폭 감소했고, '전 세계 평균 수준'이 43.1%,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33.0%로, 양 응답지 간 격차가 24.6%p에서 10.1%p로 감소함.
- 인천/경기: 1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 수준'의 높은 비율 → 2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 보다 높은 수준'과 '전 세계 평균 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산됨.
 - 인천/경기는 1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 수준'이 52.8%,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28.4%,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 14.1%로 나타남. 공론화 이후 2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 수준'은 31.6%로 감소한 반면,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40.8%,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 27.6%로 1차 조사에 비해 각각 12.4%p, 13.5%p 증가함. 특히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응답 비율이 '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 대전/충청/강원: 1차 조사 '전 세계 평균 수준'의 높은 비율(49.1%) → 2차 조사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37.1%)으로 선회 및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30.5%)의 비율 증가.
 - 대전/충청/강원은 1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 수준'의 응답이 49.1%,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16.5%,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 26.4%로 나타남. 공론화 이후 2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 수준'의 응답은 32.4%로 감소한 반면,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응답은 37.1%로 증가함. 한편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응답은 4.1%p 증가하였으며, '잘 모르겠다' 응답이 사라짐.
- 광주/전라/제주: '전 세계 평균 수준'(49.7%)의 높은 비율, '잘 모르겠다'를 제외한 모든 선택지의 비율 증가.
 - 광주/전라/제주는 1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 수준'의 응답이 49.5%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22.7%,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 21.2%로 나타남. 공론화 이후 2차 조사에서 각 응답지의 응답이 소폭 증가하고, '잘 모르겠다'의 응답이 사라짐. 전반적인 지지 수준은 크게 변하지 않음.
- 대구/경북: 1차 조사 '전 세계 평균 수준'(55.6%)의 높은 비율 → 2차 조사 '전 세계 평균 보다 높은 수준'(57.3%)으로 선회.
 - 대구/경북은 1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 수준'의 응답이 55.6%로 전 권역 집단 중 가장 높았으나, 공론화 이후 2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응답이 57.3%로 전 권역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남. 1차조사 대비 2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 수준'의 응답은 22.5%p 감소, '전 세계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의 응답은 31.3%p 증가,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응답은 8.8%p 감소하였음.

- 부산/울산/경남: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은 감소(26.7%→20.0%), '전 세계 평균 수준'과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은 증가(46.2%→53.1%, 24.8%→26.9%).
- 부산/울산/경남은 1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 수준'의 응답이 46.2%,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26.7%,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 24.8%로 나타남. 공론화 이후 2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응답은 20%로 감소한 반면, '전 세계 평균 수준'과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응답은 각각 53.1%, 26.9%로 증가함.

[권역에 따른 의제1 감축목표 의견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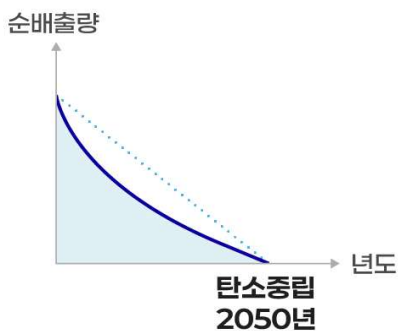
2. 감축경로(의제2)

문2. 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온실가스를 어느 시기에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기후에 대한 영향과 부담이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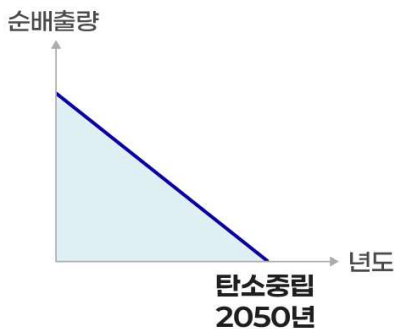
다음 그림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세 가지 감축 경로를 표현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경로를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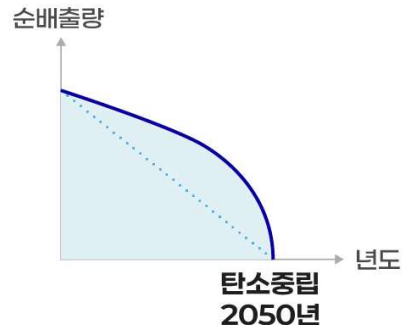
- IPCC가 1.5도 목표를 달성을 위해 권고하는 감축경로와 유사합니다.
- 감축량에 대한 미래세대의 부담이 적습니다.

②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 IPCC 권고안에 비해 배출량이 더 많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 감축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③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 IPCC 권고안에 비해 배출량이 훨씬 많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더 커질 것입니다.
- 감축량에 대한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장 크며, 현재 결정의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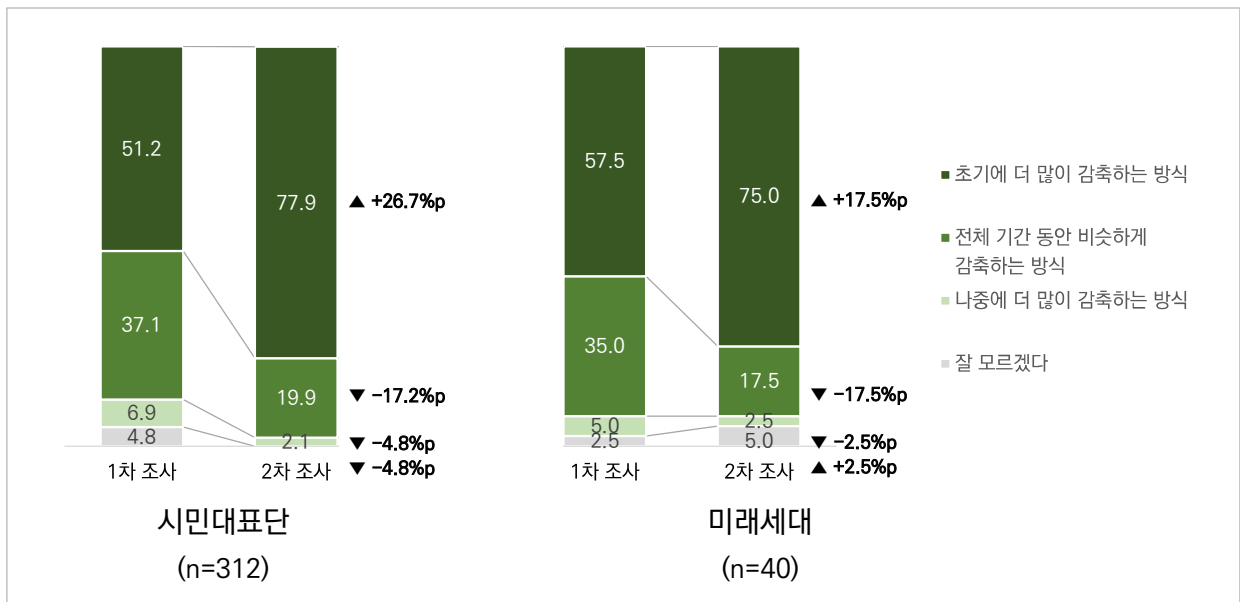
④ 잘 모르겠다

○ 최종 조사 결과

- 감축경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시민대표단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응답이 51.2%에서 77.9%로 크게 증가하고,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응답은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나, 감축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된 것으로 나타남.
- 미래세대는 숙의 이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응답이 57.5%에서 75.0%로 증가하며, 조기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모두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응답이 감소하고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이 증가한 공통된 흐름을 보이며, 이는 숙의 과정 전반에서 조기 감축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의제2 감축경로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응답 결과 비교]

(단위 : %)



[의제2 감축경로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응답 결과 비교]

(단위 : %)

구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잘 모르겠다
시민대표단 (n=312)	1차	51.2	37.1	6.9	4.8
	2차	77.9	19.9	2.1	0.0
	GAP	+26.7%p	-17.2%p	-4.8%p	-4.8%p
미래세대 (n=40)	1차	57.5	35.0	5.0	2.5
	2차	75.0	17.5	2.5	5.0
	GAP	+17.5%p	-17.5%p	-2.5%p	+2.5%p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의 감축경로 인식은 속의 전후로 변화가 나타나며,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응답이 1차(57.5%)에서 2차(75.0%)로 증가함.
- 반면,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응답은 1차(35.0%)에서 2차(17.5%)로 감소하여, 속의 이후 보다 선제적인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응답은 5.0%에서 2.5%로 소폭 감소한 가운데, '잘 모르겠다' 응답은 2.5%에서 5.0%로 증가하여 일부 응답에서 판단 유보 경향도 함께 나타남.

[의제2 감축경로 미래세대 응답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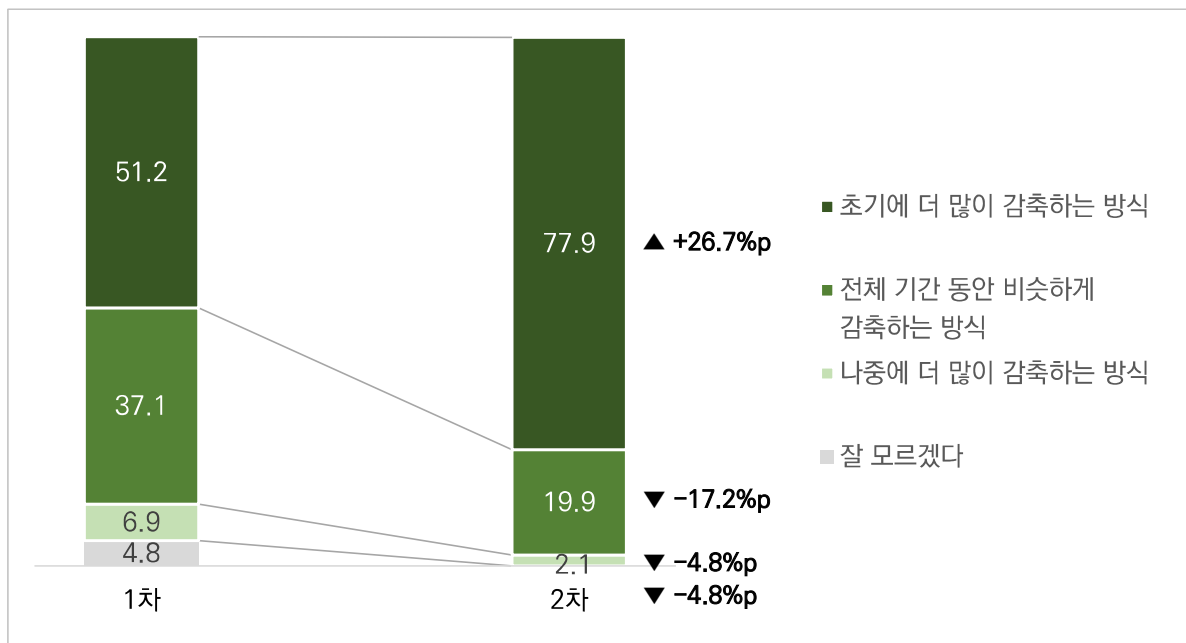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잘 모르겠다
1차 조사	(40)	57.5	35.0	5.0	2.5
2차 조사	(40)	75.0	17.5	2.5	5.0
GAP	(40)	+17.5%p	-17.5%p	-2.5%p	+2.5%p

○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

- 1차 조사에서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응답 비율이 51.2%,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응답 비율이 37.1%,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이 6.9%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에 응답함.
- 공론화 과정을 거친 2차 조사에서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의 응답 비율이 77.9%로 증가한 반면,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이 19.9%,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이 2.1%로 감소하여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에 응답한 비율이 증가함.
- 세부적으로,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의 응답은 26.7%p 증가하였고,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의 응답은 17.2%p 감소,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의 응답은 4.8%p 감소함.
-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4.8%(1차)에서 0.0%(2차)로 감소하여, 의견이 구체화 된 것으로 나타남.

[의제2 감축경로 조사 결과]

(n=312, 단위 : %)



○ 1차-2차 입장 변화 추이

- 1차에서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에 응답한 160명 중 130명(81.3%)은 2차에서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28명(17.5%)은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으로, 2명(1.3%)은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변경함.
- 1차에서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에 응답한 116명 중 26명(22.4%)은 2차에서도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87명(75%)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3명(2.6%)은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변경함.
- 1차에서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에 응답한 22명 중 1명(4.5%)은 2차에서도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15명(68.2%)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6명(27.3%)은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변경함.
- 1차에서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 15명 중 2차에서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이동한 응답자는 12명(80%),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으로 이동한 응답자는 2명(13.3%),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이동한 응답자는 1명(6.7%)임.

[의제2 1차 조사-2차 조사 의견 변화]

구분			2차 조사				전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잘 모르겠다	
1차 조사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명	130	28	2	-	160
		(%)	81.3%	17.5%	1.3%	-	100.0%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명	87	26	3	-	116
		(%)	75.0%	22.4%	2.6%	-	100.0%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명	15	6	1	-	22
		(%)	68.2%	27.3%	4.5%	-	100.0%
	잘 모르겠다	명	12	2	1	-	15
		(%)	80.0%	13.3%	6.7%	-	100.0%
	전체	명	244	62	7	-	313
		(%)	78.0%	19.8%	2.2%	-	100.0%

* 가중치로 인해 소수점 한자리 반올림 결과 합계가 313명으로 제시됨

○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분석

- 성별로는 남성(67.9%)과 여성(87.9%) 모두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에 응답한 비율이 높으나,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에 응답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음(27.9% vs. 12.1%).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60-69세(90.8%)와 70세 이상(83.9%)에서 특히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20-29세는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33.2%).
-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이 우세한 가운데, 인천/경기(84.0%), 대전/충청/강원(82.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한편, 광주/전라/제주는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비율이 가장 높음(30.0%).

[의제2 감축경로 응답자 특성별 표]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잘 모르겠다
전체		(312)	77.9	19.9	2.1	-
성별	남성	(155)	67.9	27.9	4.3	-
	여성	(157)	87.9	12.1	0.0	-
연령	15-19세	(16)	74.2	18.2	7.6	-
	20-29세	(39)	60.4	33.2	6.4	-
	30-39세	(45)	77.4	20.3	2.2	-
	40-49세	(51)	75.2	22.7	2.2	-
	50-59세	(59)	76.7	23.3	0.0	-
	60-69세	(54)	90.8	9.2	0.0	-
	70세 이상	(48)	83.9	14.4	1.7	-
권역	서울	(58)	77.0	23.0	0.0	-
	인천/경기	(101)	84.0	14.2	1.8	-
	대전/충청/강원	(43)	82.5	14.1	3.4	-
	광주/전라/제주	(34)	70.0	30.0	0.0	-
	대구/경북	(30)	69.6	24.8	5.6	-
	부산/울산/경남	(46)	72.9	23.5	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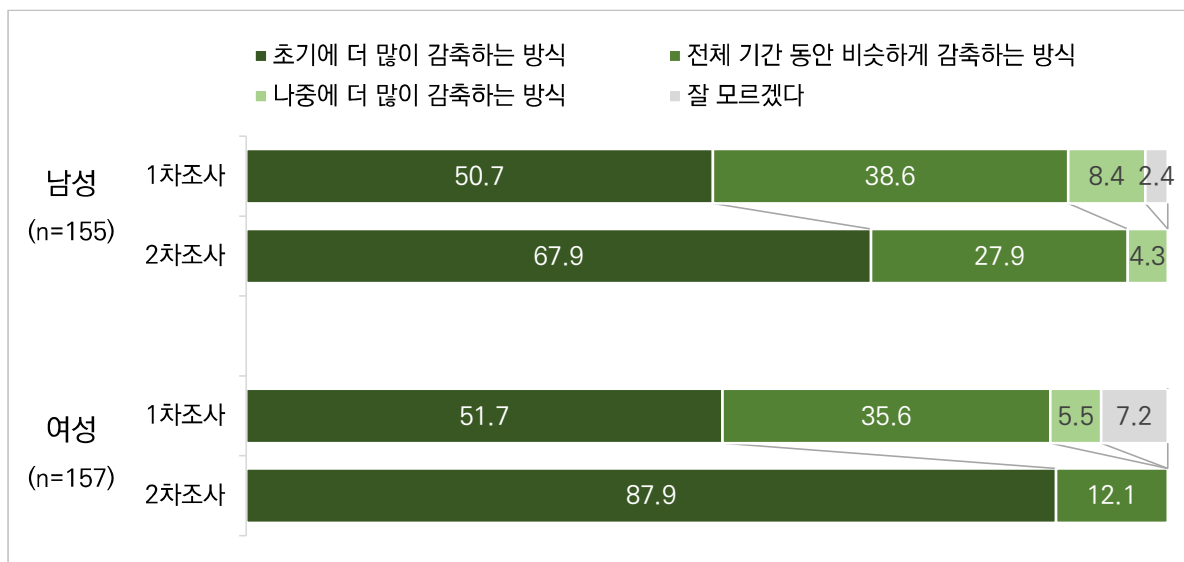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 의견 변화 분석

❖ 성별 의견 변화

- 남성은 1차 조사에서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50.7%)과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38.6%)이 비교적 혼재되어 나타났으나, 2차 조사에서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이 67.9%로 크게 증가하고,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은 감소(27.9%)함.
- 여성은 1차 조사에서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51.7%)이 과반 수준이었으나, 2차 조사에서는 해당 비율이 87.9%로 크게 증가함. 반면,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은 감소(35.6% → 12.1%)하고, '잘 모르겠다' 응답은 사라짐.

[성별에 따른 의제2 감축경로 의견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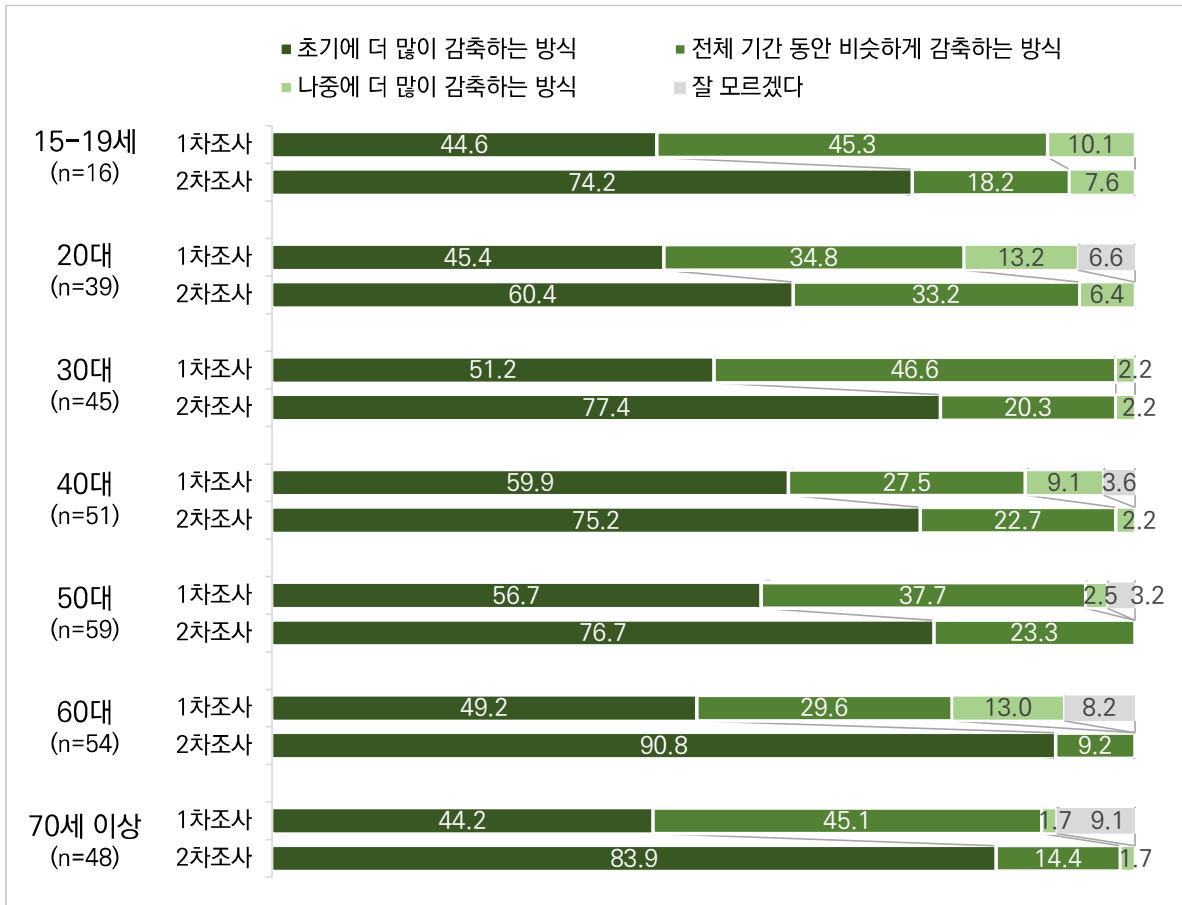


❖ 연령대별 의견 변화

- 전 연령대에서 1차 조사 대비 2차 조사에서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응답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며, 감축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경향을 보임.
- 15-19세는 1차 조사에서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44.6%)과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45.3%)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2차 조사에서는 '초기 감축' 비율이 74.2%로 크게 증가하며 뚜렷한 변화가 나타남.
- 20대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이 증가(45.4% → 60.4%)하는 동시에,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도 일정 수준 유지(34.8% → 33.2%)되어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의견 분산이 남아있는 특징을 보임.
- 30-50대는 2차 조사에서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이 70% 이상으로 상승(30대 77.4%, 40대 75.2%, 50대 76.7%)하며, 감축 시점을 보다 앞당기는 방향으로 변화함.
- 60대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이 90.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가장 강한 초기 감축 선호를 나타냄.
- 70세 이상은 1차 조사에서 의견이 비교적 분산되어 있었으나(초기 44.2%, 균등 45.1%), 2차 조사에서는 '초기 감축' 비율이 83.9%로 크게 증가하며 명확한 방향성을 형성함.

[연령에 따른 의제2 감축경로 의견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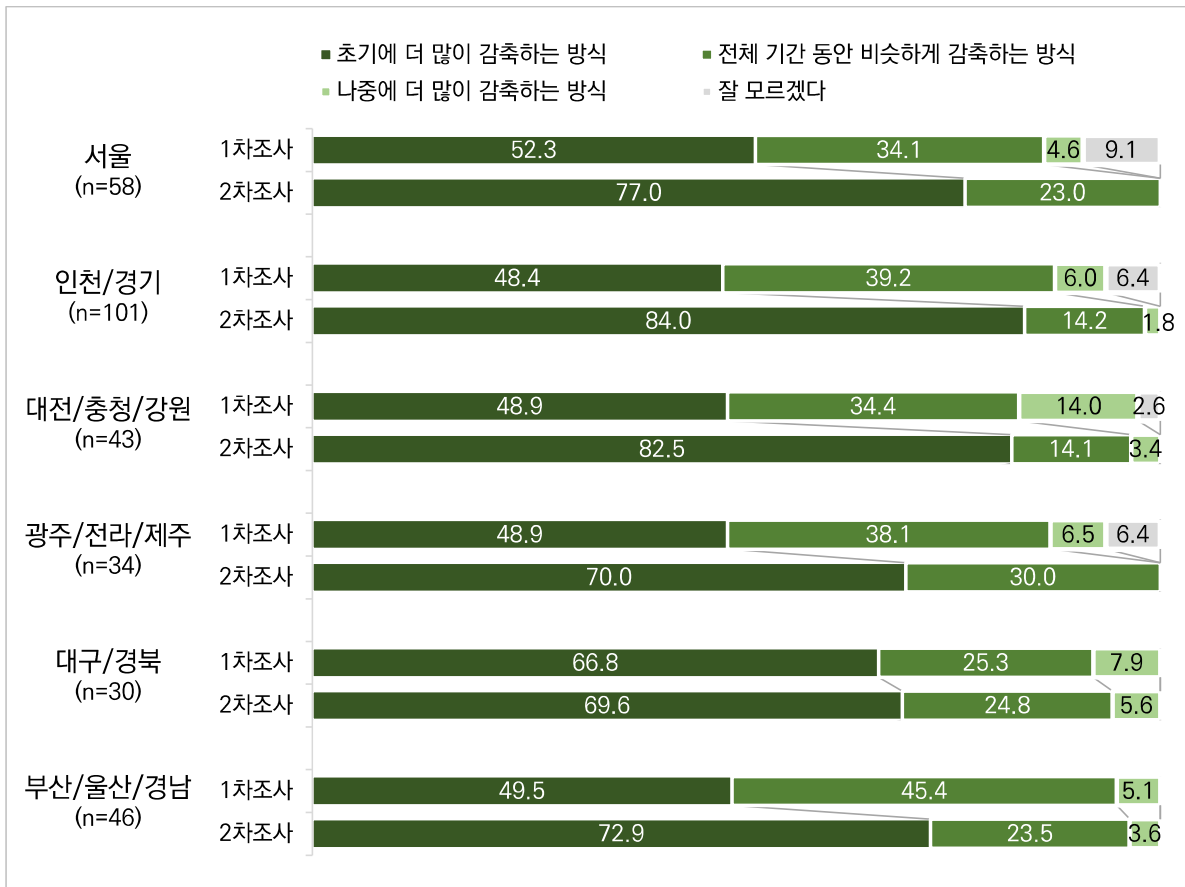


❖ 권역별 의견 변화

- 전 권역에서 1차 조사 대비 2차 조사에서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응답 비율이 증가하며, 감축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의견이 전반적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임.
- 서울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이 증가(52.3% → 77.0%)하고,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은 감소(34.1% → 23.0%)하며 초기 감축 선호가 강화됨.
- 인천/경기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이 84.0%까지 크게 상승하며, 전 권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초기 감축 선호를 보임.
- 대전/충청/강원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이 82.5%로 크게 증가하고,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은 감소(34.4% → 14.1%)하여 초기 감축 중심으로 변화함.
- 광주/전라/제주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이 증가(48.9% → 70.0%)하였으나,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비율이 30.0%로 타 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됨.
- 대구/경북은 1차 조사에서 이미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비율이 높은 수준(66.8%)이었으며, 2차 조사에서도 유사한 수준 유지(69.6%)로 의견 변화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부산/울산/경남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이 증가(49.5% → 72.9%)하고,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은 감소(45.4% → 23.5%)하여 초기 감축 선호로의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남.

[권역에 따른 의제2 감축경로 의견 변화]

(단위 : %)



3. 이행방안(의제3)

문3.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크게 규제 강화, 감축 지원, 전환 지원, 자원 확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음의 정책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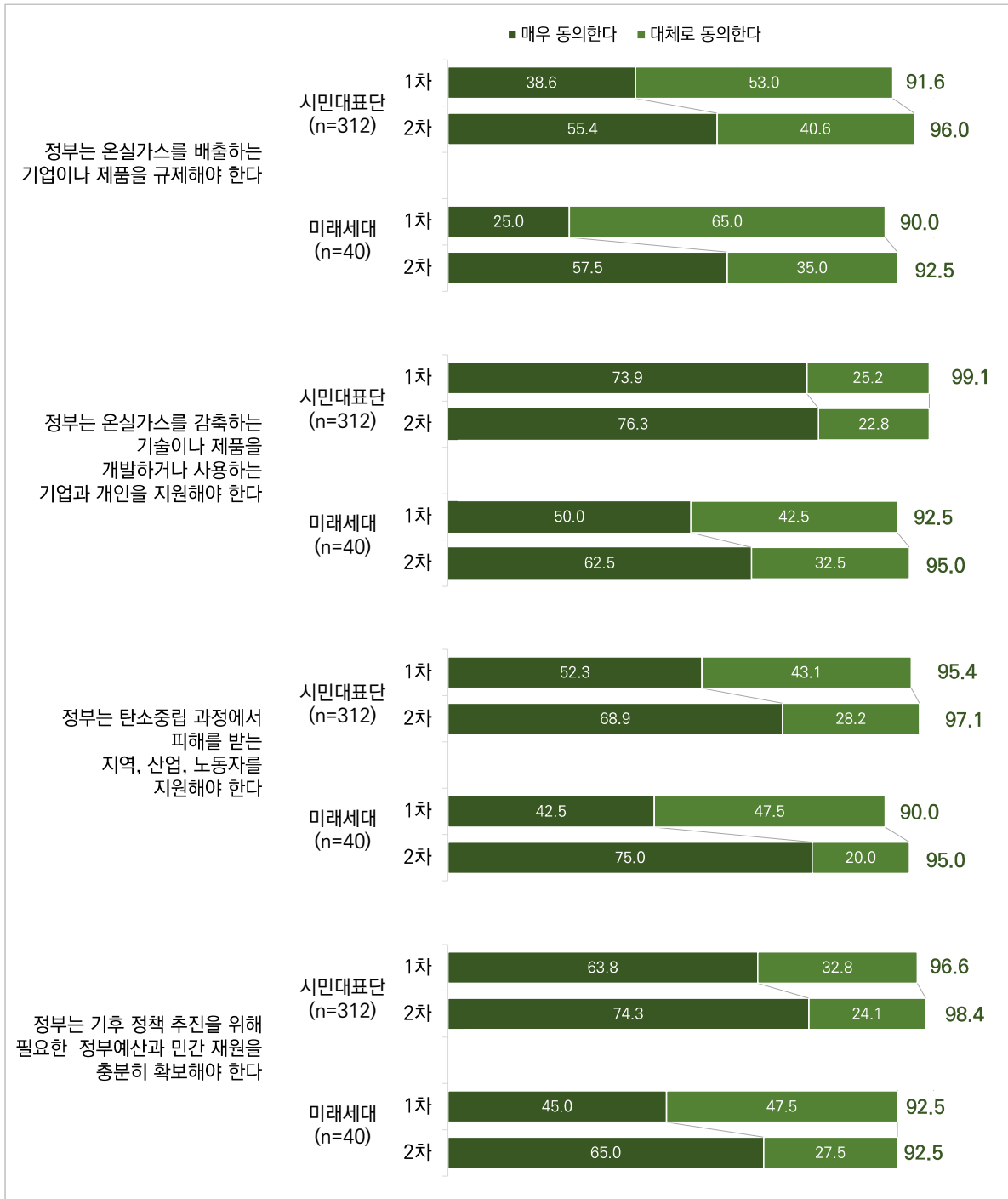
구 분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1)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제품을 규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정부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 산업,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부는 기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예산과 민간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최종 조사 결과

- 이행방안 인식을 살펴본 결과, 시민대표단은 모든 항목에서 1차 대비 2차 조사에서 ‘매우 동의한다’ 비율이 크게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동의 정도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미래세대 역시 모든 항목에서 ‘매우 동의한다’ 비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배출 규제 강화’(25.0%→57.5%), ‘전환 피해 지원’(42.5%→75.0%) 등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 시민대표단은 이미 높은 동의 수준(90% 이상)을 유지한 가운데 ‘대체로 동의’에서 ‘매우 동의’로 이동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 특히, 양 집단 모두 ‘기술 지원 확대’ 항목에서는 큰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자원 확보’와 ‘전환 피해 지원’ 항목에서는 동의 정도가 강화되는 공통된 흐름을 보임.
- 종합적으로,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모두 속의 이후 정책 필요성에 대한 동의 수준은 유지된 가운데, 동의의 정도가 ‘매우 동의’ 중심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의제3 이행방안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응답 결과 비교]

(단위 : %)



[의제3 이행방안 시민대표단 응답 결과]

(단위 : %)

구분	항목	동의정도	1차	2차	GAP
세부 의제1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제품을 규제해야 한다.	매우	38.6	55.4	+16.8%p
		대체로	53.0	40.6	-12.4%p
세부 의제2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해야 한다.	매우	73.9	76.3	+2.4%p
		대체로	25.2	22.8	-2.4%p
세부 의제3	정부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 산업,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	매우	52.3	68.9	+16.6%p
		대체로	43.1	28.2	-14.9%p
세부 의제4	정부는 기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예산과 민간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매우	63.8	74.3	+10.5%p
		대체로	32.8	24.1	-8.7%p

[의제3 이행방안 미래세대 응답 결과]

(단위 : %)

구분	항목	동의정도	1차	2차	GAP
세부 의제1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제품을 규제해야 한다.	매우	25.0	57.5	+32.5%p
		대체로	65.0	35.0	-30.0%p
세부 의제2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해야 한다.	매우	50.0	62.5	+12.5%p
		대체로	42.5	32.5	-10.0%p
세부 의제3	정부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 산업,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	매우	42.5	75.0	+32.5%p
		대체로	47.5	20.0	-27.5%p
세부 의제4	정부는 기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예산과 민간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매우	45.0	65.0	+20.0%p
		대체로	47.5	27.5	-20.0%p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의 이행방안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 항목에서 속의 전후 모두 90.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유지함.

[의제3 이행방안 미래세대 응답 비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온실가스 배출 기업·제품 규제 강화	온실가스 기술 개발·활용 지원 확대	탄소중립 전환 피해 지역·산업·노동자 지원	기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강화
1차 조사	(40)	90.0	92.5	90.0	92.5
2차 조사	(40)	92.5	95.0	95.0	92.5
GAP	(40)	+2.5%p	+2.5%p	+5.0%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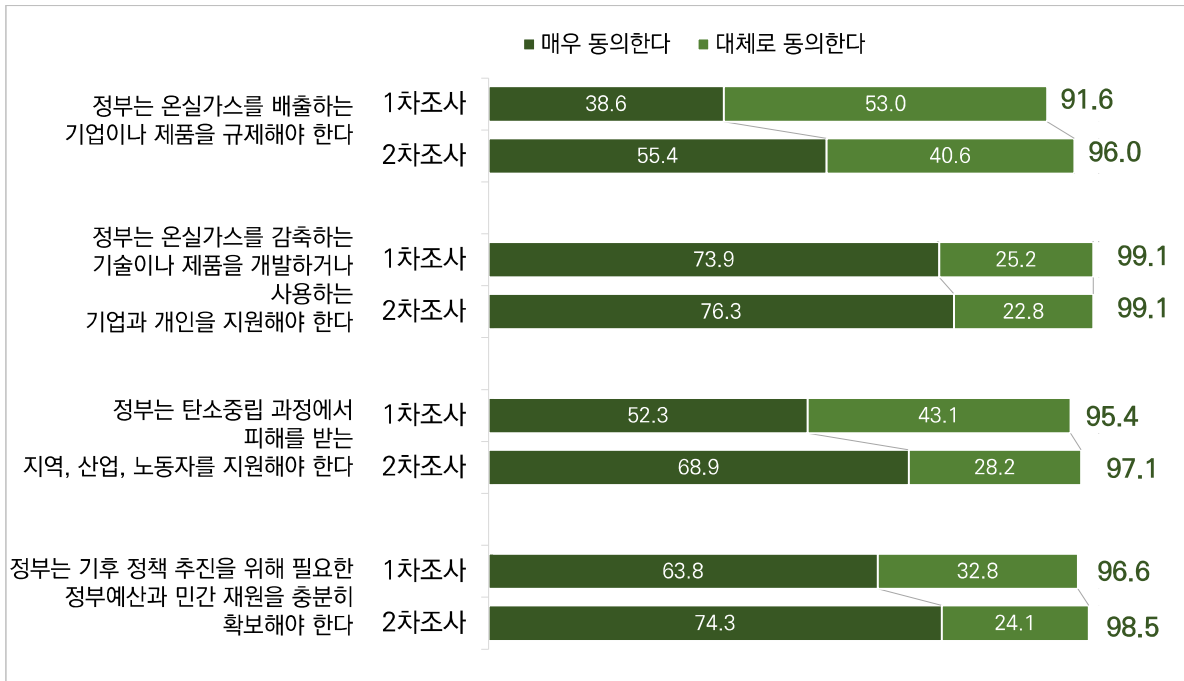
* 각 항목에 대한 동의한다(매우+대체로) 비율

○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

- 종합적으로, 1차 대비 2차 조사에서 모든 항목의 ‘매우 동의한다’ 비율이 증가하고 ‘대체로 동의한다’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속의 과정을 통해 정책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온실가스 배출 기업·제품 규제’ 항목은 ‘매우 동의’가 38.6%에서 55.4%로 16.8%p 증가하고 ‘대체로 동의’는 53.0%에서 40.6%로 감소하여 동의 정도가 뚜렷하게 강화됨.
-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활용 지원’은 ‘매우 동의’가 73.9%에서 76.3%로 2.4%p 증가하고 ‘대체로 동의’가 감소하여, 이미 높은 수준에서 동의 정도가 소폭 강화되는 양상을 보임.
- ‘탄소중립 전환 피해 지원’은 ‘매우 동의’가 52.3%에서 68.9%로 16.6%p 증가하고 ‘대체로 동의’는 43.1%에서 28.2%로 감소하여, ‘매우 동의’ 중심으로의 이동이 크게 나타남.
- ‘기후정책 자원 확보’ 역시 ‘매우 동의’가 63.8%에서 74.3%로 10.5%p 증가하고 ‘대체로 동의’가 감소하여, 정책 실행 기반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

[의제3 이행방안 조사 결과]

(n=312, 단위 : %)



○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분석

-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동의 비율을 나타냄. 특히 '온실가스 배출 기업·제품 규제 강화'에서 여성(99.4%)이 남성(92.6%)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50~59세는 모든 항목에서 100.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60~69세 역시 대부분 항목에서 100.0%로 매우 높은 동의 경향을 나타냄. 반면, 15~19세와 20~29세는 일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 수준이 다소 낮은 경향이 확인됨.
- 권역별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광주/전라/제주와 부산/울산/경남은 다수 항목에서 100.0%를 기록하며 높은 동의 수준을 나타냄. 반면, 대구/경북은 '규제 강화'(91.0%)와 '자원 확보'(94.4%) 등 일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지역 간 차이가 일부 확인됨.

[의제3 이행방안 응답자 특성별 표]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온실가스 배출 기업·제품 규제 강화	온실가스 기술 개발·활용 지원 확대	탄소중립 전환 피해 지역 ·산업·노동자 지원	기후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강화
전체		(312)	96.0	99.1	97.1	98.5
성별	남성	(155)	92.6	98.6	96.3	97.6
	여성	(157)	99.4	99.6	98.0	99.3
연령	15-19세	(16)	88.8	100.0	100.0	95.8
	20-29세	(39)	91.4	96.1	91.9	97.8
	30-39세	(45)	92.5	96.9	94.7	95.2
	40-49세	(51)	95.8	100.0	98.1	100.0
	50-59세	(59)	100.0	100.0	100.0	100.0
	60-69세	(54)	96.7	100.0	100.0	100.0
	70세 이상	(48)	100.0	100.0	94.9	97.6
권역	서울	(58)	98.3	98.9	97.2	98.0
	인천/경기	(101)	94.3	97.8	96.8	98.0
	대전/충청/강원	(43)	97.1	100.0	96.5	100.0
	광주/전라/제주	(34)	100.0	100.0	95.3	100.0
	대구/경북	(30)	91.0	100.0	96.6	94.4
	부산/울산/경남	(46)	96.3	100.0	100.0	100.0

* 각 항목에 대한 동의한다(매우+대체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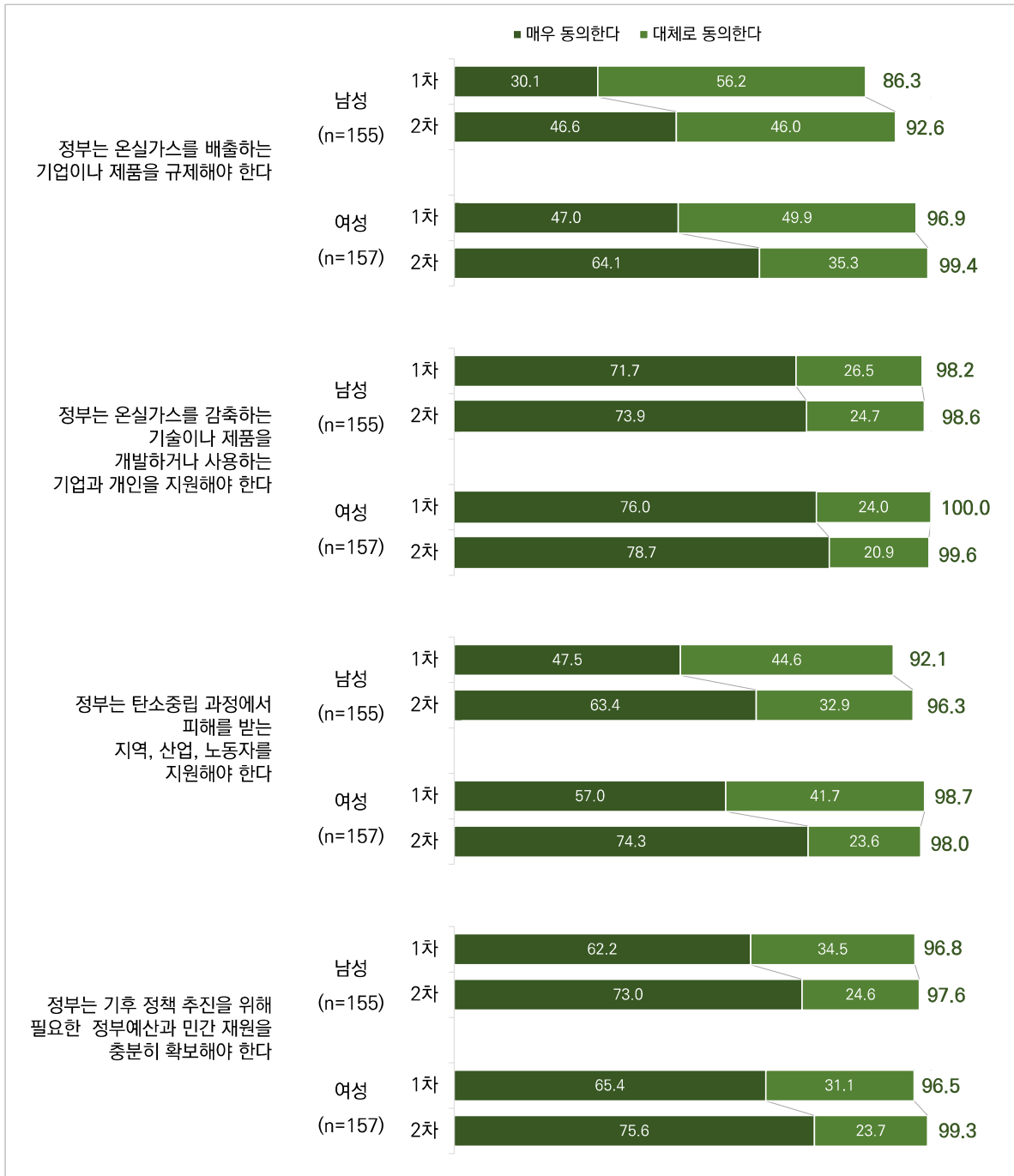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 의견 변화 분석

❖ 성별 의견 변화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1차 대비 2차 조사의 전 항목에서 ‘매우 동의한다’ 비율이 증가하고 ‘대체로 동의한다’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동의 정도가 강화됨.
- 남성은 ‘온실가스 배출 기업·제품 규제’ 항목에서 ‘매우 동의’가 30.1%에서 46.6%로 16.5%p 증가하고, ‘탄소중립 과정 피해 지원’ 항목도 47.5%에서 63.4%로 15.9%p 증가하는 등 ‘대체로 동의’에서 ‘매우 동의’로의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남.
- 여성 역시 모든 항목에서 ‘매우 동의’ 비율이 상승한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기업·제품 규제’는 47.0%에서 64.1%로 17.1%p, ‘재원 확보’는 65.4%에서 75.6%로 10.2%p 증가하는 등 동의 정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임.
- 전반적으로 여성은 초기부터 높은 동의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매우 동의’ 중심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성은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나 성별 간 격차가 일부 축소되는 특징을 보임.

[성별에 따른 의제3 이행방안 의견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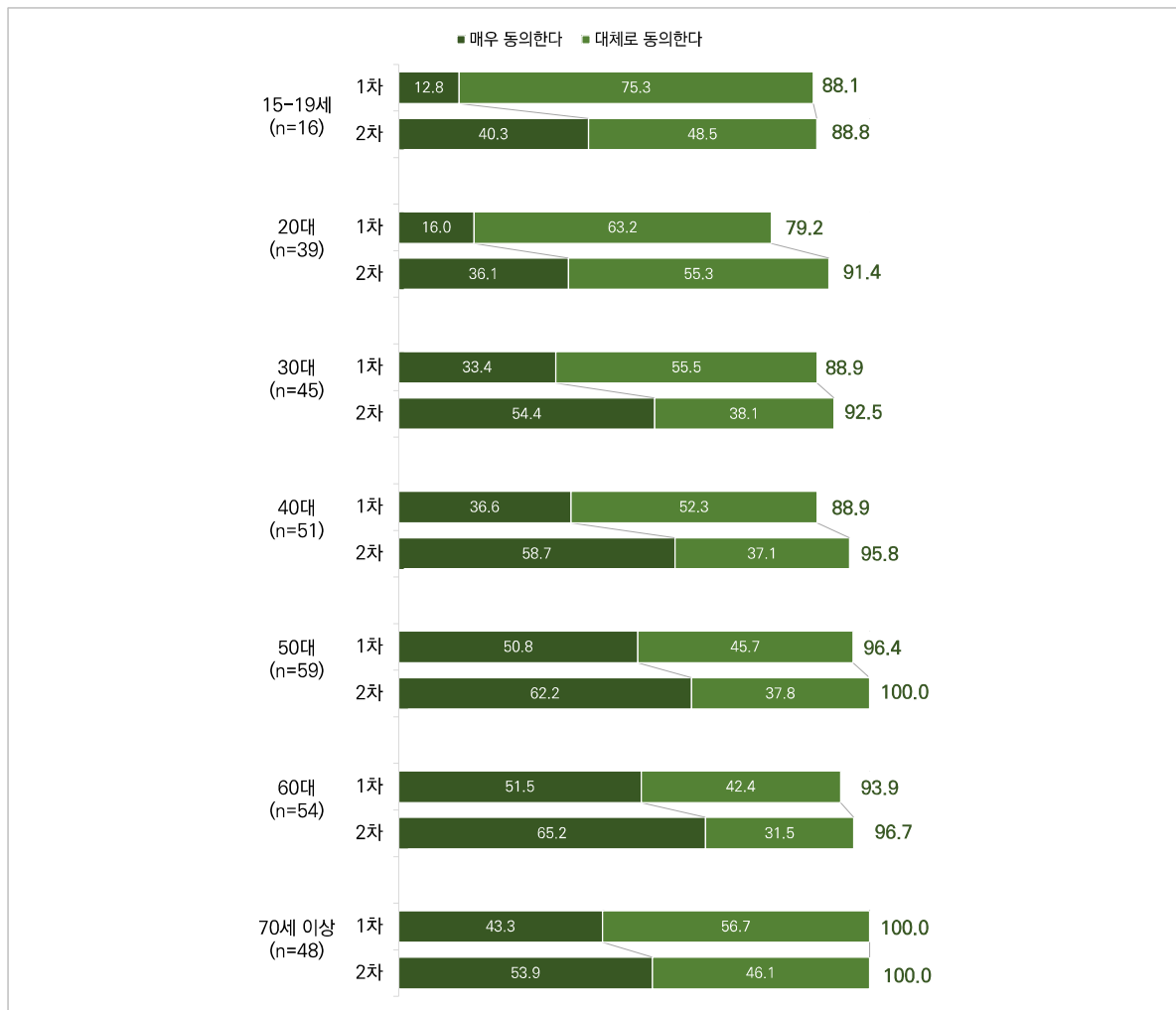
❖ 연령대별 의견 변화

① 온실가스 배출 기업·제품 규제 강화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1차 대비 2차 조사의 ‘매우 동의한다’ 비율이 증가하고 ‘대체로 동의한다’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동의 정도가 강화됨.
- 특히 15-19세는 ‘매우 동의’가 12.8%에서 40.3%로 27.5%p, 20대는 16.0%에서 36.1%로 20.1%p, 30대는 33.4%에서 54.4%로 21.0%p 증가하여 ‘대체로 동의’에서 ‘매우 동의’로의 이동이 크게 나타남.
- 40대, 50대, 60대에서도 각각 36.6%→58.7%(22.1%p), 50.8%→62.2%(11.4%p), 51.5%→65.2%(13.7%p)로 ‘매우 동의’ 비율이 증가하며 높은 수준에서 동의 정도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임.
- 반면 70세 이상은 ‘매우 동의’가 43.3%→53.9%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대체로 동의’ 비중이 일정 부분 유지되는 특징을 보임.

[연령에 따른 의제3 이행방안 의견 변화 ① 온실가스 배출 기업·제품 규제 강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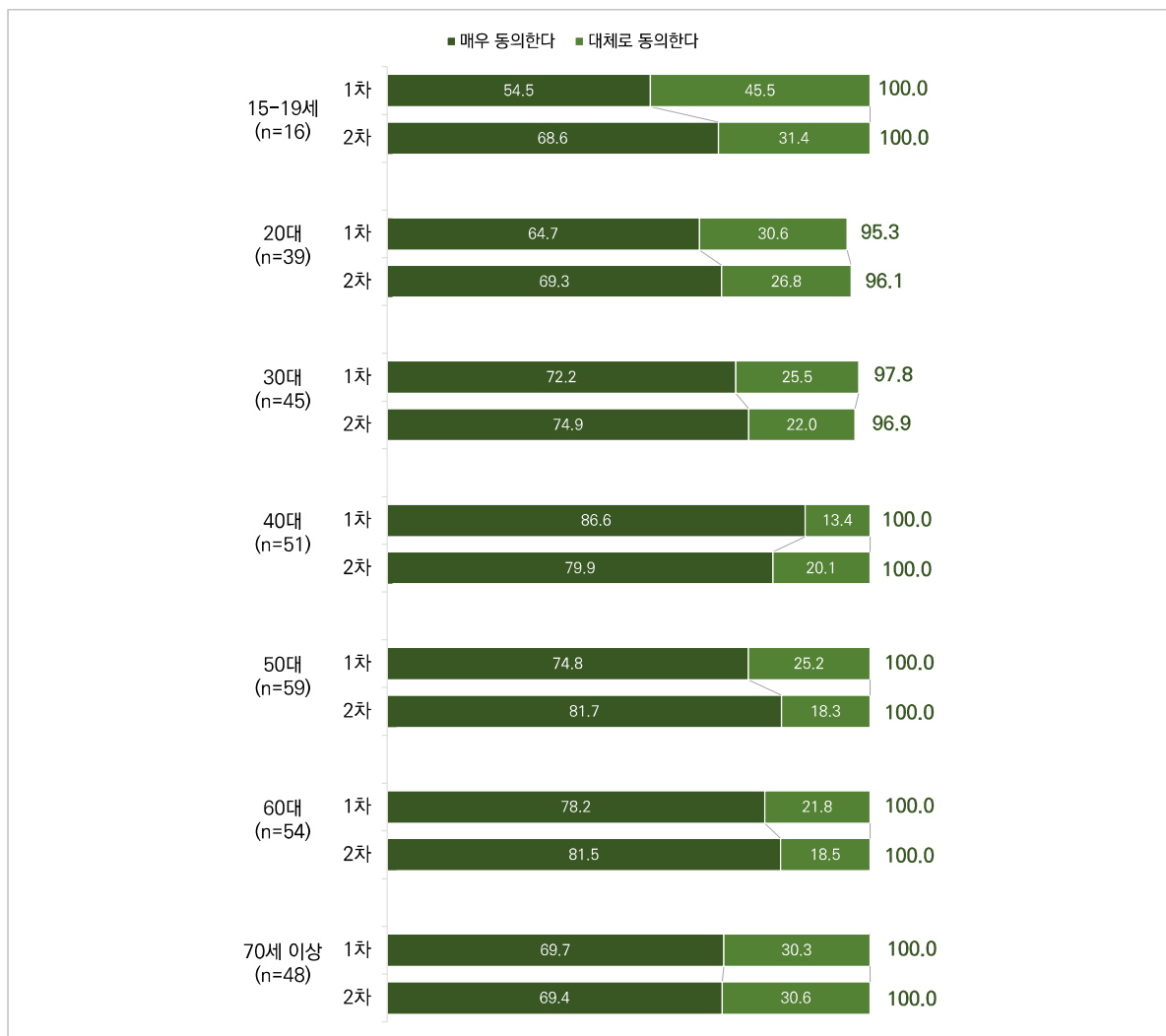


② 온실가스 기술 개발·활용 지원 확대

-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1차 대비 2차 조사의 '매우 동의한다' 비율이 증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대체로 동의한다'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동의 수준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연령대에서 동의가 강화됨.
- 특히 15-19세는 '매우 동의'가 54.5%에서 68.6%로 14.1%p, 20대는 64.7%에서 69.3%로 4.6%p 증가하여 '대체로 동의'에서 '매우 동의'로의 이동이 나타남.
- 50대와 60대에서도 각각 74.8%→81.7%(6.9%p), 78.2%→81.5%(3.3%p)로 '매우 동의' 비율이 증가하며 높은 수준에서 동의 정도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임.
- 반면 40대는 '매우 동의'가 86.6%에서 79.9%로 감소하고 '대체로 동의'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 일부 연령대에서는 동의 정도가 완화되는 경향이 확인됨.

[연령에 따른 의제3 이행방안 의견 변화 ② 온실가스 기술 개발·활용 지원 확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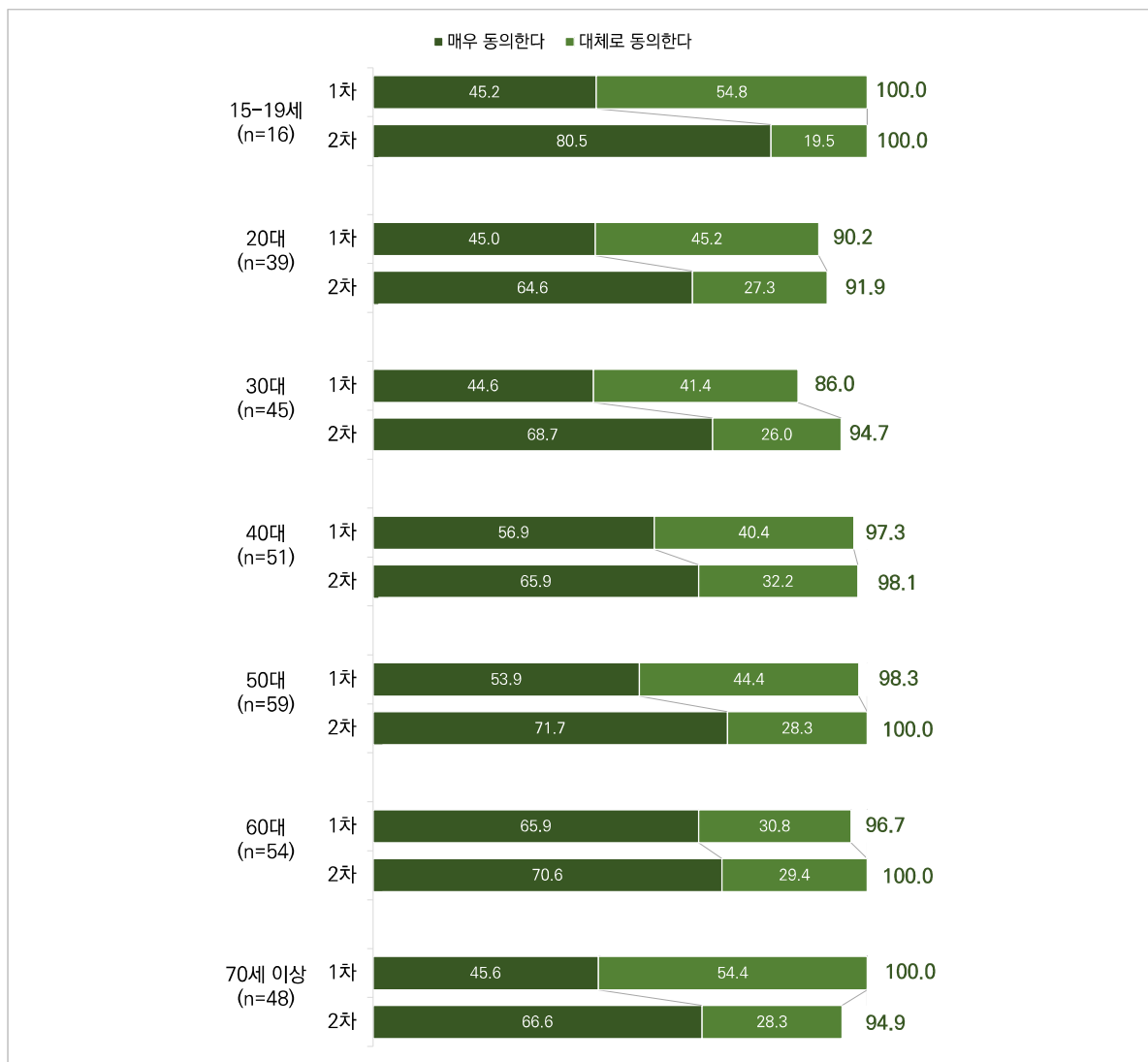


③ 탄소중립 전환 피해 지역·산업·노동자 지원

- 전 연령대에서 1차 대비 2차 조사에서 ‘매우 동의한다’ 비율이 증가하고 ‘대체로 동의한다’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동의 정도가 강화됨.
- 특히 20대는 ‘매우 동의’가 45.0%에서 64.6%로 19.6%p, 30대는 44.6%에서 68.7%로 24.1%p 증가하여 ‘대체로 동의’에서 ‘매우 동의’로의 이동이 크게 나타남.
- 4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56.9%→65.9%(9.0%p), 53.9%→71.7%(17.8%p)로 ‘매우 동의’ 비율이 증가하며 높은 수준에서 동의 정도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임.
- 한편 60대와 70세 이상에서도 ‘매우 동의’ 비율이 각각 65.9%→70.6%, 45.6%→66.6%로 증가하여, 전 연령대에서 전반적인 동의 정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확인됨.

[연령에 따른 의제3 이행방안 의견 변화 ③ 탄소중립 전환 피해 지역·산업·노동자 지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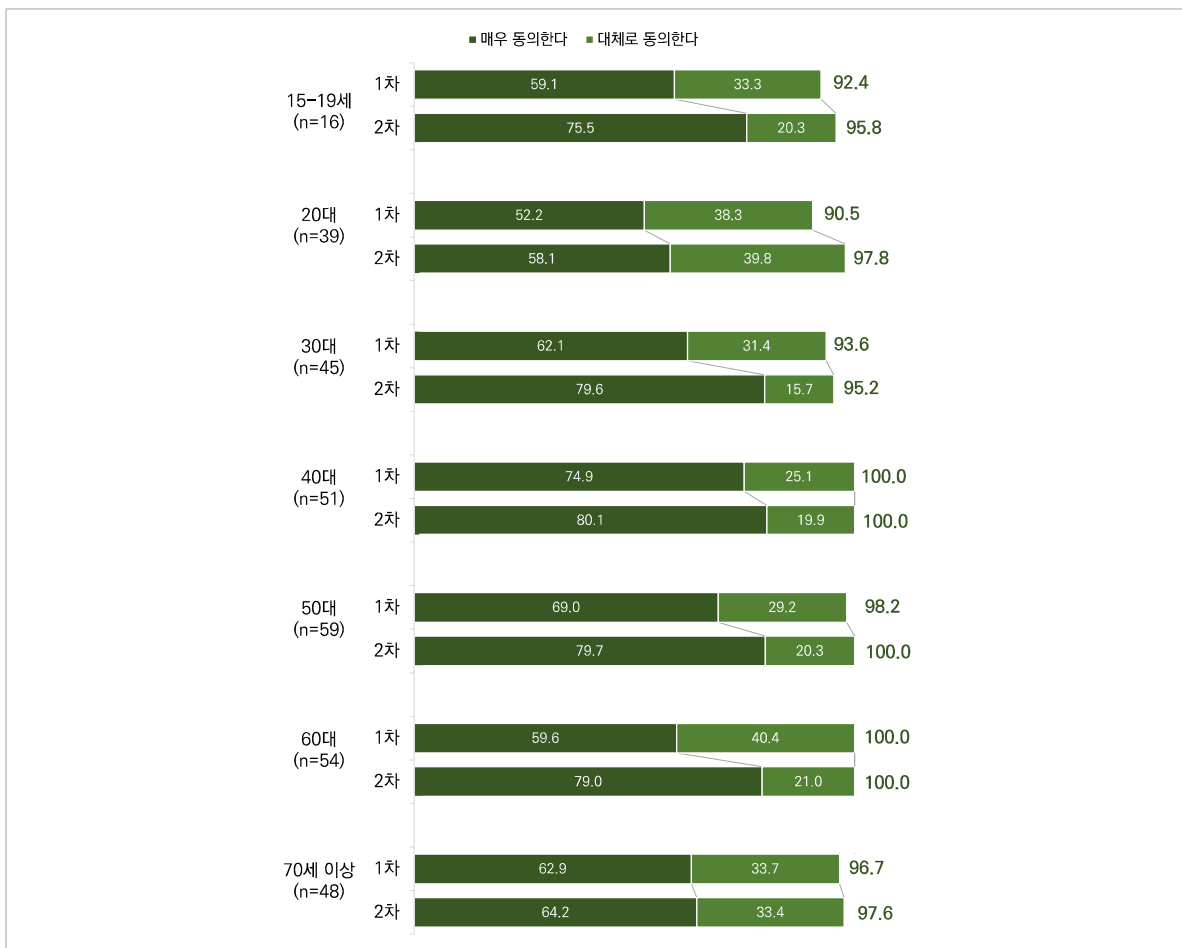


④ 기후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강화

-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1차 대비 2차 조사의 '매우 동의한다' 비율이 증가하고 '대체로 동의한다'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동의 정도가 강화됨.
- 특히 30대는 '매우 동의'가 62.1%에서 79.6%로 17.5%p, 15-19세는 59.1%에서 75.5%로 16.4%p 증가하여 '대체로 동의'에서 '매우 동의'로의 이동이 크게 나타남.
- 20대 역시 '매우 동의'가 52.2%에서 58.1%로 5.9%p 증가하며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임
- 50대와 60대에서도 각각 69.0%→79.7%(10.7%p), 59.6%→79.0%(19.4%p)로 '매우 동의' 비율이 증가하며 높은 수준에서 동의 정도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임.
- 한편 40대와 70세 이상은 '매우 동의'가 각각 74.9%→80.1%, 62.9%→64.2%로 증가하여 전반적인 상승 흐름 속에서 비교적 완만한 변화를 보임.

[연령에 따른 의제3 이행방안 의견 변화 ④ 기후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강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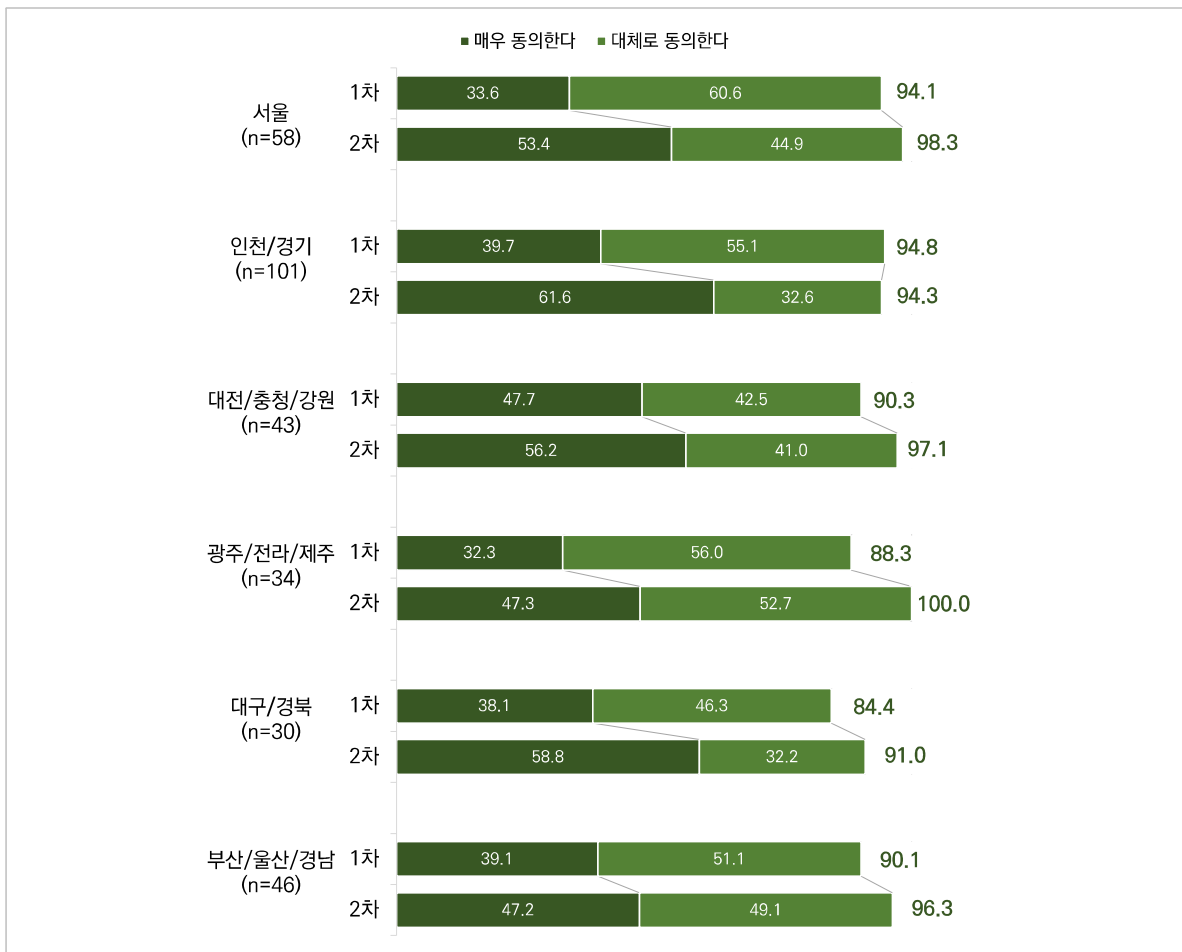
❖ 권역별 의견 변화

① 온실가스 배출 기업·제품 규제 강화

-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1차 대비 2차 조사의 ‘매우 동의한다’ 비율이 증가하고 ‘대체로 동의한다’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동의 정도가 강화됨.
- 특히 인천/경기(39.7%→61.6%, 21.9%p)와 대구/경북(38.1%→58.8%, 20.7%p), 서울(33.6%→53.4%, 19.8%p) 순으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 ‘대체로 동의’에서 ‘매우 동의’로의 이동이 두드러짐.
- 이어 광주/전라/제주(32.3%→47.3%, +15.0%p)에서도 증가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대전/충청/강원(47.7%→56.2%, 8.5%p)과 부산/울산/경남(39.1%→47.2%, 8.1%p)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를 보임.
- 종합적으로 모든 권역에서 공통적으로 ‘매우 동의’ 비율이 확대되며, 지역 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동의 강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확인됨.

[권역에 따른 의제3 이행방안 의견 변화 ① 온실가스 배출 기업·제품 규제 강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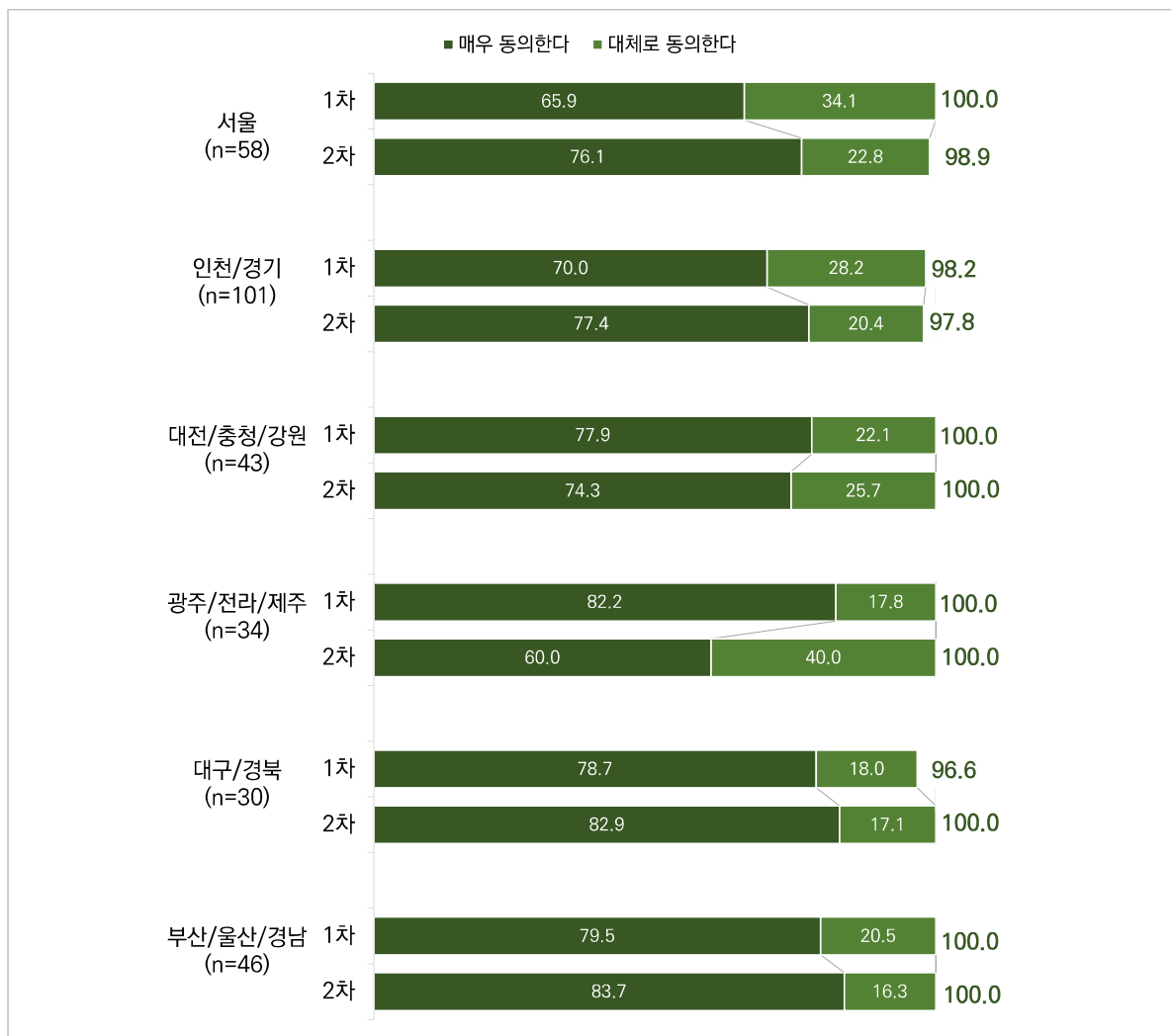


② 온실가스 기술 개발·활용 지원 확대

- 권역별로는 전반적으로 높은 동의 수준이 유지되는 가운데, 서울(65.9%→76.1%, 10.2%p), 인천/경기(70.0%→77.4%, 7.4%p), 대구/경북(78.7%→82.9%, 4.2%p), 부산/울산/경남(79.5%→83.7%, 4.2%p)에서 ‘매우 동의’ 비율이 증가하며 동의 강도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광주/전라/제주(82.2%→60.0%, 22.2%p)는 ‘매우 동의’ 비율이 감소하고 ‘대체로 동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 타 권역과 달리 동의 강도가 다소 완화되는 특징을 보임.
- 한편, 대전/충청/강원은 전체 동의 수준(100.0%)을 유지한 가운데 ‘매우 동의’ 비율이 소폭 감소(77.9%→74.3%)하며 ‘대체로 동의’로 일부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남.
- 종합적으로, 대부분 권역에서는 ‘대체로 동의’에서 ‘매우 동의’로 이동하며 동의 강도가 강화된 반면, 일부 권역에서는 동의 강도의 재분포가 나타나는 차별적 양상이 확인됨

[권역에 따른 의제3 이행방안 의견 변화 ② 온실가스 기술 개발·활용 지원 확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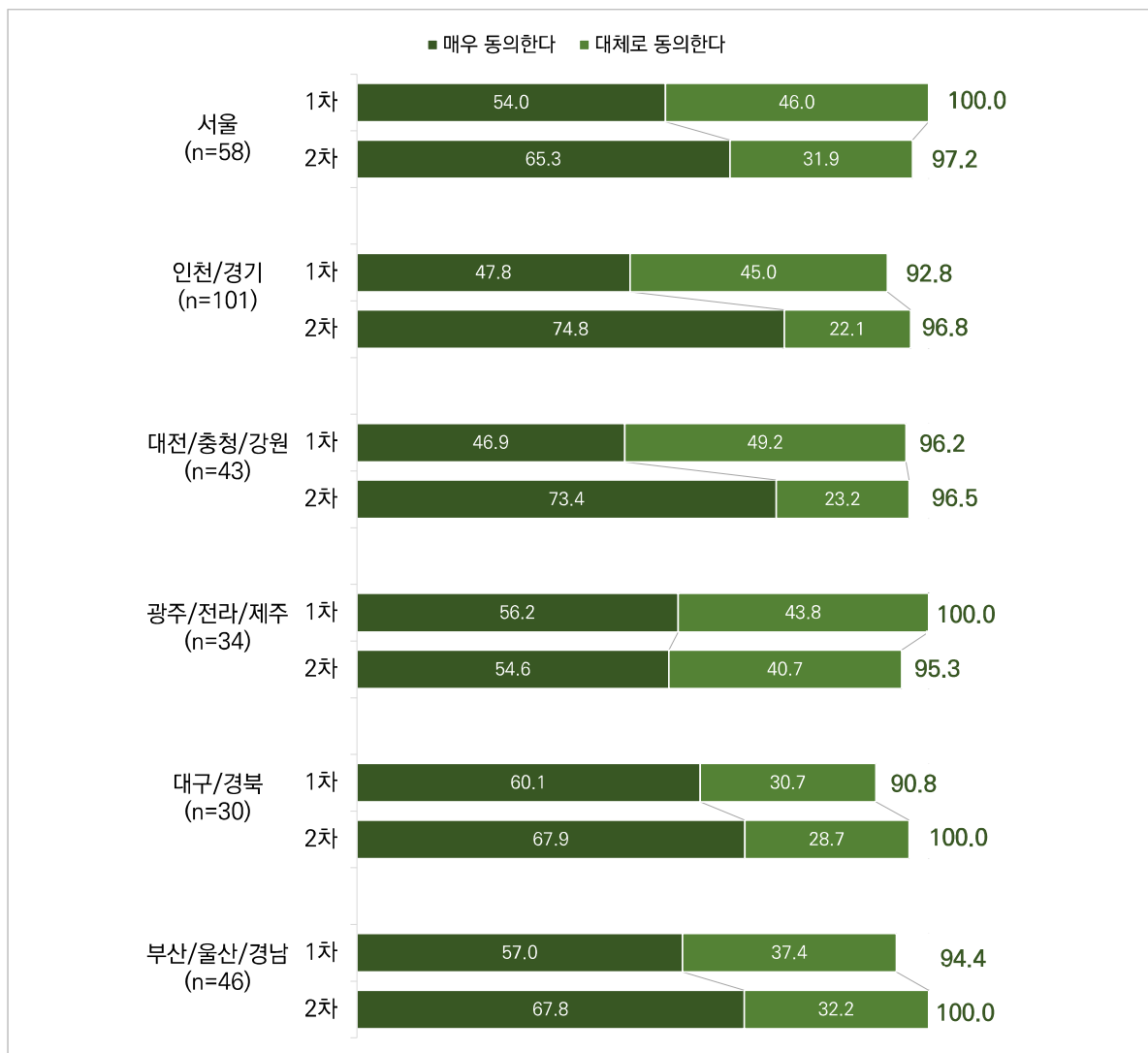


③ 탄소중립 전환 피해 지역·산업·노동자 지원

- 권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1차 대비 2차 조사에서 ‘매우 동의한다’ 비율이 증가하고 ‘대체로 동의한다’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동의 정도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인천/경기(47.8%→74.8%, 27.0%p)와 대전/충청/강원(46.9%→73.4%, 26.5%p)에서 ‘매우 동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며, ‘대체로 동의’에서 ‘매우 동의’로의 이동이 두드러짐.
- 또한 대구/경북(60.1%→67.9%, 7.8%p)과 부산/울산/경남(57.0%→67.8%, 10.8%p)에서도 ‘매우 동의’ 비율이 증가하며, 2차 조사에서 전체 동의 비율이 100.0%에 도달하는 등 높은 동의 수준이 유지됨.
- 반면 서울(54.0%→65.3%)은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을 보였으며, 광주/전라/제주(56.2%→54.6%)는 ‘매우 동의’ 비율이 소폭 감소하며 권역 간 차이가 일부 나타남.

[권역에 따른 의제3 이행방안 의견 변화 ③ 탄소중립 전환 피해 지역·산업·노동자 지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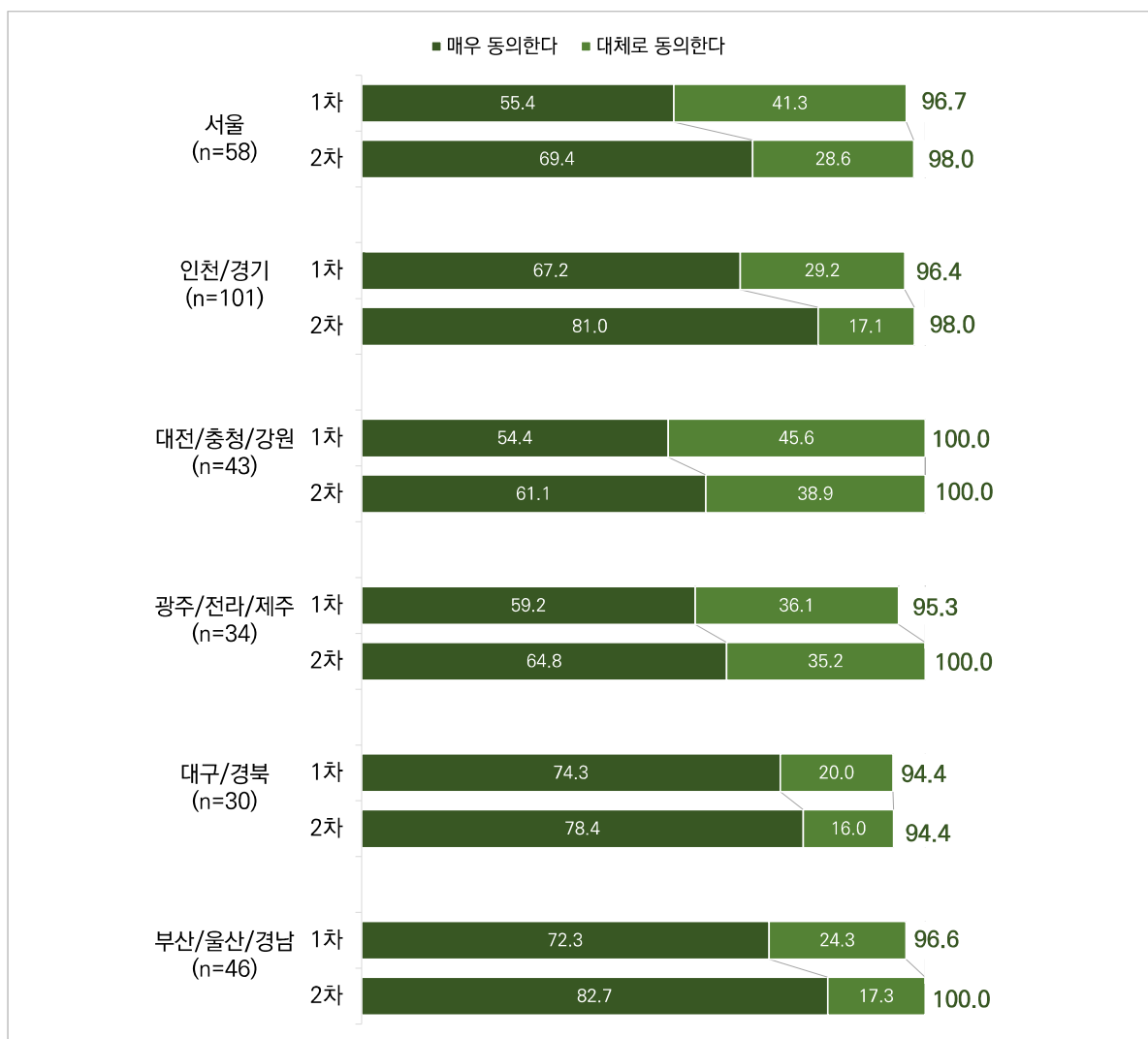


④ 기후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강화

- 모든 권역에서 1차 대비 2차 조사의 '매우 동의한다' 비율이 증가하고 '대체로 동의한다'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동의 정도가 강화됨.
- 특히 서울은 '매우 동의'가 55.4%에서 69.4%로 14.0%p, 인천/경기는 67.2%에서 81.0%로 13.8%p 증가하여 '대체로 동의'에서 '매우 동의'로의 이동이 나타남.
- 광주/전라/제주와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각각 59.2%→64.8%(5.6%p), 72.3%→82.7%(10.4%p)로 '매우 동의' 비율이 증가하며 동의 정도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임.
- 한편 대전/충청/강원과 대구/경북은 1차와 2차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권역을 중심으로 '매우 동의' 비율의 증가 폭 차이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권역에 따른 의제3 이행방안 의견 변화 ④ 기후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강화]

(단위 : %)



2절

기후위기 대응 관련 인식

1. 기후위기 인식

문4.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종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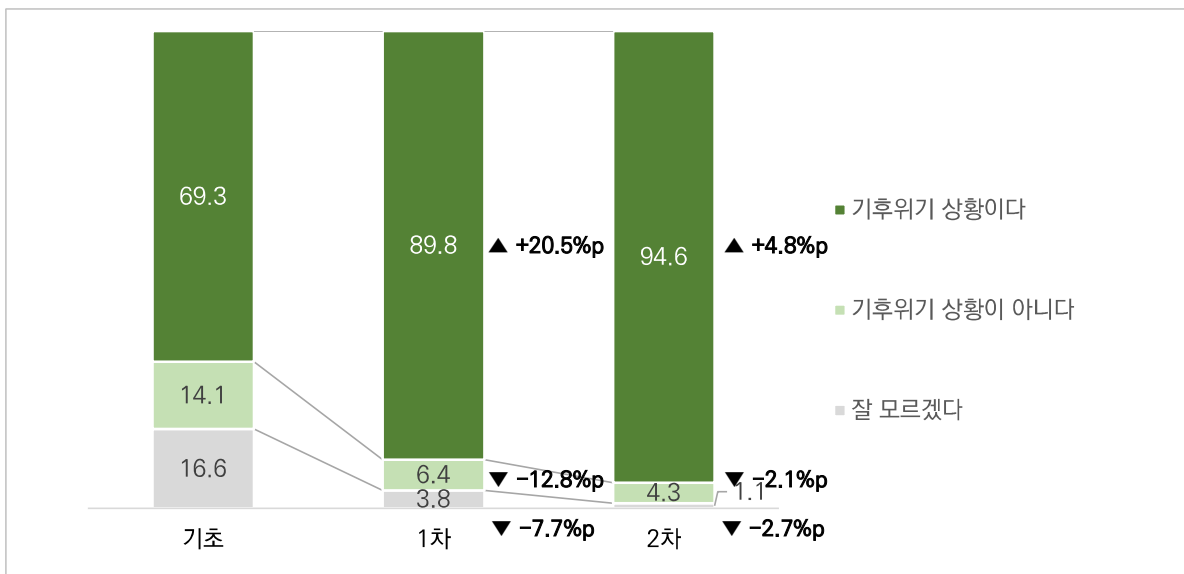
- ‘기후위기 상황이다’라는 인식이 94.6%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현재를 기후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

- ‘기후위기 상황이다’라는 인식은 기초조사 69.3% → 1차 89.8% → 2차 94.6%로 지속 상승하여, 속의 과정 전반에 걸쳐 기후위기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기초조사 16.6% → 1차 3.8% → 2차 1.1%로 크게 감소하여, 속의 과정을 통해 인식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남.

[기후위기 인식]

(n=312, 단위 : %)



○ 기초조사-2차 의견 변화 추이

- 기초조사에서 '기후위기 상황이다'라고 응답한 216명 중 210명(97.2%)은 2차 조사에서도 '기후위기 상황이다'로 응답하였으며, 5명(2.3%)은 '기후위기 상황이 아니다'로, 1명(0.5%)은 '모름'으로 응답함.
- 기초조사에서 '기후위기 상황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44명 중 37명(84.1%)은 2차 조사에서 '기후위기 상황이다'로 응답하였으며, 6명(13.6%)은 '기후위기 상황이 아니다'로, 1명(2.3%)은 '모름'으로 응답함.
- 기초조사에서 '모름'을 선택한 52명 중 2차 조사에서 '기후위기 상황이다'로 이동한 응답자는 48명(92.3%), '기후위기 상황이 아니다'로 이동한 응답자는 2명(3.8%), '모름'을 유지한 응답자는 2명(3.8%)임.

[기후위기 인식 기초조사-2차 조사 의견 변화]

구분		2차 조사			전체	
		기후위기 상황이다	기후위기 상황이 아니다	모름		
기초 조사	기후위기 상황이다	명	210	5	1	216
		(%)	97.2%	2.3%	0.5%	100.0%
	기후위기 상황이 아니다	명	37	6	1	44
		(%)	84.1%	13.6%	2.3%	100.0%
	모름	명	48	2	2	52
		(%)	92.3%	3.8%	3.8%	100.0%
전체		명	295	13	4	312
		(%)	94.6%	4.2%	1.3%	100.0%

○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분석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기후위기 상황이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성(95.8%)이 남성(93.4%)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기후위기 상황이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30~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각각 97.8%, 97.8%)을 보이며, 70세 이상(91.0%)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임.
- 권역별로는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상황이다’는 인식이 높은 가운데, 서울(99.1%)이 가장 높고, 광주/전라/제주(87.1%)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지역 간 차이가 일부 존재함.

[기후위기 인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기후위기 상황이다	기후위기 상황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체		(312)	94.6	4.3	1.1
성별	남성	(155)	93.4	5.4	1.2
	여성	(157)	95.8	3.2	1.0
연령	15-19세	(16)	93.2	3.5	3.4
	20-29세	(39)	93.6	6.4	0.0
	30-39세	(45)	97.8	2.2	0.0
	40-49세	(51)	97.8	2.2	0.0
	50-59세	(59)	95.4	2.4	2.2
	60-69세	(54)	92.6	7.4	0.0
	70세 이상	(48)	91.0	5.7	3.3
권역	서울	(58)	99.1	0.0	0.9
	인천/경기	(101)	93.9	4.9	1.3
	대전/충청/강원	(43)	93.2	6.8	0.0
	광주/전라/제주	(34)	87.1	8.2	4.7
	대구/경북	(30)	96.6	3.4	0.0
	부산/울산/경남	(46)	96.4	3.6	0.0

○ 응답자 특성별 의견 변화

- 남녀 모두 차수가 진행될수록 '기후위기 상황이다'는 인식이 상승한 가운데, 여성은 기초조사(72.3%) 대비 2차(95.8%)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남성 또한 기초조사(66.2%) 대비 2차(93.4%)로 크게 상승함.
-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차수가 진행될수록 '기후위기 상황이다'는 인식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30~50대에서 2차 조사 기준 95%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으로 수렴하였으며, 70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거나(91.0%)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임.
-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차수가 진행될수록 '기후위기 상황이다'는 인식이 상승한 가운데, 서울(82.4%→99.1%), 부산/울산/경남(74.4%→96.4%) 등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광주/전라/제주(54.7%→87.1%)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거나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기후위기 인식 차수별 응답 GAP]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기초조사				1차				2차				
		기후 위기 상황임 (A)	기후 위기 상황 아님 (B)	모름	GAP (A-B)	기후 위기 상황임 (A)	기후 위기 상황 아님 (B)	모름	GAP (A-B)	기후 위기 상황임 (A)	기후 위기 상황 아님 (B)	모름	GAP (A-B)	
전체	(312)	69.3	14.1	16.6	55.2	89.8	6.4	3.8	83.4	94.6	4.3	1.1	90.3	
성별	남성	(155)	66.2	17.7	16.1	48.5	84.2	10.9	4.9	73.3	93.4	5.4	1.2	88.0
	여성	(157)	72.3	10.6	17.2	61.7	95.4	1.9	2.8	93.5	95.8	3.2	1.0	92.6
연령	15-19세	(16)	46.4	19.8	33.8	26.6	92.6	3.5	4.0	89.1	93.2	3.5	3.4	89.7
	20-29세	(39)	53.7	16.9	29.3	36.8	79.3	11.9	8.8	67.4	93.6	6.4	0.0	87.2
	30-39세	(45)	76.0	7.4	16.6	68.6	93.7	4.1	2.2	89.6	97.8	2.2	0.0	95.6
	40-49세	(51)	66.6	19.4	14.0	47.2	94.6	5.4	0.0	89.2	97.8	2.2	0.0	95.6
	50-59세	(59)	70.9	12.7	16.4	58.2	91.4	6.4	2.2	85.0	95.4	2.4	2.2	93.0
	60-69세	(54)	76.3	14.1	9.6	62.2	89.9	10.1	0.0	79.8	92.6	7.4	0.0	85.2
	70세 이상	(48)	76.0	12.2	11.7	63.8	86.7	1.6	11.7	85.1	91.0	5.7	3.3	85.3
권역	서울	(58)	82.4	9.1	8.5	73.3	89.0	9.8	1.2	79.2	99.1	0.0	0.9	99.1
	인천/경기	(101)	67.7	15.5	16.8	52.2	89.1	4.9	6.0	84.2	93.9	4.9	1.3	89.0
	대전/충청/강원	(43)	49.5	15.9	34.6	33.6	93.2	3.1	3.8	90.1	93.2	6.8	0.0	86.4
	광주/전라/제주	(34)	54.7	17.0	28.3	37.7	77.6	15.4	7.0	62.2	87.1	8.2	4.7	78.9
	대구/경북	(30)	86.2	7.2	6.6	79.0	96.6	3.4	0.0	93.2	96.6	3.4	0.0	93.2
	부산/울산/경남	(46)	74.4	17.9	7.7	56.5	94.0	3.6	2.4	90.4	96.4	3.6	0.0	92.8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인식은 숙의 전후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며, ‘기후위기 상황이다’ 응답이 1차와 2차 모두 97.5%로 동일하게 나타남.
- ‘기후위기 상황이 아니다’ 응답은 1차와 2차 모두 2.5%로 나타나, 숙의 전후 인식 변화보다는 이미 확고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미래세대는 기후위기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숙의 이전부터 높은 수준의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후위기 인식 미래세대 응답 비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기후위기 상황이다	기후위기 상황이 아니다
1차 조사	(40)	97.5	2.5
2차 조사	(40)	97.5	2.5
GAP	(40)	-	-

* 각 항목에 대한 동의한다(매우+대체로) 비율

2. 기후 관련 진술문에 대한 인식

문5. 다음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진술문입니다. 각 진술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 겠다
(1)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기후위기가 크게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특별한 조치를 취해도 심각한 기후위기를 피하기엔 늦었다.	①	②	③	④	⑤

○ 최종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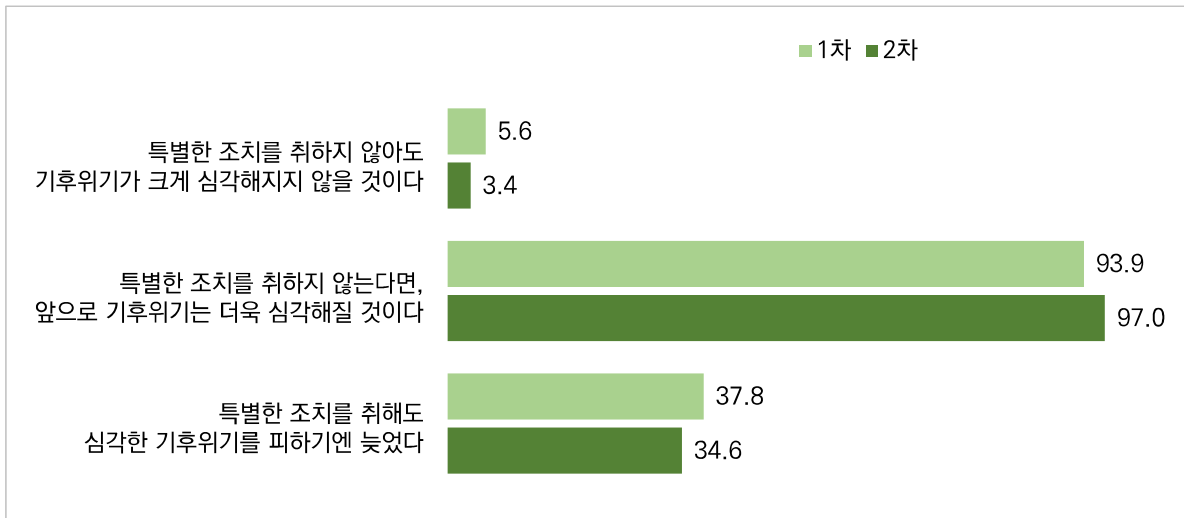
- 기후 관련 진술문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9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기후위기가 크게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4%로 낮게 나타나,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도 심각한 기후위기를 피하기엔 늦었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4.6%로 나타나, 기후위기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비관적 인식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

-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차 93.9% → 2차 97.0%로 상승하여, 속의 과정을 통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기후위기가 크게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차 5.6% → 2차 3.4%로 감소하여, 기후위기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특별한 조치를 취해도 심각한 기후위기를 피하기엔 늦었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차 37.8% → 2차 34.6%로 소폭 감소하여, 기후위기 대응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인식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기후위기 관련 진술문에 대한 인식]

(n=312, 단위 : %)



* 각 항목에 대한 그렇다(매우+대체로) 비율

○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분석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성(99.2%)이 남성(94.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임.
-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40-49세(100.0%)에서 가장 높고, 20-29세(91.2%)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한편, ‘특별한 조치를 취해도 심각한 기후위기를 피하기엔 늦었다’는 인식은 30-39세(50.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로는 전반적으로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서울과 광주/전라/제주(각 100.0%)에서 가장 높고, 인천/경기(94.3%)와 대구/경북(92.5%)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특별한 조치를 취해도 심각한 기후위기를 피하기엔 늦었다’는 인식은 대전/충청/강원(50.0%), 대구/경북(46.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기후위기 관련 진술문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기후위기가 크게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특별한 조치를 취해도 심각한 기후위기를 피하기엔 늦었다
전체		(312)	3.4	97.0	34.6
성별	남성	(155)	4.0	94.8	38.3
	여성	(157)	2.9	99.2	30.9
연령	15-19세	(16)	3.5	96.5	26.2
	20-29세	(39)	2.2	91.2	23.1
	30-39세	(45)	0.0	97.8	50.1
	40-49세	(51)	0.0	100.0	23.8
	50-59세	(59)	2.3	97.8	32.7
	60-69세	(54)	4.9	96.7	39.8
	70세 이상	(48)	11.1	97.4	40.0
권역	서울	(58)	3.2	100.0	27.4
	인천/경기	(101)	4.3	94.3	32.9
	대전/충청/강원	(43)	3.3	98.5	50.0
	광주/전라/제주	(34)	4.7	100.0	29.5
	대구/경북	(30)	3.2	92.5	46.7
	부산/울산/경남	(46)	1.2	98.8	28.6

* 각 항목에 대한 그렇다(매우+대체로) 비율

○ 응답자 특성별 의견 변화

- 남녀 모두 차수가 진행될수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남성은 1차(89.9%)에서 2차(94.8%)로 상승하고, 여성은 1차(97.7%)에서 2차(99.2%)로 추가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인식이 강화됨.
-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40-49세는 1차(92.6%)에서 2차(100.0%)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15-19세(89.1%→96.5%), 60-69세(94.1%→96.7%) 등에서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한편, ‘특별한 조치를 취해도 심각한 기후위기를 피하기엔 늦었다’는 인식은 집단별로 상이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30-39세(47.9%→50.1%), 50-59세(22.7%→32.7%)에서는 상승한 반면, 40-49세(32.8%→23.8%), 60-69세(51.3%→39.8%)에서는 감소하여 연령 간 인식 변화의 방향에 차이가 나타남.
- 권역별로는 전반적으로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상승한 가운데, 서울(97.4%→100.0%), 대전/충청/강원(90.9%→98.5%), 광주/전라/제주(92.9%→100.0%) 등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인천/경기(92.8%→94.3%), 대구/경북(92.1%→92.5%)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변화를 보임.

[기후위기 관련 진술문에 대한 차수별 응답 변화]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기후위기가 크게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특별한 조치를 취해도 심각한 기후위기를 피하기엔 늦었다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전체	(312)	5.6	3.4	93.9	97.0	37.8	34.6	
성별	남성	(155)	7.4	4.0	89.9	94.8	40.7	38.3
	여성	(157)	3.8	2.9	97.7	99.2	35.1	30.9
연령	15-19세	(16)	7.4	3.5	89.1	96.5	22.1	26.2
	20-29세	(39)	4.4	2.2	87.0	91.2	37.2	23.1
	30-39세	(45)	0.0	0.0	97.8	97.8	47.9	50.1
	40-49세	(51)	5.8	0.0	92.6	100.0	32.8	23.8
	50-59세	(59)	0.0	2.3	95.8	97.8	22.7	32.7
	60-69세	(54)	13.5	4.9	94.1	96.7	51.3	39.8
	70세 이상	(48)	9.0	11.1	96.0	97.4	42.9	40.0
권역	서울	(58)	7.2	3.2	97.4	100.0	35.5	27.4
	인천/경기	(101)	4.2	4.3	92.8	94.3	38.1	32.9
	대전/충청/강원	(43)	1.5	3.3	90.9	98.5	47.8	50.0
	광주/전라/제주	(34)	7.4	4.7	92.9	100.0	32.8	29.5
	대구/경북	(30)	8.0	3.2	92.1	92.5	56.6	46.7
	부산/울산/경남	(46)	7.6	1.2	96.4	98.8	22.5	28.6

* 각 항목에 대한 그렇다(매우+대체로) 비율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관련 진술문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응답이 1차(100.0%)에서 2차(92.5%)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특별한 조치를 취해도 기후위기를 피하기는 늦었다’ 응답은 1차(17.5%)에서 2차(15.0%)로 소폭 감소하여, 일부에서 과도한 비관적 인식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기후위기가 크게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다’ 응답은 2차 조사에서 5.0%로 나타나, 소수이지만 기후위기 인식에 있어 일부 인식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기후위기 관련 진술문 미래세대 응답 비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기후위기가 크게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특별한 조치를 취해도 심각한 기후위기를 피하기엔 늦었다
1차 조사	(40)	-	100.0	17.5
2차 조사	(40)	5.0	92.5	15.0
GAP	(40)	+5.0%p	-7.5%p	-2.5%p

* 각 항목에 대한 동의한다(매우+대체로) 비율

3.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문6.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귀하는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종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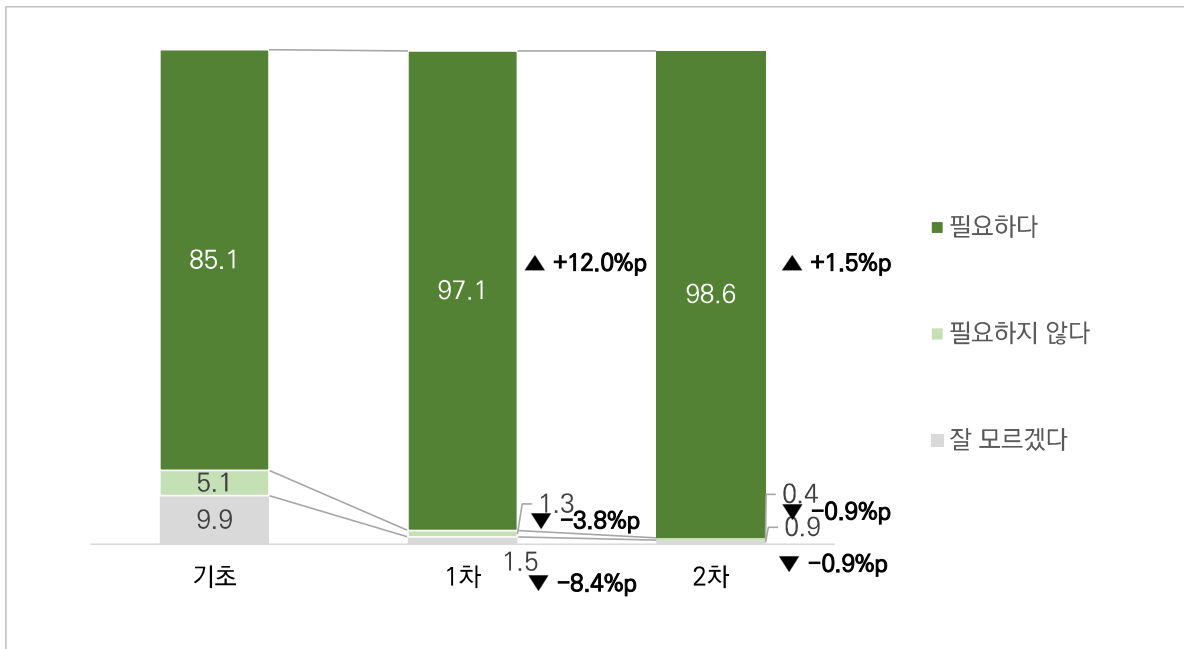
-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98.6%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

-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기초조사 85.1% → 1차 97.1% → 2차 98.6%로 지속 상승하여, 속의 과정을 통해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기초조사 5.1% → 1차 1.3% → 2차 0.4%로 감소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점차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기초조사 9.9% → 1차 1.5% → 2차 0.9%로 크게 감소하여, 속의 과정을 통해 인식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남.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n=312, 단위 : %)



○ 기초조사-2차 의견 변화 추이

- 기초조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265명 중 263명(99.2%)은 2차 조사에서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명(0.4%)은 ‘필요하지 않다’, 1명(0.4%)은 ‘모름’으로 응답함.
- 기초조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16명 중 16명(100.0%)은 2차 조사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으로 나타남.
- 기초조사에서 ‘모름’을 선택한 31명 중 2차 조사에서 ‘필요하다’로 이동한 응답자는 29명(93.5%)이며, ‘모름’을 유지한 응답자는 2명(6.5%)으로 나타남.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기초조사-2차 조사 의견 변화]

구분		2차 조사			전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모름		
기초 조사	필요하다	명	263	1	1	265
		(%)	99.2%	0.4%	0.4%	100.0%
	필요하지 않다	명	16	0	0	16
		(%)	100.0%	0.0%	0.0%	100.0%
	모름	명	29	0	2	31
		(%)	93.5%	0.0%	6.5%	100.0%
전체		명	308	1	3	312
		(%)	98.7%	0.3%	1.0%	100.0%

○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분석

- 성별로는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여성 99.3%, 남성 98.0%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가운데, 30-39세, 40-49세, 50-59세에서 100.0%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임.
- 권역별로는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가운데, 대전/충청/강원,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에서 100.0%로 나타남.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312)	98.6	0.4	0.9
성별	남성	(155)	98.0	0.9	1.1
	여성	(157)	99.3	0.0	0.7
연령	15-19세	(16)	96.5	3.5	0.0
	20-29세	(39)	97.8	2.2	0.0
	30-39세	(45)	100.0	0.0	0.0
	40-49세	(51)	100.0	0.0	0.0
	50-59세	(59)	100.0	0.0	0.0
	60-69세	(54)	96.7	0.0	3.3
	70세 이상	(48)	97.6	0.0	2.4
권역	서울	(58)	98.0	0.0	2.0
	인천/경기	(101)	97.4	0.8	1.7
	대전/충청/강원	(43)	100.0	0.0	0.0
	광주/전라/제주	(34)	100.0	0.0	0.0
	대구/경북	(30)	100.0	0.0	0.0
	부산/울산/경남	(46)	98.8	1.2	0.0

○ 응답자 특성별 의견 변화

- 성별로는 남녀 모두 차수가 진행될수록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승한 가운데, 남성은 기초조사(85.5%)에서 2차(98.0%)로, 여성은 기초조사(84.7%)에서 2차(99.3%)로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필요성 인식이 강화됨.
-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승한 가운데, 30-39세, 40-49세, 50-59세는 2차 조사에서 100.0%로 나타나 높은 수준으로 수렴하였으며, 15-19세 (76.5%→96.5%), 20-29세(79.7%→97.8%) 등에서도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 한편, 60-69세(93.9%→96.7%)와 70세 이상(86.2%→97.6%)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승함.
-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승한 가운데, 광주/전라/제주 (68.3%→100.0%), 인천/경기(80.6%→97.4%), 서울(93.3%→98.0%) 등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지역 간 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차수별 응답 GAP]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기초조사				1차				2차				
		필요함 (A)	필요 하지 않음 (B)	모름	GAP (A-B)	필요함 (A)	필요 하지 않음 (B)	모름	GAP (A-B)	필요함 (A)	필요 하지 않음 (B)	모름	GAP (A-B)	
전체	(312)	85.1	5.1	9.9	80.0	97.1	1.3	1.5	95.8	98.6	0.4	0.9	98.2	
성별	남성	(155)	85.5	3.9	10.6	81.6	96.3	2.7	1.0	93.6	98.0	0.9	1.1	97.1
	여성	(157)	84.7	6.2	9.1	78.5	98.0	0.0	2.0	98.0	99.3	0.0	0.7	99.3
연령	15-19세	(16)	76.5	3.4	20.1	73.1	92.6	3.5	4.0	89.1	96.5	3.5	0.0	93.0
	20-29세	(39)	79.7	4.0	16.4	75.7	95.3	2.2	2.5	93.1	97.8	2.2	0.0	95.6
	30-39세	(45)	81.2	7.9	11.0	73.3	97.8	2.2	0.0	95.6	100.0	0.0	0.0	100.0
	40-49세	(51)	85.1	1.9	13.0	83.2	10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50-59세	(59)	85.0	6.5	8.5	78.5	10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60-69세	(54)	93.9	0.0	6.1	93.9	96.7	3.3	0.0	93.4	96.7	0.0	3.3	96.7
	70세 이상	(48)	86.2	11.2	2.6	75.0	93.3	0.0	6.7	93.3	97.6	0.0	2.4	97.6
권역	서울	(58)	93.3	6.7	0.0	86.6	100.0	0.0	0.0	100.0	98.0	0.0	2.0	98.0
	인천/경기	(101)	80.6	4.3	15.1	76.3	94.9	2.6	2.6	92.3	97.4	0.8	1.7	96.6
	대전/충청/강원	(43)	82.9	4.3	12.8	78.6	98.5	0.0	1.5	98.5	100.0	0.0	0.0	100.0
	광주/전라/제주	(34)	68.3	13.9	17.8	54.4	95.3	0.0	4.7	95.3	100.0	0.0	0.0	100.0
	대구/경북	(30)	94.2	3.4	2.5	90.8	96.6	3.4	0.0	93.2	100.0	0.0	0.0	100.0
	부산/울산/경남	(46)	93.1	0.0	6.9	93.1	98.8	1.2	0.0	97.6	98.8	1.2	0.0	97.6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인식은 숙의 전후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필요하다’ 응답이 1차와 2차 모두 97.5%로 동일하게 나타남.
- ‘필요하지 않다’ 응답은 2차 조사에서 2.5%로 나타나, 소수이지만 일부 응답에서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미래세대는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숙의 이전부터 확고한 인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미래세대 응답 비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1차 조사	(40)	97.5	-	2.5
2차 조사	(40)	97.5	2.5	-
GAP	(40)	-	+2.5%p	-2.5%p

4. 기후위기 책임 주체

문7. 귀하께서는 기후위기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다음 중 누구(또는 어디)에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종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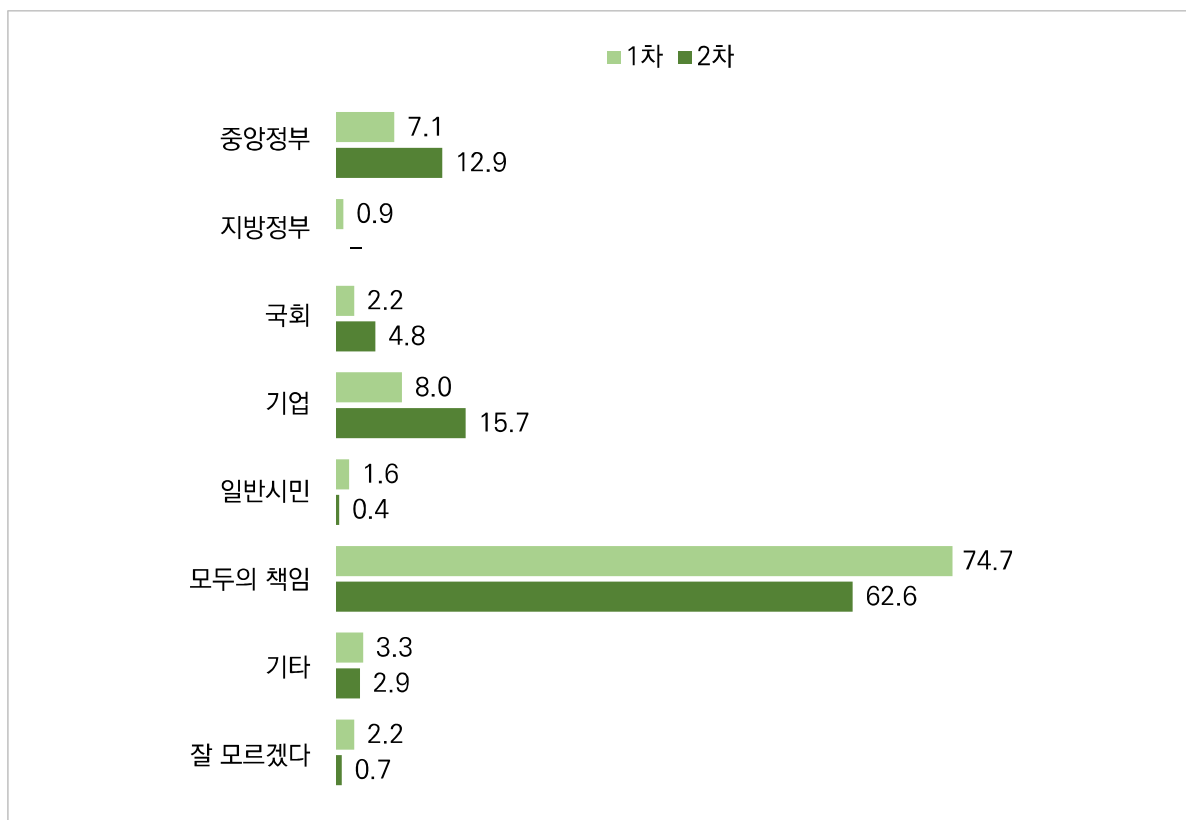
- 기후위기 책임 주체에 대해 ‘모두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기업’(15.7%)과 ‘중앙정부’(12.9%) 순으로 나타나 사회 전반의 공동 책임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국회’(4.8%), ‘일반시민’(0.4%), ‘지방정부’(0.0%)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특정 개별 주체에 대한 책임 인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

- ‘모두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1차 74.7% → 2차 62.6%로 감소하여, 속의 과정을 거치며 책임 주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기업’은 1차 8.0% → 2차 15.7%로 증가하고, ‘중앙정부’ 또한 7.1% → 12.9%로 증가하여, 제도 및 산업 주체에 대한 책임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기후위기 책임 주체]

(n=312, 단위 : %)



○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분석

- 남성과 여성 모두 ‘모두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성(68.6%)이 남성(56.5%)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은 ‘기업’(17.7%)과 ‘국회’(6.5%) 응답 비율이 여성(각각 13.7%, 3.0%)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모두의 책임’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60-69세(73.2%)에서 가장 높고, 40-49세(54.3%)와 70세 이상(55.5%)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한편, ‘기업’을 책임 주체로 보는 응답은 40-49세(22.0%), 50-59세(19.1%), 30-39세(16.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중장년층에서 기업 책임 인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전반적으로 ‘모두의 책임’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광주/전라/제주(78.5%)와 대전/충청/강원(71.4%)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대구/경북(53.5%), 서울(56.5%), 인천/경기(56.7%)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기후위기 책임 주체]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기업	일반시민	모두의 책임	기타	잘 모르겠다		
전체	(312)	12.9	-	4.8	15.7	0.4	62.6	2.9	0.7		
성별	남성	(155)	13.2	-	6.5	17.7	0.7	56.5	3.8	1.5	
	여성	(157)	12.6	-	3.0	13.7	0.0	68.6	2.1	0.0	
연령	15-19세	(16)	10.8	-	7.6	9.8	0.0	65.1	3.2	3.5	
	20-29세	(39)	9.9	-	2.2	15.7	0.0	67.8	4.4	0.0	
	30-39세	(45)	10.6	-	6.1	16.3	2.5	62.3	2.2	0.0	
	40-49세	(51)	14.4	-	4.1	22.0	0.0	54.3	5.1	0.0	
	50-59세	(59)	14.7	-	4.1	19.1	0.0	62.1	0.0	0.0	
	60-69세	(54)	11.2	-	0.0	8.3	0.0	73.2	4.0	3.3	
70세 이상	(48)	16.4	-	11.5	14.2	0.0	55.5	2.4	0.0		
	권역	서울	(58)	19.7	-	6.6	15.2	0.0	56.5	2.0	0.0
		인천/경기	(101)	16.1	-	3.8	18.5	0.0	56.7	3.1	1.7
		대전/충청/강원	(43)	4.4	-	9.4	14.8	0.0	71.4	0.0	0.0
		광주/전라/제주	(34)	4.2	-	5.9	8.1	3.3	78.5	0.0	0.0
		대구/경북	(30)	12.3	-	0.0	30.7	0.0	53.5	3.4	0.0
부산/울산/경남		(46)	12.2	-	2.4	6.5	0.0	69.3	8.3	1.2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책임 주체 인식은 전반적으로 ‘모두의 책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1차(70.0%)에서 2차(55.0%)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한편, ‘중앙정부’(12.5%)와 ‘기업’(15.0%) 응답은 2차 조사에서 증가하여, 속의 이후 책임 주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잘 모르겠다’ 응답은 1차(12.5%)에서 2차(2.5%)로 감소하고, ‘일반시민’ 응답은 7.5%에서 10.0%로 소폭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책임 인식이 분산·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임.

[기후위기 책임 주체 미래세대 응답 비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기업	일반시민	모두의 책임	기타	잘 모르겠다
1차 조사	(40)	-	-	5.0	2.5	7.5	70.0	2.5	12.5
2차 조사	(40)	12.5	-	5.0	15.0	10.0	55.0	-	2.5
GAP	(40)	+12.5%p	-	-	+12.5%p	+2.5%p	-15.0%p	-2.5%p	-10.0%p

5. 탄소중립에 대한 인지 정도

문8. 귀하께서는 '탄소중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최종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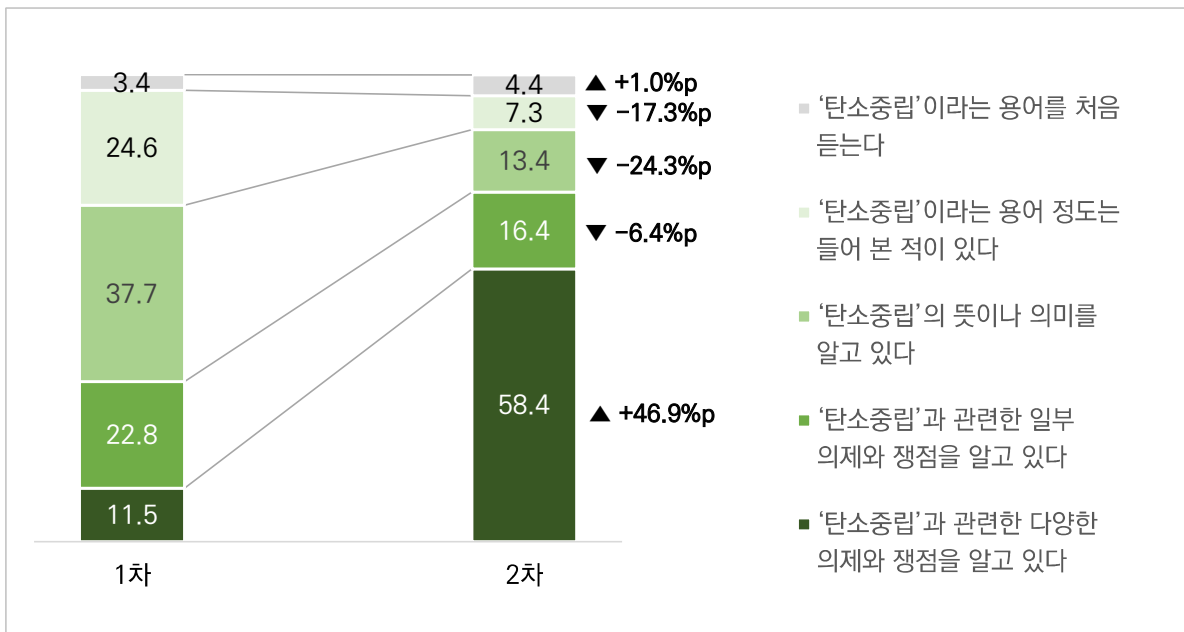
- 탄소중립 인지 수준에 대해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이슈와 쟁점을 알고 있다'(16.4%), '의미를 알고 있다'(13.4%)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

-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차 11.5% → 2차 58.4%로 크게 상승하여, 속의 과정을 통해 심층적인 이해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이슈와 쟁점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차 22.8% → 2차 16.4%로 감소하고, '의미를 알고 있다'는 응답 또한 37.7% → 13.4%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인지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탄소중립 인지 정도]

(n=312, 단위 : %)



○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분석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남성(62.1%)이 여성(54.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30-39세(77.8%)와 40-49세(76.7%)에서 특히 높고, 70세 이상(22.9%)과 60-69세(42.6%)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한편, '용어를 처음 듣는다' 및 '용어 정도만 알고 있다'는 응답은 60-69세(각각 10.3%, 2.1%)와 70세 이상(8.4%, 19.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연령층에서 인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인천/경기(61.3%), 서울(60.4%), 대전/충청/강원(63.5%)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광주/전라/제주(47.8%)와 부산/울산/경남(52.7%)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탄소중립 인지 정도]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처음 듣는다	'탄소중립'이라는 용어 정도는 들어 본 적이 있다	'탄소중립'의 뜻이나 의미를 알고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일부 의제와 쟁점을 알고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와 쟁점을 알고 있다	
전체	(312)	4.4	7.3	13.4	16.4	58.4	
성별	남성	(155)	2.2	9.2	11.6	14.8	62.1
	여성	(157)	6.6	5.3	15.3	18.0	54.8
연령	15-19세	(16)	0.0	2.5	4.2	23.9	69.4
	20-29세	(39)	0.0	8.0	8.6	13.4	70.1
	30-39세	(45)	0.0	5.2	5.1	11.9	77.8
	40-49세	(51)	1.6	5.8	6.0	10.0	76.7
	50-59세	(59)	6.0	6.0	10.0	17.8	60.2
	60-69세	(54)	10.3	2.1	31.0	14.1	42.6
	70세 이상	(48)	8.4	19.2	20.9	28.7	22.9
권역	서울	(58)	3.9	3.3	11.4	21.0	60.4
	인천/경기	(101)	1.3	9.2	11.3	16.9	61.3
	대전/충청/강원	(43)	10.5	1.9	11.3	12.9	63.5
	광주/전라/제주	(34)	8.3	9.3	8.6	25.9	47.8
	대구/경북	(30)	0.0	4.1	27.1	10.5	58.3
	부산/울산/경남	(46)	6.4	13.5	17.4	10.0	52.7

○ 응답자 특성별 의견 변화

- 성별로는 남녀 모두 차수가 진행될수록 ‘탄소중립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와 쟁점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남성은 1차(16.4%)에서 2차(62.1%)로, 여성은 1차(6.7%)에서 2차(54.8%)로 상승하여 의제와 쟁점에 대한 인지 수준이 크게 확대됨.
-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의제와 쟁점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15-19세(3.9%→69.4%), 20-29세(6.4%→70.1%), 30-39세(8.4%→77.8%), 40-49세(11.6%→76.7%) 등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 높은 수준으로 확대됨.
- 한편, 50-59세(15.5%→60.2%), 60-69세(7.2%→42.6%)에서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70세 이상은 20.7%→22.9%로 증가폭이 제한적인 수준을 보임.
-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의제와 쟁점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서울(11.2%→60.4%), 인천/경기(15.6%→61.3%), 대전/충청/강원(4.4%→63.5%) 등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탄소중립 인지 정도]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처음 듣는다		‘탄소중립’이라는 용어 정도는 들어 본 적이 있다		‘탄소중립’의 뜻이나 의미를 알고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일부 의제와 쟁점을 알고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와 쟁점을 알고 있다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전체	(312)	3.4	4.4	24.6	7.3	37.7	13.4	22.8	16.4	11.5	58.4	
성별	남성	(155)	2.7	2.2	22.9	9.2	33.0	11.6	25.0	14.8	16.4	62.1
	여성	(157)	4.1	6.6	26.2	5.3	42.2	15.3	20.7	18.0	6.7	54.8
연령	15-19세	(16)	0.0	0.0	38.8	2.5	39.5	4.2	17.8	23.9	3.9	69.4
	20-29세	(39)	2.5	0.0	41.0	8.0	35.7	8.6	14.3	13.4	6.4	70.1
	30-39세	(45)	4.7	0.0	29.2	5.2	35.4	5.1	22.4	11.9	8.4	77.8
	40-49세	(51)	2.0	1.6	19.9	5.8	41.9	6.0	24.5	10.0	11.6	76.7
	50-59세	(59)	4.6	6.0	22.8	6.0	38.5	10.0	18.5	17.8	15.5	60.2
	60-69세	(54)	0.0	10.3	20.9	2.1	33.6	31.0	38.3	14.1	7.2	42.6
	70세 이상	(48)	8.1	8.4	13.5	19.2	39.7	20.9	18.0	28.7	20.7	22.9
권역	서울	(58)	0.0	3.9	25.0	3.3	41.1	11.4	22.7	21.0	11.2	60.4
	인천/경기	(101)	3.9	1.3	27.4	9.2	29.9	11.3	23.1	16.9	15.6	61.3
	대전/충청/강원	(43)	7.4	10.5	22.4	1.9	46.6	11.3	19.3	12.9	4.4	63.5
	광주/전라/제주	(34)	4.7	8.3	18.1	9.3	36.1	8.6	29.8	25.9	11.3	47.8
	대구/경북	(30)	0.0	0.0	26.2	4.1	32.5	27.1	22.5	10.5	18.9	58.3
	부산/울산/경남	(46)	4.4	6.4	23.5	13.5	46.5	17.4	21.0	10.0	4.6	52.7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인지 수준은 속의 전후로 변화가 나타나며,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처음 듣는다는 응답(10.0%)은 2차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인 인지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은 있으나 이해도가 낮은 응답은 1차(37.5%)에서 2차(17.5%)로 감소하여,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탄소중립의 뜻이나 의미를 알고 있다’(32.5%→37.5%)는 응답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인지 수준이 향상된 경향을 보임.

[탄소중립 인지 정도 미래세대 응답 비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처음 듣는다	‘탄소중립’이라는 용어 정도는 들어 본 적이 있다	‘탄소중립’의 뜻이나 의미를 알고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일부 의제와 쟁점을 알고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와 쟁점을 알고 있다
1차 조사	(40)	10.0	37.5	32.5	20.0	-
2차 조사	(40)	-	17.5	37.5	20.0	25.0
GAP	(40)	-10.0%p	-20.0%p	+5.0%p	-	+25.0%p

6.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대한 태도

문10.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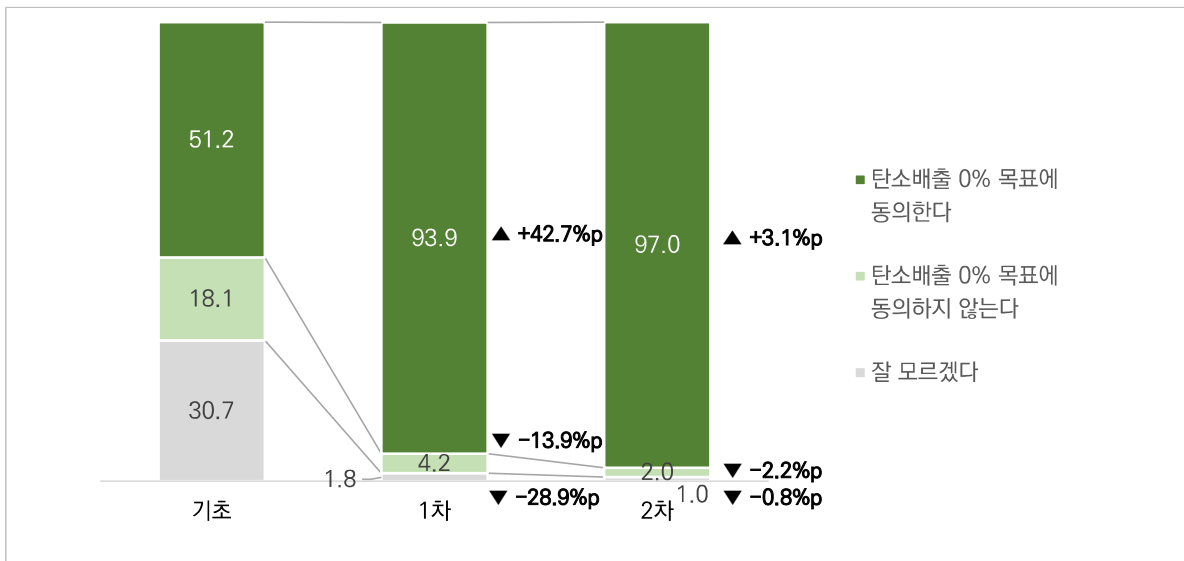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대해 ‘탄소배출 0% 목표에 동의한다’가 97.0%로 나타난 가운데, ‘탄소배출 0%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 2.0%, ‘잘 모르겠다’ 1.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동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

- ‘탄소배출 0% 목표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기초조사 당시 51.2%에서 2차조사 97.0%로 45.8%p 증가함.
- ‘탄소배출 0%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기초조사 당시 18.1%에서 2차조사 2.0%로 16.1%p 감소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기초조사 당시 30.7%에서 2차조사 1.0%로 29.7%p 감소함.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대한 태도]

(n=312, 단위 : %)



○ 기초조사-2차 의견 변화 추이

- 기초조사에서 '동의한다' 응답자의 경우, 2차 조사에서도 '동의한다' 응답 비율이 98.8%로 대부분 동일 의견을 유지함.
- 기초조사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자의 경우, 2차 조사에서 '동의한다'로 전환된 비율이 91.2%로 나타나, 숙의 이후 의견 변화가 크게 나타남.
- 기초조사에서 '모름' 응답자의 경우, 2차 조사에서 '동의한다'로 응답한 비율이 95.8%로 나타나, 숙의 과정을 통해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대한 태도 기초조사-2차 조사 의견 변화]

구분		2차 조사			전체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모름		
기초 조사	동의한다	명	158	1	1	160
		(%)	98.8%	0.6%	0.6%	100.0%
	동의하지 않는다	명	52	4	1	57
		(%)	91.2%	7.0%	1.8%	100.0%
	모름	명	92	2	2	96
		(%)	95.8%	2.1%	2.1%	100.0%
전체		명	302	7	4	313
		(%)	96.5%	2.2%	1.3%	100.0%

* 가중치로 인해 소수점 한자리 반올림 결과 합계가 313명으로 제시됨

○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분석

- 전반적으로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동의 비율은 97.0%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대부분의 응답자에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연령별로는 여성(98.3%)이 남성(95.7%)보다 동의 비율이 다소 높으며, 특히 40대부터 60대에서 100.0% 동의로 나타나 중장년층에서 동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전반적으로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광주/전라/제주(93.0%)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잘 모르겠다' 비율(7.0%)이 높게 나타나 지역 간 인식 차이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대한 태도]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탄소중립 목표에 동의한다	탄소중립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312)	97.0	2.0	1.0
성별	남성	(155)	95.7	3.3	1.1
	여성	(157)	98.3	0.7	1.0
연령	15-19세	(16)	96.5	3.5	0.0
	20-29세	(39)	89.4	6.4	4.2
	30-39세	(45)	97.8	2.2	0.0
	40-49세	(51)	100.0	0.0	0.0
	50-59세	(59)	100.0	0.0	0.0
	60-69세	(54)	100.0	0.0	0.0
	70세 이상	(48)	92.2	4.5	3.3
권역	서울	(58)	98.0	2.0	0.0
	인천/경기	(101)	96.4	2.8	0.8
	대전/충청/강원	(43)	98.5	1.5	0.0
	광주/전라/제주	(34)	93.0	0.0	7.0
	대구/경북	(30)	96.6	3.4	0.0
	부산/울산/경남	(46)	98.8	1.2	0.0

○ 응답자 특성별 의견 변화

- 기초조사 대비 2차 조사에서 전체 동의 비율은 51.2% → 97.0%로 크게 상승하여, 숙의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52.8%→95.7%)과 여성(49.6%→98.3%) 모두 동의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인식 변화가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동의 비율이 상승한 가운데, 20대와 30대에서 각각 40%p 이상씩 증가하였고, 40대에서 60대는 최종 동의율 100.0%로 나타남.
- 권역별로도 전반적으로 동의 비율이 상승하였으며, 대전/충청/강원에서 59.9%p, 인천/경기에서는 37.9%p 등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남.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대한 태도 차수별 응답 GAP]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기초조사				1차				2차				
		동의함 (A)	동의 하지 않음 (B)	모름	GAP (A-B)	동의함 (A)	동의 하지 않음 (B)	모름	GAP (A-B)	동의함 (A)	동의 하지 않음 (B)	모름	GAP (A-B)	
전체	(312)	51.2	18.1	30.7	33.1	93.9	4.2	1.8	89.7	97.0	2.0	1.0	95.0	
성별	남성	(155)	52.8	22.0	25.2	30.8	92.0	6.4	1.6	85.6	95.7	3.3	1.1	92.4
	여성	(157)	49.6	14.3	36.1	35.3	95.8	2.1	2.1	93.7	98.3	0.7	1.0	97.6
연령	15-19세	(16)	34.9	3.4	61.7	31.5	90.5	0.0	9.5	90.5	96.5	3.5	0.0	93.0
	20-29세	(39)	43.7	22.8	33.5	20.9	87.6	5.6	6.8	82.0	89.4	6.4	4.2	83.0
	30-39세	(45)	53.5	13.5	33.0	40.0	92.9	7.1	0.0	85.8	97.8	2.2	0.0	95.6
	40-49세	(51)	40.6	25.4	34.0	15.2	92.9	7.1	0.0	85.8	100.0	0.0	0.0	100.0
	50-59세	(59)	63.7	19.3	17.0	44.4	96.0	4.0	0.0	92.0	100.0	0.0	0.0	100.0
	60-69세	(54)	48.6	23.4	28.0	25.2	96.7	3.3	0.0	93.4	100.0	0.0	0.0	100.0
70세 이상	(48)	59.3	8.3	32.4	51.0	96.7	0.0	3.3	96.7	92.2	4.5	3.3	87.7	
권역	서울	(58)	41.5	21.8	36.8	19.7	94.1	5.9	0.0	88.2	98.0	2.0	0.0	96.0
	인천/경기	(101)	58.5	16.1	25.3	42.4	91.5	6.7	1.8	84.8	96.4	2.8	0.8	93.6
	대전/충청/강원	(43)	38.6	14.4	47.0	24.2	91.0	4.6	4.5	86.4	98.5	1.5	0.0	97.0
	광주/전라/제주	(34)	41.1	20.2	38.7	20.9	95.3	0.0	4.7	95.3	93.0	0.0	7.0	93.0
	대구/경북	(30)	53.3	21.4	25.3	31.9	96.5	3.5	0.0	93.0	96.6	3.4	0.0	93.2
	부산/울산/경남	(46)	65.0	17.6	17.4	47.4	99.1	0.0	0.9	99.1	98.8	1.2	0.0	97.6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의 정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태도는 숙의 전후 모두 매우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며, '동의한다' 응답이 1차(95.0%)에서 2차(97.5%)로 소폭 증가함.
-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은 2차 조사에서 2.5%로 나타나, 소수이지만 일부 응답에서 목표에 대한 이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잘 모르겠다' 응답은 1차(5.0%)에서 2차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숙의 이후 전반적으로 의견이 보다 명확해진 것으로 나타남.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대한 태도 미래세대 응답 비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탄소중립 목표에 동의한다	탄소중립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1차 조사	(40)	95.0	-	5.0
2차 조사	(40)	97.5	2.5	-
GAP	(40)	+2.5%p	+2.5%p	-5.0%p

7. 탄소감축 방식

문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에 더 공감하십니까?

○ 최종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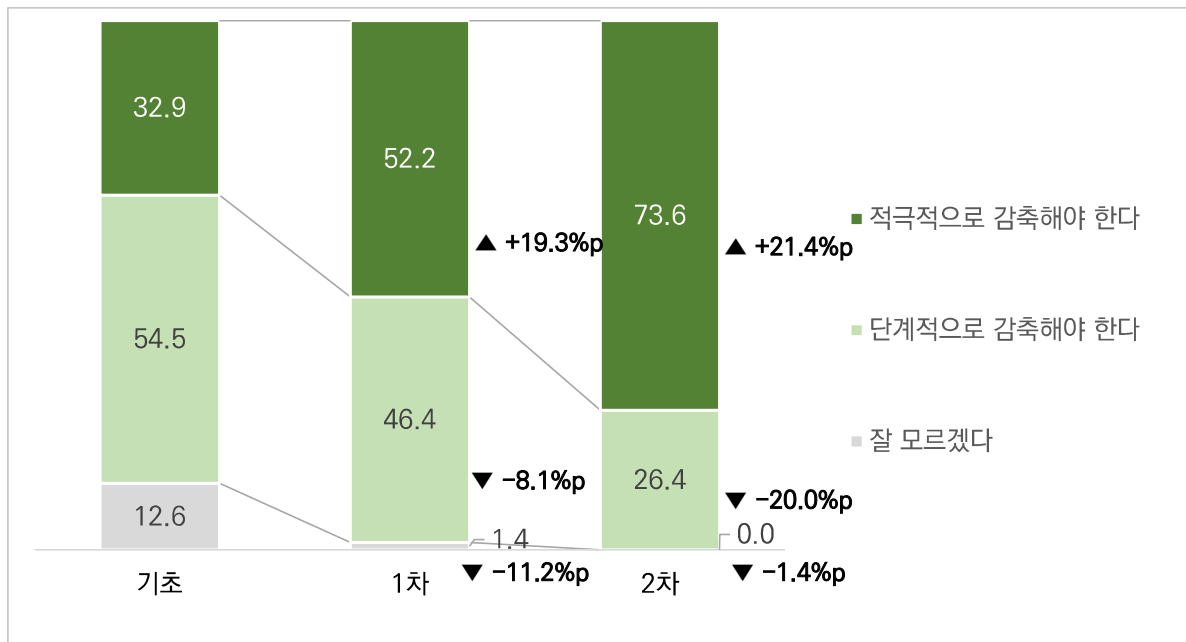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73.6%,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26.4%임.

○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

- 속의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기초조사 32.9% → 1차조사 52.2% → 2차조사 73.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보다 강한 수준의 감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기초조사 54.5% → 1차조사 46.4% → 2차조사 26.4%로 감소하여, 속의를 거치며 점진적 접근보다 적극적 대응으로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보임.
- ‘잘 모르겠다’ 응답은 기초조사 12.6%에서 1차조사 및 2차조사에서 모두 1.4% 이하로 크게 감소하여, 속의 과정을 통해 응답자의 의견이 명확해진 것으로 나타남.

[탄소감축 방식]

(n=312, 단위 : %)



○ 기초조사-2차 의견 변화 추이

- 기초조사에서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응답자의 경우, 2차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응답 비율이 81.4%로 나타나, 기존 의견을 유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조사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응답자의 경우, 2차조사에서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로 전환된 비율이 70.6%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남.
- 기초조사에서 ‘모름’ 응답자의 경우, 2차조사에서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로 응답한 비율이 66.7%로 나타나, 숙의 과정을 통해 방향성이 형성된 것으로 보임.
- 전체적으로 2차조사 기준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비율은 73.6%로 나타나, 적극적 감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탄소감축 방식 기초조사-2차 조사 의견 변화]

구분			2차 조사			전체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모름	
기초 조사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명	83	19	-	102
		(%)	81.4%	18.6%	-	100.0%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명	120	50	-	170
		(%)	70.6%	29.4%	-	100.0%
	모름	명	26	13	-	39
		(%)	66.7%	33.3%	-	100.0%
전체		명	229	82	-	311
		(%)	73.6%	26.4%	-	100.0%

* 가중치로 인해 소수점 한자리 반올림 결과 합계가 311명으로 제시됨

○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분석

-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73.6%로 나타나, 적극적 감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76.4%)이 남성(70.8%)보다 적극적 감축에 대한 동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대~60대에서 적극적 감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에서는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응답이 52.1%로 더 높게 나타나, 연령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됨.
- 권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적극적 감축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대전/충청/강원(83.9%)에서 가장 높고, 광주/전라/제주(58.3%)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탄소감축 방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312)	73.6	26.4	-
성별	남성	(155)	70.8	29.2	-
	여성	(157)	76.4	23.6	-
연령	15-19세	(16)	60.3	39.7	-
	20-29세	(39)	47.9	52.1	-
	30-39세	(45)	68.9	31.1	-
	40-49세	(51)	84.2	15.8	-
	50-59세	(59)	77.0	23.0	-
	60-69세	(54)	82.4	17.6	-
	70세 이상	(48)	77.9	22.1	-
권역	서울	(58)	68.4	31.6	-
	인천/경기	(101)	75.8	24.2	-
	대전/충청/강원	(43)	83.9	16.1	-
	광주/전라/제주	(34)	58.3	41.7	-
	대구/경북	(30)	73.9	26.1	-
	부산/울산/경남	(46)	76.9	23.1	-

○ 응답자 특성별 의견 변화

- 남녀 모두 기초조사 대비 2차조사에서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응답 비율이 높아진 가운데, 남성은 31.8%에서 70.8%로 39.0%p 증가하였고, 여성은 34.1%에서 76.4%로 42.3%p 증가하여 여성에서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남.
- 전 연령대에서 적극적 감축 의견이 증가한 가운데, 40대는 38.0%에서 84.2%로 46.2%p 증가, 50대는 36.3%에서 77.0%로 40.7%p 증가, 60대는 47.2%에서 82.4%로 35.2%p 증가하여 중장년층에서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남. 반면 20대는 15.6%에서 47.9%로 32.3%p 증가하였으나, 2차조사에서도 단계적 감축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권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적극적 감축 의견이 증가한 가운데, 대전/충청/강원은 11.1%에서 83.9%로 72.8%p 증가하여 가장 큰 변화폭을 보였으며, 인천/경기는 37.9%에서 75.8%로 37.9%p 증가함. 반면 광주/전라/제주는 19.6%에서 58.3%로 38.7%p 증가하였으나,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탄소감축 방식 차수별 응답 GAP]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기초조사				1차				2차				
		적극적 감축 (A)	단계적 감축 (B)	모름	GAP (A-B)	적극적 감축 (A)	단계적 감축 (B)	모름	GAP (A-B)	적극적 감축 (A)	단계적 감축 (B)	모름	GAP (A-B)	
전체	(312)	32.9	54.5	12.6	-21.6	52.2	46.4	1.4	5.8	73.6	26.4	-	47.2	
성별	남성	(155)	31.8	56.1	12.2	-24.3	48.3	48.8	2.9	-0.5	70.8	29.2	-	41.6
	여성	(157)	34.1	52.9	13.0	-18.8	56.0	44.0	0.0	12.0	76.4	23.6	-	52.8
연령	15-19세	(16)	11.1	59.9	28.9	-48.8	22.0	78.0	0.0	-56.0	60.3	39.7	-	20.6
	20-29세	(39)	15.6	64.1	20.3	-48.5	27.8	67.7	4.5	-39.9	47.9	52.1	-	-4.2
	30-39세	(45)	24.1	66.0	9.9	-41.9	54.3	42.6	3.1	11.7	68.9	31.1	-	37.8
	40-49세	(51)	38.0	50.2	11.9	-12.2	54.4	43.0	2.6	11.4	84.2	15.8	-	68.4
	50-59세	(59)	36.3	51.3	12.4	-15.0	55.4	44.6	0.0	10.8	77.0	23.0	-	54.0
	60-69세	(54)	47.2	45.5	7.3	1.7	64.7	35.3	0.0	29.4	82.4	17.6	-	64.8
70세 이상	(48)	36.9	52.6	10.4	-15.7	59.6	40.4	0.0	19.2	77.9	22.1	-	55.8	
권역	서울	(58)	40.8	54.3	4.9	-13.5	50.0	50.0	0.0	0.0	68.4	31.6	-	36.8
	인천/경기	(101)	37.9	50.8	11.3	-12.9	50.5	47.2	2.3	3.3	75.8	24.2	-	51.6
	대전/충청/강원	(43)	11.1	71.9	17.0	-60.8	61.9	38.1	0.0	23.8	83.9	16.1	-	67.8
	광주/전라/제주	(34)	19.6	53.2	27.2	-33.6	48.0	49.7	2.3	-1.7	58.3	41.7	-	16.6
	대구/경북	(30)	44.3	46.7	8.9	-2.4	64.6	30.9	4.5	33.7	73.9	26.1	-	47.8
부산/울산/경남	(46)	35.0	52.5	12.4	-17.5	44.7	55.3	0.0	-10.6	76.9	23.1	-	53.8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의 탄소감축 방식에 대한 인식은 숙의 전후로 변화가 나타나며,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응답이 1차(35.0%)에서 2차(65.0%)로 크게 증가함.
- 반면,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응답은 1차(57.5%)에서 2차(35.0%)로 감소하여, 숙의 이후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 응답은 1차(7.5%)에서 2차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으로 감축 방식에 대한 의견이 보다 명확해진 것으로 나타남.

[탄소감축 방식 미래세대 응답 비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1차 조사	(40)	35.0	57.5	7.5
2차 조사	(40)	65.0	35.0	-
GAP	(40)	+30.0%p	-22.5%p	-7.5%p

8. 탄소중립 정책을 통한 기대

문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귀하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최종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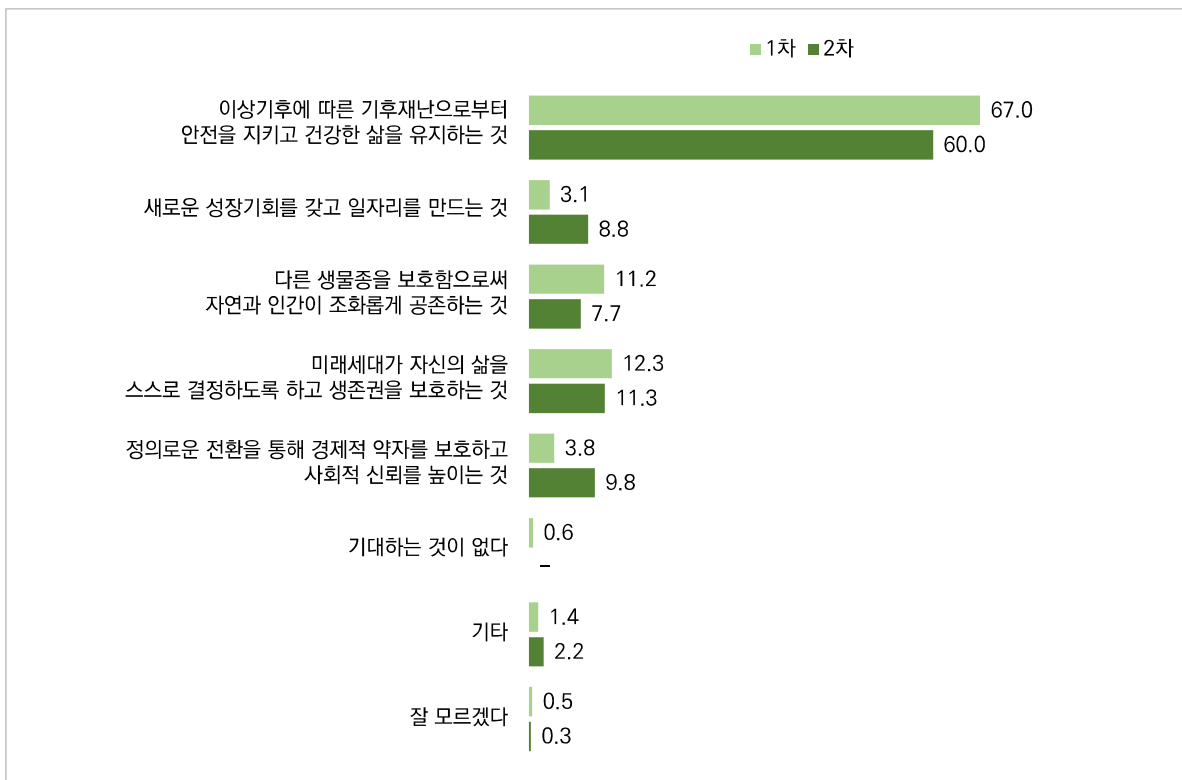
-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미래세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 11.3%,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것' 9.8%,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 8.8%,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 7.7% 등이 그 뒤를 이음.

○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

- 1차조사 대비 2차조사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67.0%에서 60.0%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핵심 우선 가치로 유지됨.
- 반면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것'은 3.8%에서 9.8%로 크게 증가하여, 속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탄소중립 정책을 통한 기대]

(n=312, 단위 : %)



○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분석

- 성별로는 ‘이상기후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응답에 있어 여성(65.6%)이 남성(54.3%)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남성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13.6%), 여성은 ‘다른 생물종을 보호하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것’(9.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 및 권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안전과 삶의 질 유지’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30대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 및 ‘미래세대 삶의 결정권 보장’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대구/경북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것’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일부 집단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됨.

[탄소중립 정책을 통한 기대]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	새로운 성장기회를 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	다른 생물종을 보호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	미래세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것	기대하는 것이 없다	기타	잘 모르겠다	
전체	(312)	60.0	8.8	7.7	11.3	9.8	-	2.2	0.3	
성별	남성	(155)	54.3	13.6	5.7	12.9	9.2	-	3.7	0.6
	여성	(157)	65.6	4.1	9.6	9.7	10.4	-	0.6	0.0
연령	15-19세	(16)	43.5	16.0	6.7	23.4	10.4	-	0.0	0.0
	20-29세	(39)	56.3	16.0	6.0	10.4	6.6	-	2.2	2.5
	30-39세	(45)	45.2	16.6	11.5	16.4	8.1	-	2.1	0.0
	40-49세	(51)	49.8	6.1	3.5	23.6	9.4	-	7.6	0.0
	50-59세	(59)	59.0	5.9	10.0	8.7	14.7	-	1.7	0.0
	60-69세	(54)	81.0	3.3	4.6	2.7	8.4	-	0.0	0.0
	70세 이상	(48)	71.0	5.7	10.7	2.8	9.7	-	0.0	0.0
권역	서울	(58)	64.5	5.3	8.9	10.5	7.2	-	3.5	0.0
	인천/경기	(101)	60.4	8.6	5.7	13.3	7.5	-	3.7	0.9
	대전/충청/강원	(43)	51.2	10.1	13.9	15.6	9.2	-	0.0	0.0
	광주/전라/제주	(34)	64.5	13.5	7.1	4.7	10.2	-	0.0	0.0
	대구/경북	(30)	58.1	8.3	3.8	13.6	16.2	-	0.0	0.0
	부산/울산/경남	(46)	59.7	9.2	7.5	7.4	14.1	-	2.1	0.0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가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전반적으로 ‘이상기후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1차(47.5%)에서 2차(52.5%)로 증가하여 해당 효과에 대한 기대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미래세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 응답은 1차(10.0%)에서 2차(25.0%)로 크게 증가하여, 권리와 삶의 주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다른 생물종을 보호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 응답은 1차(32.5%)에서 2차(10.0%)로 감소함.

[탄소중립 정책을 통한 기대 미래세대 응답 비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 하는 것	새로운 성장기회를 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	다른 생물종을 보호 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 하는 것	미래세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 하도록 하고 생존권을 보호 하는 것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것	기대하는 것이 없다	기타	잘 모르겠다
1차 조사	(40)	47.5	2.5	32.5	10.0	-	5.0	-	2.5
2차 조사	(40)	52.5	5.0	10.0	25.0	-	-	2.5	5.0
GAP	(40)	+5.0%p	+2.5%p	-22.5%p	+15.0%p	-	-5.0%p	+2.5%p	+2.5%p

9.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점

문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최종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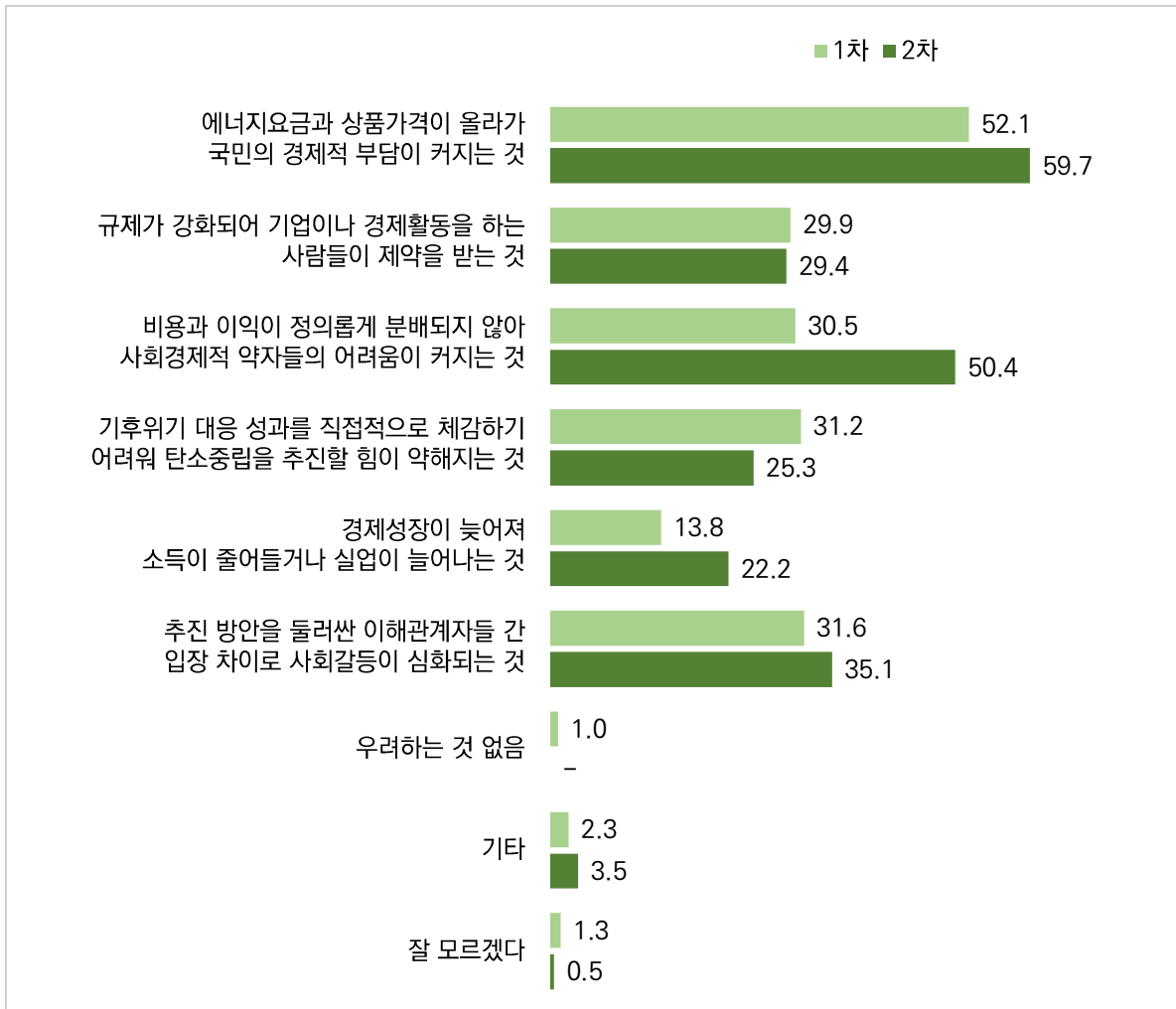
-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려하는 점으로 ‘에너지요금과 상품가격이 올라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이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비용과 이익의 정의롭게 분배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 50.4%, ‘추진 방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 차이로 사회갈등이 발생하는 것’ 35.1%, ‘규제가 강화되어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약을 받는 것’ 29.4% 등이 그 뒤를 이음.

○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

- ‘에너지요금과 상품가격이 올라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은 1차조사 당시 52.1%에서 2차조사 59.7%로 7.6%p 증가함.
- ‘비용과 이익의 정의롭게 분배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은 1차조사 당시 30.5%에서 2차조사 50.4%로 19.9%p 증가함.
- ‘경제성장이 늦어져 소득이 줄어들거나 실업이 늘어나는 것’은 1차조사 당시 13.8%에서 2차조사 22.2%로 8.4%p 증가함.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점]

(n=312, 복수응답, 단위 : %)



○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분석

- 성별로는 여성(69.2%)이 남성(50.1%)보다 ‘에너지요금과 상품가격이 올라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남성은 ‘추진 방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 차이로 사회갈등이 발생하는 것’(40.7%)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에너지요금과 상품가격이 올라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73.7%)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60대에서는 ‘비용과 이익의 정의롭게 분배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이 높게 나타나고, 70세 이상에서는 ‘추진 방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 차이로 사회갈등이 발생하는 것’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에너지요금과 상품가격이 올라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의 응답이 높음
 - 광주/전라/제주에서는 ‘규제가 강화되어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약을 받는 것’(54.3%)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대구/경북에서는 ‘비용과 이익의 정의롭게 분배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60.8%)과 ‘추진 방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 차이로 사회갈등이 발생하는 것’(42.3%)이 높게 나타나 지역 간 인식 차이가 일부 존재함.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점]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에너지 요금과 상품가격이 올라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	규제가 강화되어 기업이나 경제활동 을 하는 사람들이 제약을 받는 것	비용과 이익이 정리롭게 분배되지 않아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	기후위기 대응 성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워 탄소중립을 추진할 힘이 약해지는 것	경제성장 이 늦어져 소득이 줄어든거나 실업이 늘어는 것	추진 방안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 간 입장 차이로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것	우려하는 것 없음	기타	잘 모르겠다	
전체	(312)	59.7	29.4	50.4	25.3	22.2	35.1	-	3.5	0.5	
성별	남성	(155)	50.1	31.5	47.7	26.5	22.3	40.7	-	3.6	0.0
	여성	(157)	69.2	27.4	52.9	24.2	22.1	29.5	-	3.5	1.0
연령	15-19세	(16)	61.1	33.9	34.8	10.6	43.8	49.8	-	0.0	0.0
	20-29세	(39)	73.7	36.8	31.5	30.9	36.3	34.4	-	0.0	0.0
	30-39세	(45)	58.2	33.0	55.2	33.6	30.8	25.1	-	4.5	0.0
	40-49세	(51)	60.7	28.0	56.5	28.6	24.9	36.8	-	7.2	0.0
	50-59세	(59)	61.1	26.0	53.6	24.3	20.7	35.5	-	0.0	0.0
	60-69세	(54)	55.3	25.0	56.5	30.4	10.6	34.4	-	0.0	0.0
	70세 이상	(48)	51.7	29.1	48.8	10.1	7.6	38.4	-	11.0	3.3
권역	서울	(58)	66.5	26.5	43.9	20.7	15.0	40.9	-	5.0	0.0
	인천/경기	(101)	61.8	28.4	50.7	24.5	23.8	31.0	-	3.9	0.0
	대전/충청/강원	(43)	53.7	20.1	41.6	32.9	11.9	30.2	-	4.8	0.0
	광주/전라/제주	(34)	67.6	54.3	61.8	21.8	33.3	37.2	-	0.0	4.7
	대구/경북	(30)	57.8	20.1	60.8	27.2	37.0	42.3	-	4.5	0.0
	부산/울산/경남	(46)	48.0	31.5	50.7	27.4	19.4	34.9	-	1.7	0.0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전반적으로 ‘에너지 요금과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1차(42.5%)에서 2차(62.5%)로 크게 증가하여 해당 우려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비용과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아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커질 것’ 응답은 1차(25.0%)에서 2차(42.5%)로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늦어져 소득이 줄어들거나 일자리가 감소할 것’ 응답도 1차(27.5%)에서 2차(40.0%)로 증가하여,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규제 강화로 인한 기업·경제활동 위축’과 ‘기후위기 대응 성과 부족’ 응답은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잘 모르겠다’ 응답은 1차(10.0%)에서 2차(5.0%)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우려 인식이 보다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임.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점 미래세대 응답 비율]

(복수응답,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에너지 요금과 상품가격이 올라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	규제가 강화되어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약을 받는 것	비용과 이익이 정의를 분배되지 않아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	기후위기 대응 성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워 탄소중립을 추진할 힘이 약해지는 것	경제성장이 늦어져 소득이 줄어든거나 실업이 늘어나는 것	추진 방안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 간 입장 차이로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것	우려하는 것 없음	기타	잘 모르겠다
1차 조사	(40)	42.5	17.5	25.0	17.5	27.5	5.0	2.5	-	10.0
2차 조사	(40)	62.5	17.5	42.5	17.5	40.0	22.5	2.5	-	5.0
GAP	(40)	+20.0%p	-	+17.5%p	-	+12.5%p	+17.5%p	-	-	-5.0%p

1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편이나 비용 부담

문14.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비용이나 불편을 감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감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 최종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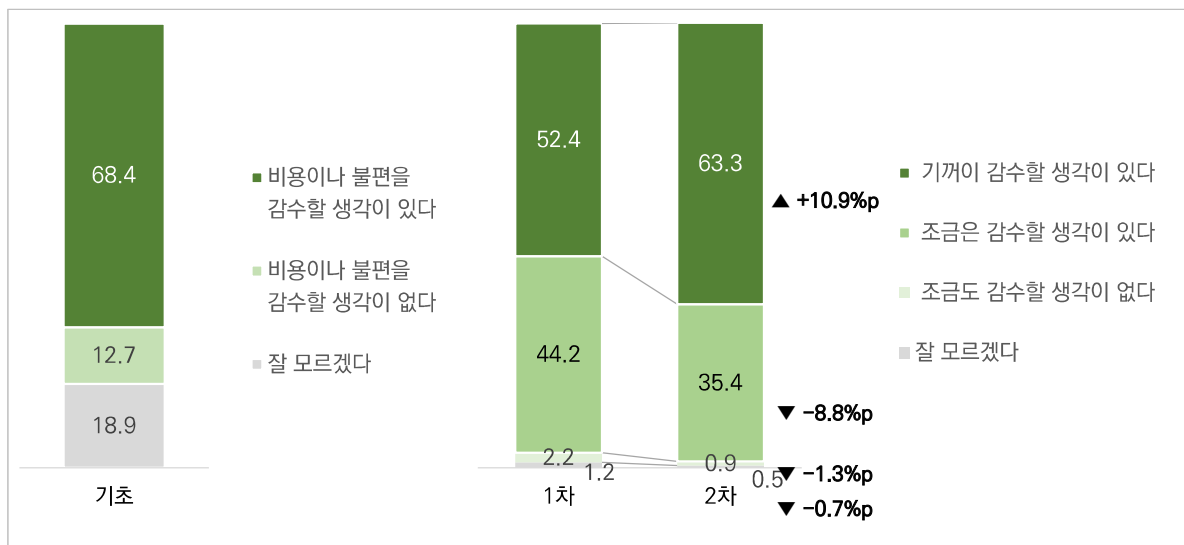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비용이나 불편에 대해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 있다' 63.3%, '조금은 감수할 생각이 있다' 35.4%로 나타난 가운데, '감수할 생각이 없다' 0.9%, '잘 모르겠다' 0.5%로 나타남.

○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

-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기초조사 당시 68.4%에서 2차조사 63.3%로 5.1%p 감소함.
- '조금은 감수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기초조사 당시 12.7%에서 2차조사 35.4%로 22.7%p 증가함.
- '감수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기초조사 당시 18.9%에서 2차조사 0.9%로 18.0%p 감소함.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편이나 비용 부담]

(n=312, 단위 : %)



○ 기초조사-2차 의견 변화 추이

- 기초조사에서 ‘비용이나 불편을 감수할 생각이 있다’ 응답자의 경우, 2차조사에서도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 있다’ 응답 비율이 66.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용 의향을 유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조사에서 ‘감수할 생각이 없다’ 응답자의 경우, 2차조사에서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 있다’로 전환된 비율이 51.3%로 나타나, 속의 이후의 변화가 확인됨.
- 기초조사에서 ‘모름’ 응답자의 경우, 2차조사에서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 있다’로 응답한 비율이 59.3%로 나타나, 속의 과정을 통해 긍정적 방향으로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편이나 비용 부담 기초조사-2차 조사 의견 변화]

구분		2차 조사				전체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 있다	조금은 감수할 생각이 있다	조금도 감수할 생각이 없다	모름		
기초 조사	비용이나 불편을 감수할 생각이 있다	명	142	70	1	0	213
		(%)	66.7%	32.9%	0.5%	0.0%	100.0%
	비용이나 불편을 감수할 생각이 없다	명	20	17	1	1	39
		(%)	51.3%	43.6%	2.6%	2.6%	100.0%
	모름	명	35	23	0	1	59
		(%)	59.3%	39.0%	0.0%	1.7%	100.0%
전체	명	197	110	2	2	311	
	(%)	63.3%	35.4%	0.6%	0.6%	100.0%	

* 가중치로 인해 소수점 한자리 반올림 결과 합계가 311명으로 제시됨

○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분석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 있다'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 있다'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60대(75.6%)와 70세 이상(78.1%)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에서는 '조금은 감수할 생각이 있다' 응답 비율이 61.4%로 더 높게 나타나 연령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됨.
- 권역별로는 전반적으로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 있다' 응답이 높은 편이나, 지역 간 차이가 일부 존재함.
 - 대구/경북(78.3%)과 부산/울산/경남(72.7%)에서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 있다'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인천/경기(54.8%)에서는 '조금은 감수할 생각이 있다' 응답 비율이 42.0%로 다소 높게 나타남.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편이나 비용 부담]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 있다	조금은 감수할 생각이 있다	조금도 감수할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312)	63.3	35.4	0.9	0.5
성별	남성	(155)	61.4	35.8	1.8	1.0
	여성	(157)	65.1	34.9	0.0	0.0
연령	15-19세	(16)	43.4	53.1	3.5	0.0
	20-29세	(39)	32.4	61.4	2.2	4.0
	30-39세	(45)	53.2	43.7	3.1	0.0
	40-49세	(51)	65.4	34.6	0.0	0.0
	50-59세	(59)	71.4	28.6	0.0	0.0
	60-69세	(54)	75.6	24.4	0.0	0.0
	70세 이상	(48)	78.1	21.9	0.0	0.0
권역	서울	(58)	61.2	38.8	0.0	0.0
	인천/경기	(101)	54.8	42.0	2.2	1.0
	대전/충청/강원	(43)	66.7	33.3	0.0	0.0
	광주/전라/제주	(34)	61.2	38.8	0.0	0.0
	대구/경북	(30)	78.3	21.7	0.0	0.0
	부산/울산/경남	(46)	72.7	24.8	1.2	1.3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비용 부담 수용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가운데,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 있다’ 응답이 1차(30.0%)에서 2차(45.0%)로 증가하여 부담 수용 의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조금은 감수할 생각이 있다’ 응답은 1차(62.5%)에서 2차(52.5%)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일정 수준의 비용 부담에 대한 수용 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조금도 감수할 생각이 없다’ 응답은 2차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고, ‘잘 모르겠다’ 응답도 5.0%에서 2.5%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비용 부담에 대한 태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해진 것으로 나타남.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편이나 비용 부담 미래세대 응답 비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 있다	조금은 감수할 생각이 있다	조금도 감수할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1차 조사	(40)	30.0	62.5	2.5	5.0
2차 조사	(40)	45.0	52.5	-	2.5
GAP	(40)	+15.0%p	-10.0%p	-2.5%p	-2.5%p

11.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의 관련성 인식

문15. 귀하께서는 기후위기와 경제구조가 얼마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종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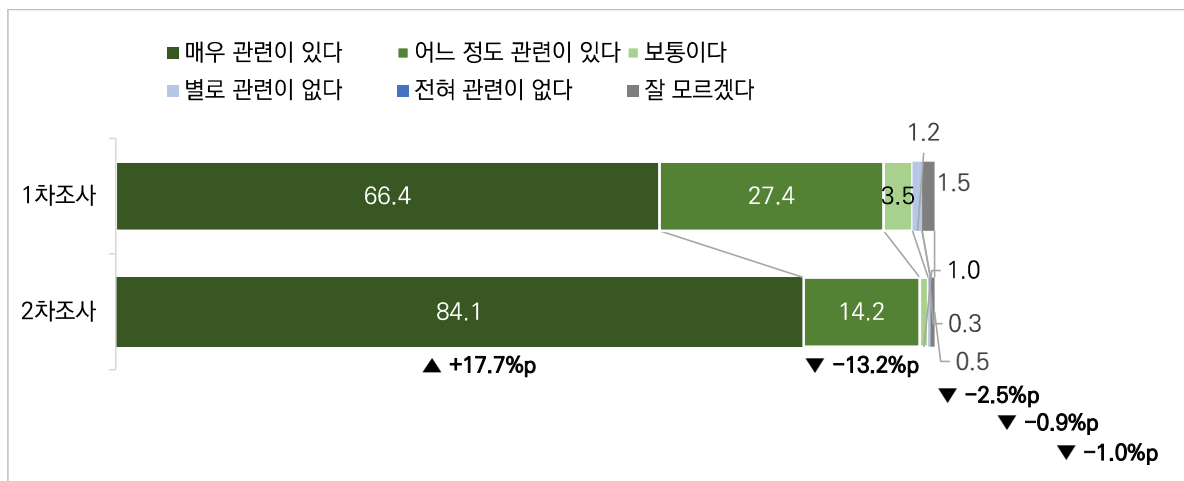
-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의 관련성 인식에 대한 최종 조사에서는 ‘매우 관련이 있다’ 84.1%,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14.2%, ‘보통이다’ 1.0%, ‘별로 관련이 없다’ 0.3%, ‘잘 모르겠다’ 0.5%로 나타남.

○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

- ‘매우 관련이 있다’는 응답은 1차조사 당시 66.4%에서 2차조사 84.1%로 17.7%p 증가함.
-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응답은 1차조사 당시 27.4%에서 2차조사 14.2%로 13.2%p 감소함.
- ‘보통이다’는 응답은 1차조사 당시 3.5%에서 2차조사 1.0%로 2.5%p 감소함.
- ‘별로 관련이 없다’는 응답은 1차조사 당시 1.2%에서 2차조사 0.3%로 0.9%p 감소함.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의 관련성 인식]

(n=312, 단위 : %)



○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분석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관련 있음(매우+어느 정도)’의 비율이 각각 97.5%, 99.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관련 있음’ 응답 비율이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15-19세(92.4%)와 20대(93.2%)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보통이다’ 또는 ‘관련 없음’ 응답이 일부 나타나 연령 간 인식 차이가 일부 확인됨.
- 권역별로는 전반적으로 ‘관련 있음’ 응답이 매우 높으며, 광주/전라/제주에서는 ‘잘 모르겠다’ 응답(4.7%)이 일부 나타나 지역 간 차이가 일부 존재함.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의 관련성 인식]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관련 있음 (매우+어느 정도)	보통이다	관련 없음 (별로+전혀)	잘 모르겠다
전체		(312)	98.3	1.0	0.3	0.5
성별	남성	(155)	97.5	2.0	0.5	0.0
	여성	(157)	99.0	0.0	0.0	1.0
연령	15-19세	(16)	92.4	7.6	0.0	0.0
	20-29세	(39)	93.2	4.7	2.2	0.0
	30-39세	(45)	100.0	0.0	0.0	0.0
	40-49세	(51)	100.0	0.0	0.0	0.0
	50-59세	(59)	100.0	0.0	0.0	0.0
	60-69세	(54)	100.0	0.0	0.0	0.0
	70세 이상	(48)	96.7	0.0	0.0	3.3
권역	서울	(58)	100.0	0.0	0.0	0.0
	인천/경기	(101)	97.4	1.8	0.8	0.0
	대전/충청/강원	(43)	100.0	0.0	0.0	0.0
	광주/전라/제주	(34)	95.3	0.0	0.0	4.7
	대구/경북	(30)	97.8	2.2	0.0	0.0
	부산/울산/경남	(46)	98.8	1.2	0.0	0.0

○ 응답자 특성별 의견 변화

- 성별로는 남녀 모두 1차조사 대비 2차조사에서 ‘관련 있음’ 응답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남성은 93.3%에서 97.5%로 증가하고, 여성은 94.2%에서 99.0%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관련성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관련 있음’ 응답 비율이 증가함.
 - 20대는 81.2%에서 93.2%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남.
 - 70세 이상을 제외한, 30대 이상에서는 2차조사 기준 100.0%로 나타나 관련성 인식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수렴함.
- 권역별로는 전반적으로 ‘관련 있음’ 응답 비율이 상승함.
 - 대전/충청/강원은 89.6%에서 100.0%로 증가함.
 - 부산/울산/경남은 91.0%에서 98.8%로 증가함.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의 관련성 인식에 대한 차수별 응답 변화]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관련 있음 (매우+어느 정도)		보통이다		관련 없음 (별로+전혀)		잘 모르겠다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전체	(312)	93.8	98.3	3.5	1.0	1.2	0.3	1.5	0.5	
성별	남성	(155)	93.3	97.5	4.5	2.0	1.8	0.5	0.4	0.0
	여성	(157)	94.2	99.0	2.5	0.0	0.7	0.0	2.6	1.0
연령	15-19세	(16)	86.7	92.4	5.9	7.6	4.0	0.0	3.4	0.0
	20-29세	(39)	81.2	93.2	15.1	4.7	0.0	2.2	3.7	0.0
	30-39세	(45)	93.2	100.0	4.5	0.0	0.0	0.0	2.4	0.0
	40-49세	(51)	95.7	100.0	0.0	0.0	4.3	0.0	0.0	0.0
	50-59세	(59)	96.4	100.0	3.6	0.0	0.0	0.0	0.0	0.0
	60-69세	(54)	100.0	100.0	0.0	0.0	0.0	0.0	0.0	0.0
	70세 이상	(48)	94.5	96.7	0.0	0.0	2.1	0.0	3.3	3.3
권역	서울	(58)	96.8	100.0	1.1	0.0	0.0	0.0	2.0	0.0
	인천/경기	(101)	94.5	97.4	4.5	1.8	1.0	0.8	0.0	0.0
	대전/충청/강원	(43)	89.6	100.0	6.5	0.0	1.5	0.0	2.5	0.0
	광주/전라/제주	(34)	92.3	95.3	0.0	0.0	3.0	0.0	4.7	4.7
	대구/경북	(30)	97.3	97.8	0.0	2.2	0.0	0.0	2.7	0.0
	부산/울산/경남	(46)	91.0	98.8	6.4	1.2	2.5	0.0	0.0	0.0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의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관련 있음' 응답이 1차(82.5%)에서 2차(90.0%)로 증가하여 두 위기 간 연계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이다' 응답은 1차(5.0%)에서 2차(7.5%)로 소폭 증가한 반면, '관련 없다' 응답은 2차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 응답은 1차(7.5%)에서 2차(2.5%)로 감소하여, 속의 이후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명확해진 것으로 나타남.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의 관련성 인식 미래세대 응답 비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관련 있음 (매우+어느 정도)	보통이다	관련 없음 (별로+전혀)	잘 모르겠다
1차 조사	(40)	82.5	5.0	5.0	7.5
2차 조사	(40)	90.0	7.5	-	2.5
GAP	(40)	+7.5%p	+2.5%p	-5.0%p	-5.0%p

12.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구조나 체계 전환에 대한 입장

문16.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제구조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입장에 공감하십니까?

○ 최종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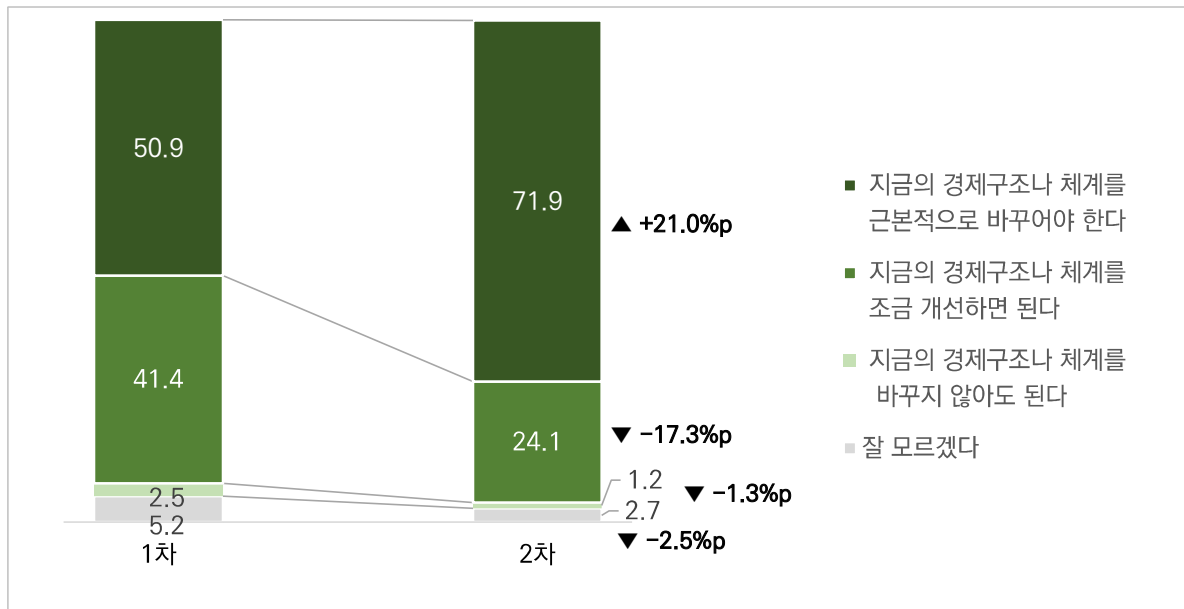
- 경제구조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이 7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조금 개선하면 된다’는 24.1%로 나타났으며, 근본적 변화 필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됨.

○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

-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응답은 1차 50.9%에서 2차 71.9%로 21.0%p 상승함.
- ‘조금 개선하면 된다’는 응답은 1차 41.4%에서 2차 24.1%로 17.3%p 감소함.
-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1차 2.5%에서 2차 1.2%로 소폭 감소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차 5.2%에서 2차 2.7%로 감소함.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구조나 체계 전환에 대한 입장]

(n=312, 단위 : %)



○ 1차-2차 의견 변화 추이

- 1차 조사에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을 선택한 응답자 159명 중 2차 조사에서도 동일 입장을 유지한 비율이 84.3%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는 ‘조금 개선하면 된다’(14.5%)로 이동함.
- 1차 조사에서 ‘조금 개선하면 된다’는 입장을 선택한 응답자 129명 중 2차 조사에서는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로 이동한 비율이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변화 방향으로의 이동이 확인됨.
- 1차 조사에서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자 8명 중 2차 조사에서는 ‘조금 개선하면 된다’ 5명(62.5%),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1명(12.5%)으로 이동하여, 전반적으로 변화 필요 인식이 확대됨.
- 1차 조사에서 ‘모름’ 응답자 16명 중 2차 조사에서는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6명(37.5%), ‘조금 개선하면 된다’ 5명(31.3%)으로 응답이 분산되며, 유보층 일부가 변화 필요 입장으로 이동함.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구조나 체계 전환에 대한 입장 1차-2차 조사 의견 변화]

구분			2차 조사				전체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조금 개선하면 된다	바꾸지 않아도 된다	모름	
1차 조사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명	134	23	1	1	159
		(%)	84.3%	14.5%	0.6%	0.6%	100.0%
	조금 개선하면 된다	명	84	42	1	2	129
		(%)	65.1%	32.6%	0.8%	1.6%	100.0%
	바꾸지 않아도 된다	명	1	5	2	0	8
		(%)	12.5%	62.5%	25.0%	0.0%	100.0%
	모름	명	6	5	0	5	16
		(%)	37.5%	31.3%	0.0%	31.3%	100.0%
전체		명	225	75	4	8	312
		(%)	72.1%	24.0%	1.3%	2.6%	100.0%

○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분석

- 성별로는 남성(73.9%)과 여성(70.0%) 모두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다소 높음.
- 연령별로는 40-49세(85.0%), 50-59세(79.7%), 60-69세(79.2%)에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20-29세는 ‘조금 개선하면 된다’ 비율이 40.0%로 타 연령 대비 높게 나타남.
-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대구/경북(86.7%)에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울산/경남(28.1%), 서울(26.6%)은 ‘조금 개선하면 된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구조나 체계 전환에 대한 입장]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조금 개선하면 된다	바꾸지 않아도 된다	잘 모르겠다	
전체	(312)	71.9	24.1	1.2	2.7	
성별	남성	(155)	73.9	21.5	2.5	2.2
	여성	(157)	70.0	26.8	0.0	3.2
연령	15-19세	(16)	54.9	38.4	3.5	3.2
	20-29세	(39)	51.2	40.0	3.9	4.9
	30-39세	(45)	72.9	22.0	0.0	5.1
	40-49세	(51)	85.0	15.0	0.0	0.0
	50-59세	(59)	79.7	18.6	0.0	1.8
	60-69세	(54)	79.2	17.5	3.3	0.0
	70세 이상	(48)	61.8	32.7	0.0	5.5
권역	서울	(58)	69.9	26.6	0.0	3.5
	인천/경기	(101)	70.3	23.9	2.6	3.2
	대전/충청/강원	(43)	68.6	27.4	1.5	2.4
	광주/전라/제주	(34)	73.0	22.3	0.0	4.7
	대구/경북	(30)	86.7	11.6	0.0	1.7
	부산/울산/경남	(46)	70.7	28.1	1.2	0.0

○ 응답자 특성별 의견 변화

- 성별로는 남녀 모두 1차 조사 대비 2차 조사에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응답이 증가한 가운데, 남성은 47.4%→73.9%로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남. 여성 또한 54.3%→70.0%로 증가하며 변화 필요 인식이 강화됨.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응답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30~50대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며 변화 필요 인식이 뚜렷하게 강화됨. 반면 20대는 ‘조금 개선하면 된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됨.
-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응답이 증가한 가운데, 대전/충청/강원(55.7%→68.6%), 광주/전라/제주(45.1%→73.0%)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한편 부산/울산/경남은 ‘조금 개선하면 된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구조나 체계 전환에 대한 입장 차수별 응답 변화]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조금 개선하면 된다		바꾸지 않아도 된다		잘 모르겠다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전체	(312)	50.9	71.9	41.4	24.1	2.5	1.2	5.2	2.7	
성별	남성	(155)	47.4	73.9	43.4	21.5	3.9	2.5	5.3	2.2
	여성	(157)	54.3	70.0	39.5	26.8	1.1	0.0	5.1	3.2
연령	15-19세	(16)	21.8	54.9	58.5	38.4	13.6	3.5	6.1	3.2
	20-29세	(39)	22.7	51.2	53.4	40.0	7.7	3.9	16.2	4.9
	30-39세	(45)	50.4	72.9	38.1	22.0	1.9	0.0	9.6	5.1
	40-49세	(51)	54.2	85.0	45.8	15.0	0.0	0.0	0.0	0.0
	50-59세	(59)	58.5	79.7	35.3	18.6	0.0	0.0	6.2	1.8
	60-69세	(54)	65.9	79.2	30.8	17.5	3.3	3.3	0.0	0.0
	70세 이상	(48)	54.0	61.8	43.8	32.7	0.0	0.0	2.2	5.5
권역	서울	(58)	49.8	69.9	40.2	26.6	3.8	0.0	6.3	3.5
	인천/경기	(101)	49.8	70.3	42.6	23.9	2.3	2.6	5.2	3.2
	대전/충청/강원	(43)	55.7	68.6	33.4	27.4	2.5	1.5	8.5	2.4
	광주/전라/제주	(34)	45.1	73.0	45.2	22.3	4.8	0.0	4.9	4.7
	대구/경북	(30)	54.2	86.7	45.8	11.6	0.0	0.0	0.0	1.7
	부산/울산/경남	(46)	52.1	70.7	42.1	28.1	1.2	1.2	4.5	0.0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구조·체계 전환에 대한 인식은 속의 전후로 변화가 나타나며,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응답이 1차(35.0%)에서 2차(65.0%)로 크게 증가함.
- 반면, '조금 개선하면 된다' 응답은 1차(50.0%)에서 2차(32.5%)로 감소하여, 속의 이후 보다 근본적인 구조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응답은 1차와 2차 모두 2.5%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잘 모르겠다' 응답은 1차(12.5%)에서 2차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으로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보다 명확해진 것으로 나타남.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구조나 체계 전환에 대한 입장 미래세대 응답 비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조금 개선하면 된다	바꾸지 않아도 된다	잘 모르겠다
1차 조사	(40)	35.0	50.0	2.5	12.5
2차 조사	(40)	65.0	32.5	2.5	-
GAP	(40)	+30.0%p	-17.5%p	-	-12.5%p

13. 탄소중립 추진의 필요 비용 부담 방법

문17. 귀하는 탄소중립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종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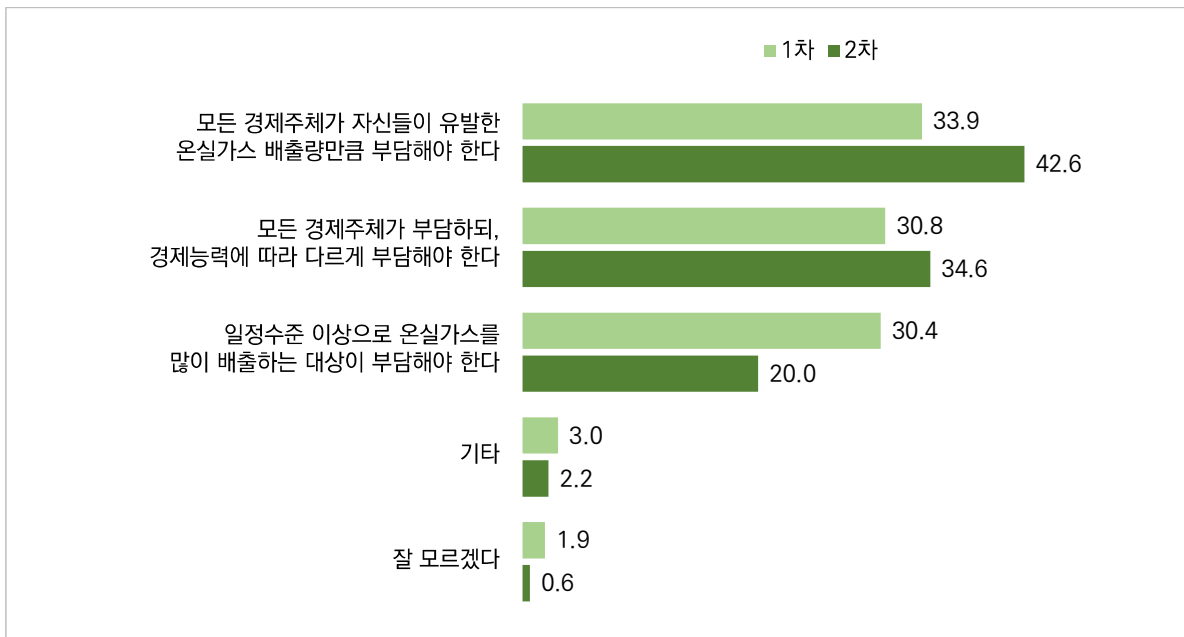
- 탄소중립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과 관련해, ‘자신들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34.6%)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일정 수준 이상 배출자만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20.0%)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

- ‘자신들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차 33.9%에서 2차 42.6%로 8.7%p 상승함.
- ‘경제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차 30.8%에서 2차 34.6%로 3.8%p 상승함.
- ‘일정 수준 이상 배출자만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차 30.4%에서 2차 20.0%로 10.4%p 감소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차 1.9%에서 2차 0.6%로 감소함.

[탄소중립 추진의 필요 비용 부담 방법]

(n=312, 단위 : %)



○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분석

- 성별로는 남성(40.0%)과 여성(45.2%) 모두 ‘자신들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음.
- 연령별로는 60-69세(58.1%), 70세 이상(52.9%), 50-59세(45.5%)에서 ‘자신들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부담해야 한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30-39세는 ‘경제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 (37.8%)과 ‘일정 수준 이상 배출자만 부담’ (33.0%)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3.5%), 대구/경북(50.6%)에서 ‘자신들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전라/제주는 ‘경제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해야 한다는 (46.1%)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

[탄소중립 추진의 필요 비용 부담 방법]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모든 경제주체가 자신들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부담해야 한다	모든 경제주체가 부담하되, 경제능력에 따라 다르게 부담해야 한다	일정수준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상이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잘 모르겠다	
전체	(312)	42.6	34.6	20.0	2.2	0.6	
성별	남성	(155)	40.0	35.3	19.5	4.5	0.6
	여성	(157)	45.2	33.8	20.4	0.0	0.5
연령	15-19세	(16)	34.9	38.6	26.6	0.0	0.0
	20-29세	(39)	29.6	37.9	24.1	3.7	4.7
	30-39세	(45)	29.3	37.8	33.0	0.0	0.0
	40-49세	(51)	37.7	35.7	23.8	2.9	0.0
	50-59세	(59)	45.5	29.6	21.0	3.9	0.0
	60-69세	(54)	58.1	28.4	10.2	3.3	0.0
	70세 이상	(48)	52.9	39.2	7.9	0.0	0.0
권역	서울	(58)	43.4	35.0	21.6	0.0	0.0
	인천/경기	(101)	40.5	37.9	14.5	5.3	1.8
	대전/충청/강원	(43)	40.0	34.0	26.0	0.0	0.0
	광주/전라/제주	(34)	29.2	46.1	24.7	0.0	0.0
	대구/경북	(30)	50.6	34.1	15.3	0.0	0.0
	부산/울산/경남	(46)	53.5	19.0	24.0	3.4	0.0

○ 응답자 특성별 의견 변화

- 성별로는 남녀 모두 1차 조사 대비 2차 조사에서 ‘자신들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증가한 가운데, 남성은 36.9%→40.0%, 여성은 30.9%→45.2%로 나타나 여성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5-19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신들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20대(18.6%→29.6%), 60대(34.9%→58.1%)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 권역별로는 대부분 권역에서 ‘자신들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증가한 가운데, 인천/경기(25.7%→40.5%), 부산/울산/경남(44.4%→53.5%)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반면 대구/경북(62.8%→50.6%)과 광주/전라/제주(29.9%→29.2%)는 감소하며 타 권역과 다른 양상을 보임.

[탄소중립 추진의 필요 비용 부담 방법 차수별 응답 변화]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모든 경제주체가 자신들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부담해야 한다		모든 경제주체가 부담하되, 경제능력에 따라 다르게 부담해야 한다		일정수준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상이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잘 모르겠다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전체	(312)	33.9	42.6	30.8	34.6	30.4	20.0	3.0	2.2	1.9	0.6	
성별	남성	(155)	36.9	40.0	35.6	35.3	21.4	19.5	4.8	4.5	1.2	0.6
	여성	(157)	30.9	45.2	26.0	33.8	39.2	20.4	1.2	0.0	2.7	0.5
연령	15-19세	(16)	35.5	34.9	30.7	38.6	29.0	26.6	0.0	0.0	4.8	0.0
	20-29세	(39)	18.6	29.6	23.8	37.9	52.9	24.1	4.7	3.7	0.0	4.7
	30-39세	(45)	26.3	29.3	35.0	37.8	34.4	33.0	4.2	0.0	0.0	0.0
	40-49세	(51)	30.3	37.7	35.4	35.7	24.8	23.8	7.6	2.9	1.9	0.0
	50-59세	(59)	39.8	45.5	34.5	29.6	22.9	21.0	0.0	3.9	2.7	0.0
	60-69세	(54)	34.9	58.1	30.7	28.4	31.1	10.2	3.3	3.3	0.0	0.0
	70세 이상	(48)	48.3	52.9	22.9	39.2	23.3	7.9	0.0	0.0	5.6	0.0
권역	서울	(58)	28.2	43.4	30.6	35.0	36.1	21.6	1.6	0.0	3.5	0.0
	인천/경기	(101)	25.7	40.5	32.8	37.9	35.0	14.5	5.0	5.3	1.6	1.8
	대전/충청/강원	(43)	32.6	40.0	26.4	34.0	31.9	26.0	5.4	0.0	3.7	0.0
	광주/전라/제주	(34)	29.9	29.2	45.3	46.1	22.5	24.7	0.0	0.0	2.3	0.0
	대구/경북	(30)	62.8	50.6	25.9	34.1	11.2	15.3	0.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46)	44.4	53.5	23.1	19.0	30.1	24.0	2.4	3.4	0.0	0.0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추진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한 인식은 속의 전후로 변화가 나타나며, ‘모든 경제주체가 배출량만큼 부담해야 한다’ 응답이 1차(30.0%)에서 2차(47.5%)로 증가하여, 책임에 비례한 부담 원칙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경제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해야 한다’ 응답은 1차(27.5%)에서 2차(17.5%)로 감소하고, ‘일정 수준 이상 배출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응답도 1차(35.0%)에서 2차(25.0%)로 감소하여, 특정 집단 중심 부담 방식에 대한 선호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 응답은 1차(7.5%)에서 2차(10.0%)로 소폭 증가하여, 일부 응답에서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한 판단 유보 경향도 나타남.

[탄소중립 추진의 필요 비용 부담 방법 미래세대 응답 비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모든 경제주체가 자신들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부담해야 한다	모든 경제주체가 부담하되, 경제능력에 따라 다르게 부담해야 한다	일정수준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상이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잘 모르겠다
1차 조사	(40)	30.0	27.5	35.0	-	7.5
2차 조사	(40)	47.5	17.5	25.0	-	10.0
GAP	(40)	+17.5%p	-10.0%p	-10.0%p	-	+2.5%p

14.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고려사항

문18. 귀하는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종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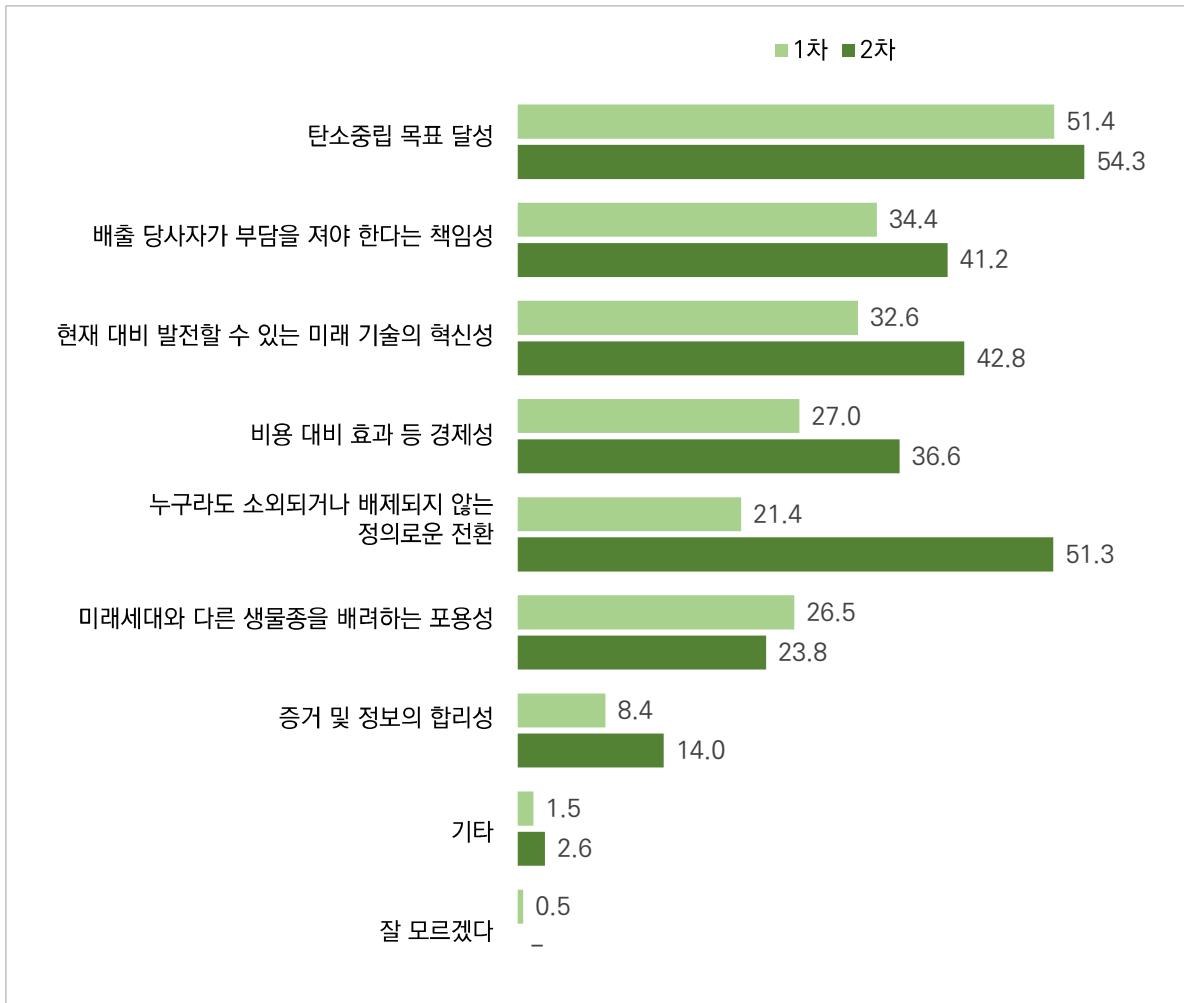
-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누구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51.3%)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배출 당사자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책임성’(41.2%), ‘현재 대비 발전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의 혁신성’(42.8%), ‘비용 대비 효과 등 경제성’(36.6%)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1차 51.4%에서 2차 54.3%로 2.9%p 상승함.
- ‘배출 당사자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책임성’은 1차 34.4%에서 2차 41.2%로 6.8%p 상승함.
- ‘현재 대비 발전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의 혁신성’은 1차 32.6%에서 2차 42.8%로 10.2%p 상승함.
- ‘비용 대비 효과 등 경제성’은 1차 27.0%에서 2차 36.6%로 9.6%p 상승함.
- ‘누구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은 1차 21.4%에서 2차 51.3%로 29.9%p 상승함.
- ‘미래세대와 다른 생물종을 배려하는 포용성’은 1차 26.5%에서 2차 23.8%로 소폭 감소함.
- ‘증거 및 정보의 합리성’은 1차 8.4%에서 2차 14.0%로 상승함.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고려사항]

(n=312, 복수응답, 단위 : %)



○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분석

- 성별로는 남성(49.8%)과 여성(58.6%) 모두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음.
- 연령별로는 30대와 50대에서 ‘누구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30대 62.3%, 50대 63.4%), 2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20대 39.6%, 70세 이상 37.7%).
- 권역별로는 전반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누구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응답이 높은 가운데, 광주/전라/제주는 ‘기술의 혁신성’(66.2%)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고려사항]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배출 당사자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책임성	현재 대비 발전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의 혁신성	비용 대비 효과 등 경제성	누구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미래세대와 다른 생물종을 배려하는 포용성	증거 및 정보의 합리성	기타	잘 모르겠다
전체	(312)	54.3	41.2	42.8	36.6	51.3	23.8	14.0	2.6	-
성별	남성 (155)	49.8	37.5	43.5	34.5	50.2	24.5	13.7	3.0	-
	여성 (157)	58.6	44.9	42.1	38.6	52.4	23.1	14.3	2.2	-
연령	15-19세 (16)	48.1	41.1	24.4	50.7	50.5	22.1	15.7	0.0	-
	20-29세 (39)	54.0	32.2	46.6	36.3	39.6	20.6	26.5	1.9	-
	30-39세 (45)	56.1	45.9	51.3	39.3	62.3	29.8	14.9	5.1	-
	40-49세 (51)	56.2	47.7	46.6	41.4	54.6	22.0	21.0	4.4	-
	50-59세 (59)	52.7	33.8	55.4	33.2	63.4	27.5	12.0	3.5	-
	60-69세 (54)	45.4	40.5	20.6	39.3	46.5	24.0	11.7	0.0	-
	70세 이상 (48)	64.7	47.0	43.4	25.6	37.7	18.7	0.0	1.7	-
권역	서울 (58)	52.6	53.2	39.8	42.6	50.5	20.8	10.4	2.7	-
	인천/경기 (101)	49.5	34.2	40.1	39.4	59.0	30.4	16.4	4.7	-
	대전/충청/강원 (43)	46.9	33.1	27.2	33.7	44.1	21.0	16.9	0.0	-
	광주/전라/제주 (34)	55.4	41.5	66.2	40.9	45.9	17.7	13.2	0.0	-
	대구/경북 (30)	67.8	42.9	40.7	39.1	54.9	30.4	23.7	0.0	-
	부산/울산/경남 (46)	64.2	47.9	51.2	21.1	43.9	16.1	4.9	3.9	-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전반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1차(57.5%)에서 2차(65.0%)로 증가하여 목표 달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배출 당사자의 책임성'은 1차(15.0%)에서 2차(25.0%)로 증가하고, '정의로운 전환' 역시 12.5%에서 25.0%로 증가하여, 책임성과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미래 기술의 혁신성'(15.0%→17.5%)과 '포용성'(15.0%→20.0%)도 증가한 반면, '경제성'은 1차(32.5%)에서 2차(17.5%)로 감소하여, 속의 이후 비용 중심 고려보다는 가치 및 책임 중심 요소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것으로 나타남.
- '증거 및 정보의 합리성'과 '잘 모르겠다' 응답은 동일 수준을 유지하여, 일부 응답에서는 인식 변화 없이 기존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보임.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고려사항 미래세대 응답 비율]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배출 당사자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책임성	현재 대비 발전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의 혁신성	비용 대비 효과 등 경제성	누구라도 소외 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미래세대와 다른 생물종을 배려하는 포용성	증거 및 정보의 합리성	기타	잘 모르겠다
1차 조사	(40)	57.5	15.0	15.0	32.5	12.5	15.0	2.5	-	5.0
2차 조사	(40)	65.0	25.0	17.5	17.5	25.0	20.0	2.5	-	5.0
GAP	(40)	+7.5%p	+10.0%p	+2.5%p	-15.0%p	+12.5%p	+5.0%p	-	-	-

15.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가장 우선시행되어야 할 정책

문19.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이나 기업은 축소되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나 해당 기업이 있는 지역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및 지역이 배제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란 원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종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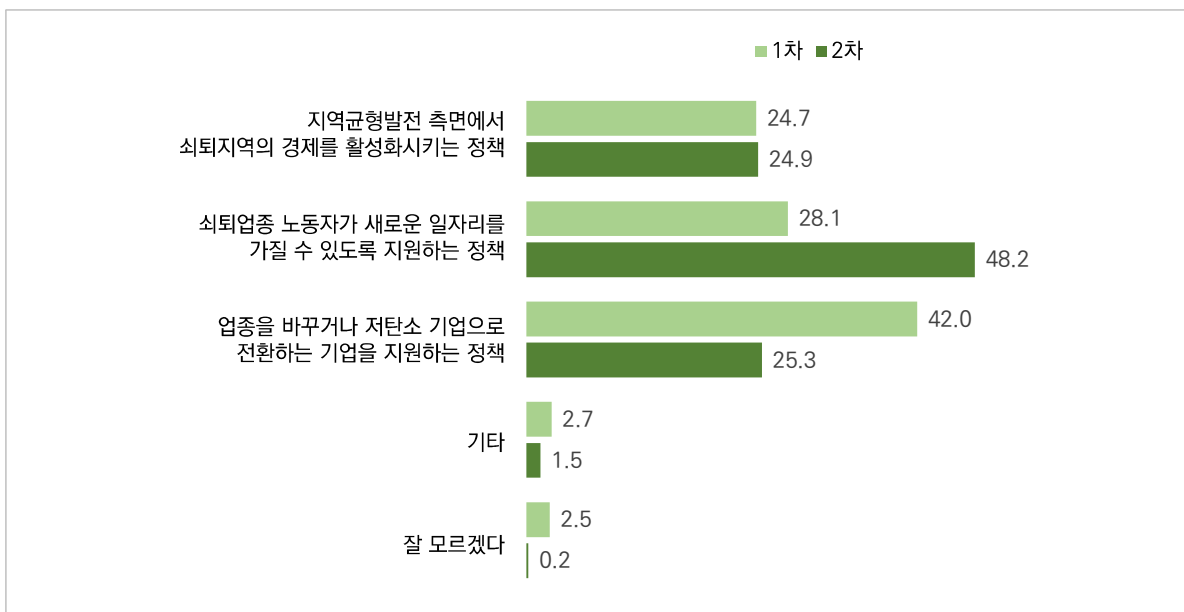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쇠퇴업종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기업 전환 지원’ 25.3%, ‘쇠퇴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24.9% 순으로 나타남.

○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

- ‘쇠퇴업종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1차 28.1%에서 2차 48.2%로 20.1%p 상승함.
- ‘쇠퇴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은 1차 24.7%에서 2차 24.9%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됨.
- ‘업종·기업 전환 지원’은 1차 42.0%에서 2차 25.3%로 16.7%p 감소함.
-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차 2.5%에서 2차 0.2%로 감소함.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가장 우선시행되어야 할 정책]

(n=312, 단위 : %)



○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분석

- 성별로는 남성(46.5%)과 여성(49.8%) 모두 '퇴직업종 노동자의 일자리 지원'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음.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퇴직업종 노동자의 일자리 지원'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30-39세(61.9%), 15-19세(53.1%), 60-69세(52.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20대와 40대, 50대는 '업종을 바꾸거나 저탄소 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퇴직업종 노동자의 일자리 지원'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은 '업종을 바꾸거나 저탄소 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34.9%)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가장 우선시행되어야 할 정책]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쇠퇴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	퇴직업종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업종을 바꾸거나 저탄소 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기타	잘 모르겠다	
전체	(312)	24.9	48.2	25.3	1.5	0.2	
성별	남성	(155)	27.1	46.5	23.7	2.5	0.4
	여성	(157)	22.7	49.8	26.9	0.6	0.0
연령	15-19세	(16)	17.1	53.1	26.3	0.0	3.6
	20-29세	(39)	19.4	45.0	31.1	4.4	0.0
	30-39세	(45)	16.7	61.9	16.7	4.8	0.0
	40-49세	(51)	25.6	41.5	32.9	0.0	0.0
	50-59세	(59)	26.0	43.1	31.0	0.0	0.0
	60-69세	(54)	28.4	52.3	19.3	0.0	0.0
	70세 이상	(48)	33.5	44.8	20.1	1.7	0.0
권역	서울	(58)	23.4	49.6	27.0	0.0	0.0
	인천/경기	(101)	26.7	49.6	20.9	2.8	0.0
	대전/충청/강원	(43)	22.3	47.6	26.8	1.9	1.3
	광주/전라/제주	(34)	16.9	55.4	27.6	0.0	0.0
	대구/경북	(30)	26.4	53.2	17.1	3.4	0.0
	부산/울산/경남	(46)	29.8	35.2	34.9	0.0	0.0

○ 응답자 특성별 의견 변화

- 성별로는 남녀 모두 1차 조사 대비 2차 조사에서 ‘퇴직업종 노동자의 일자리 지원’ 응답이 증가한 가운데, 남성은 32.0%→46.5%, 여성은 24.3%→49.8%로 나타나 여성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퇴직업종 노동자의 일자리 지원’ 응답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20~30대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20대 29.2%→45.0%, 30대 28.4%→61.9%).
- 반면 ‘업종을 바꾸거나 저탄소 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응답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60대(42.1%→19.3%), 30-39세(54.5%→16.7%)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 권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퇴직업종 노동자의 일자리 지원’ 응답이 증가한 가운데, 광주/전라/제주(25.8%→55.4%), 대구/경북(11.9%→53.2%)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가장 우선시행되어야 할 정책 차수별 응답 변화]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퇴직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		퇴직업종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업종을 바꾸거나 저탄소 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기타		잘 모르겠다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전체	(312)	24.7	24.9	28.1	48.2	42.0	25.3	2.7	1.5	2.5	0.2	
성별	남성	(155)	23.6	27.1	32.0	46.5	37.4	23.7	4.2	2.5	2.8	0.4
	여성	(157)	25.7	22.7	24.3	49.8	46.6	26.9	1.2	0.6	2.2	0.0
연령	15-19세	(16)	16.3	17.1	51.2	53.1	26.5	26.3	0.0	0.0	6.0	3.6
	20-29세	(39)	27.6	19.4	29.2	45.0	36.5	31.1	4.7	4.4	2.1	0.0
	30-39세	(45)	12.7	16.7	28.4	61.9	54.5	16.7	4.4	4.8	0.0	0.0
	40-49세	(51)	22.0	25.6	24.9	41.5	49.0	32.9	4.1	0.0	0.0	0.0
	50-59세	(59)	20.5	26.0	28.0	43.1	45.0	31.0	0.0	0.0	6.4	0.0
	60-69세	(54)	29.9	28.4	24.7	52.3	42.1	19.3	3.3	0.0	0.0	0.0
	70세 이상	(48)	38.5	33.5	26.7	44.8	28.5	20.1	1.7	1.7	4.6	0.0
권역	서울	(58)	19.9	23.4	39.9	49.6	34.8	27.0	1.7	0.0	3.8	0.0
	인천/경기	(101)	26.9	26.7	27.2	49.6	41.1	20.9	3.5	2.8	1.3	0.0
	대전/충청/강원	(43)	22.3	22.3	34.5	47.6	39.6	26.8	2.3	1.9	1.3	1.3
	광주/전라/제주	(34)	28.1	16.9	25.8	55.4	42.3	27.6	0.0	0.0	3.8	0.0
	대구/경북	(30)	33.3	26.4	11.9	53.2	44.7	17.1	3.4	3.4	6.7	0.0
	부산/울산/경남	(46)	19.8	29.8	21.9	35.2	53.3	34.9	4.2	0.0	0.9	0.0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우선 시행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전반적으로 ‘쇠퇴업종 노동자의 재취업 지원’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1차(47.5%)에서 2차(57.5%)로 증가하여 해당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쇠퇴지역 경제 활성화’ 응답은 1차(15.0%)에서 2차(7.5%)로 감소하고, ‘기업의 업종 전환 및 저탄소 전환 지원’ 응답도 1차(27.5%)에서 2차(20.0%)로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자 중심 지원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 응답은 1차(7.5%)에서 2차(15.0%)로 증가하여, 일부 응답에서는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 유보가 확대된 것으로 보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가장 우선시행되어야 할 정책 미래세대 응답 비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쇠퇴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	쇠퇴업종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업종을 바꾸거나 저탄소 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기타	잘 모르겠다
1차 조사	(40)	15.0	47.5	27.5	2.5	7.5
2차 조사	(40)	7.5	57.5	20.0	-	15.0
GAP	(40)	-7.5%p	+10.0%p	-7.5%p	-2.5%p	+7.5%p

16. 탄소중립 추진 주체

문20.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체는 다음 중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순위까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최종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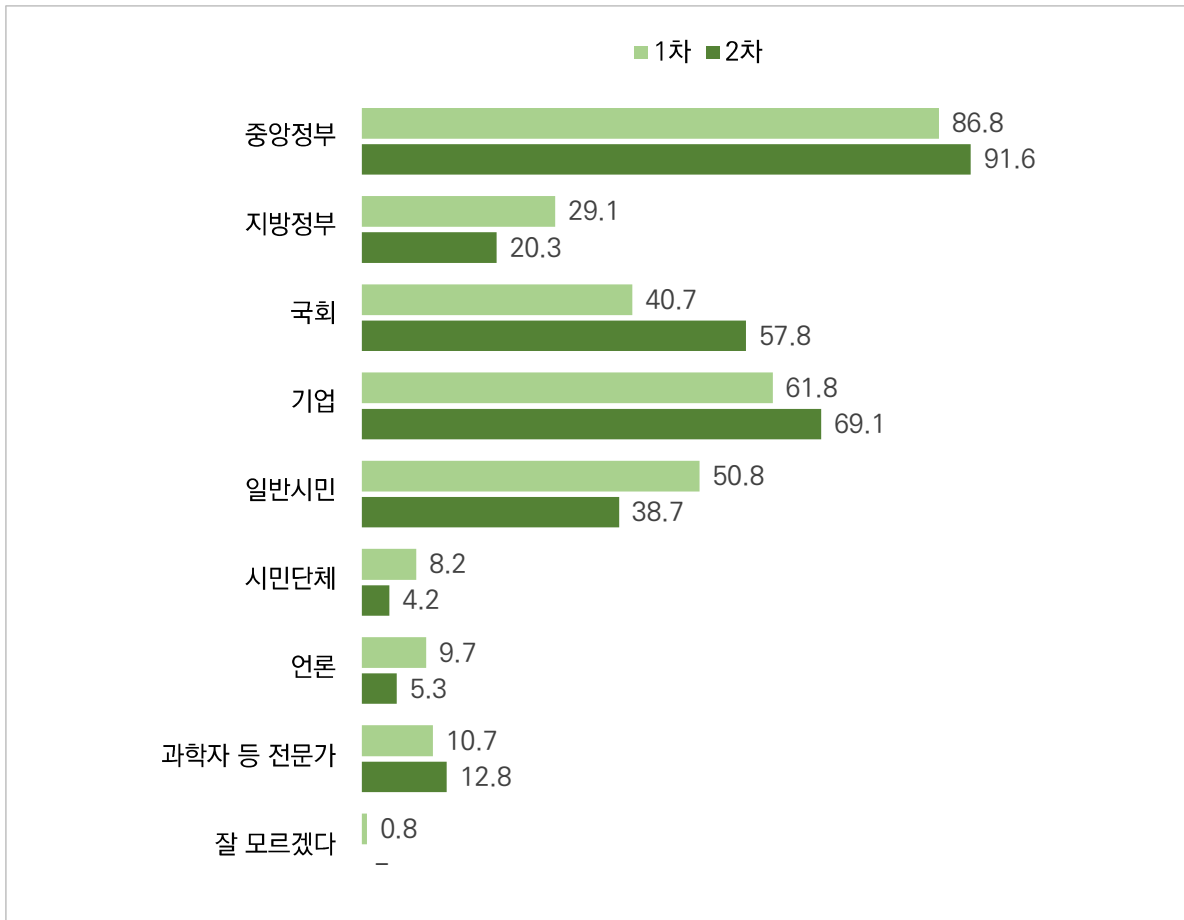
-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체로는 ‘중앙정부’가 9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기업’ 69.1%, ‘국회’ 57.8% 순으로 나타남.
- ‘일반시민’(38.7%), ‘지방정부’(20.3%)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

- ‘중앙정부’는 1차 86.8%에서 2차 91.6%로 4.8%p 상승함.
- ‘기업’은 1차 61.8%에서 2차 69.1%로 7.3%p 상승함.
- ‘국회’는 1차 40.7%에서 2차 57.8%로 17.1%p 상승함.
- ‘일반시민’은 1차 50.8%에서 2차 38.7%로 12.1%p 감소함.
- ‘지방정부’는 1차 29.1%에서 2차 20.3%로 8.8%p 감소함.
- ‘언론’은 1차 9.7%에서 2차 5.3%로 감소, ‘시민단체’는 1차 8.2%에서 2차 4.2%로 감소함.

[탄소중립 추진 주체(1+2+3순위)]

(n=312, 복수응답, 단위 : %)



○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분석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중앙정부를 탄소중립 추진의 주된 책임 주체로 인식하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남성(95.4%)이 여성(87.9%)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중앙정부를 탄소중립 추진의 주된 책임 주체로 인식하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40대(81.7%)와 30대(79.8%)에서는 기업을 탄소중립 추진 주체로 인식하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로는 대부분의 권역에서 중앙정부를 탄소중립 추진의 주된 책임 주체로 인식하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대전/충청/강원(95.7%), 인천/경기(95.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한편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회와 기업에 대한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탄소중립 추진 주체 (1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기업	일반시민	시민단체	언론	과학자 등 전문가	잘 모르겠다	
전체	(312)	59.3	0.6	22.4	9.4	5.6	0.2	0.5	2.1	-	
성별	남성	(155)	56.7	1.1	16.7	14.0	7.2	0.5	0.6	3.1	-
	여성	(157)	61.8	0.0	28.1	4.8	4.0	0.0	0.3	1.1	-
연령	15-19세	(16)	41.6	0.0	28.7	14.8	4.2	4.5	2.8	3.5	-
	20-29세	(39)	53.0	0.0	22.6	11.5	10.5	0.0	2.5	0.0	-
	30-39세	(45)	61.6	0.0	17.0	11.6	5.3	0.0	0.0	4.4	-
	40-49세	(51)	61.9	0.0	22.5	8.6	7.0	0.0	0.0	0.0	-
	50-59세	(59)	59.0	0.0	24.2	5.5	6.4	0.0	0.0	4.9	-
	60-69세	(54)	65.4	3.3	21.1	10.2	0.0	0.0	0.0	0.0	-
	70세 이상	(48)	58.6	0.0	24.6	8.5	5.9	0.0	0.0	2.4	-
권역	서울	(58)	49.7	0.0	39.6	4.0	3.0	0.0	0.8	3.0	-
	인천/경기	(101)	64.9	1.7	15.6	11.8	5.1	0.0	1.0	0.0	-
	대전/충청/강원	(43)	55.7	0.0	16.4	15.5	7.7	0.0	0.0	4.7	-
	광주/전라/제주	(34)	47.0	0.0	32.9	7.0	7.2	2.1	0.0	3.8	-
	대구/경북	(30)	58.6	0.0	11.3	13.7	13.0	0.0	0.0	3.4	-
	부산/울산/경남	(46)	71.7	0.0	21.2	4.1	1.7	0.0	0.0	1.2	-

[탄소중립 추진 주체 (1+2+3순위)]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기업	일반시민	시민단체	언론	과학자 등 전문가	잘 모르겠다	
전체	(312)	91.6	20.3	57.8	69.1	38.7	4.2	5.3	12.8	-	
성별	남성	(155)	95.4	21.8	51.6	66.3	39.7	3.6	6.7	15.0	-
	여성	(157)	87.9	18.9	63.9	72.0	37.7	4.8	4.0	10.7	-
연령	15-19세	(16)	88.7	17.4	56.6	65.1	47.5	12.1	6.3	6.2	-
	20-29세	(39)	92.4	16.9	62.8	70.2	32.8	4.1	12.9	8.0	-
	30-39세	(45)	93.2	23.9	54.7	79.8	27.7	0.0	1.9	18.8	-
	40-49세	(51)	88.2	13.6	46.0	81.7	46.8	3.6	6.4	13.8	-
	50-59세	(59)	92.8	16.7	60.8	58.0	44.4	2.2	5.6	19.5	-
	60-69세	(54)	92.1	18.3	68.1	72.7	35.4	5.8	0.0	7.6	-
	70세 이상	(48)	92.2	34.8	54.6	55.7	38.6	7.3	6.7	10.1	-
권역	서울	(58)	84.1	10.8	60.4	85.0	36.4	5.2	8.8	9.3	-
	인천/경기	(101)	95.7	23.6	55.2	62.0	40.4	2.9	7.9	12.3	-
	대전/충청/강원	(43)	95.7	17.3	58.9	72.2	38.9	0.0	1.5	15.6	-
	광주/전라/제주	(34)	87.4	25.4	54.7	75.9	37.1	8.7	0.0	10.7	-
	대구/경북	(30)	91.0	36.8	46.8	53.9	36.1	4.4	4.3	26.7	-
	부산/울산/경남	(46)	91.8	13.6	68.7	67.0	40.2	6.5	3.7	8.6	-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가 인식하는 탄소중립 추진 주체는 속의 전후로 변화가 나타나며, ‘중앙정부’ 응답이 1차(57.5%)에서 2차(85.0%)로 크게 증가하여 핵심 추진 주체로서의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정부’ 역시 1차(5.0%)에서 2차(35.0%)로 크게 증가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일반시민’은 1차(60.0%)에서 2차(42.5%)로 감소하고, ‘기업’도 57.5%에서 55.0%로 소폭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개인 및 민간 주체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국회’(45.0%→42.5%)와 ‘시민단체’(20.0%→20.0%)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전문가’는 22.5%에서 7.5%로 감소하여, 일부 주체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는 변화가 나타남.
- ‘잘 모르겠다’ 응답은 1차(7.5%)에서 2차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으로 추진 주체에 대한 인식이 보다 명확해진 것으로 나타남.

[탄소중립 추진 주체(1+2+3순위) 미래세대 응답 비율]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기업	일반시민	시민단체	언론	과학자 등 전문가	잘 모르겠다
1차 조사	(40)	57.5	5.0	45.0	57.5	60.0	20.0	10.0	22.5	7.5
2차 조사	(40)	85.0	35.0	42.5	55.0	42.5	20.0	12.5	7.5	-
GAP	(40)	+27.5%p	+30.0%p	-2.5%p	-2.5%p	-17.5%p	-	+2.5%p	-15.0%p	-7.5%p

17.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할

문2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회의 역할 가운데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 아래 보기에서 순서대로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최종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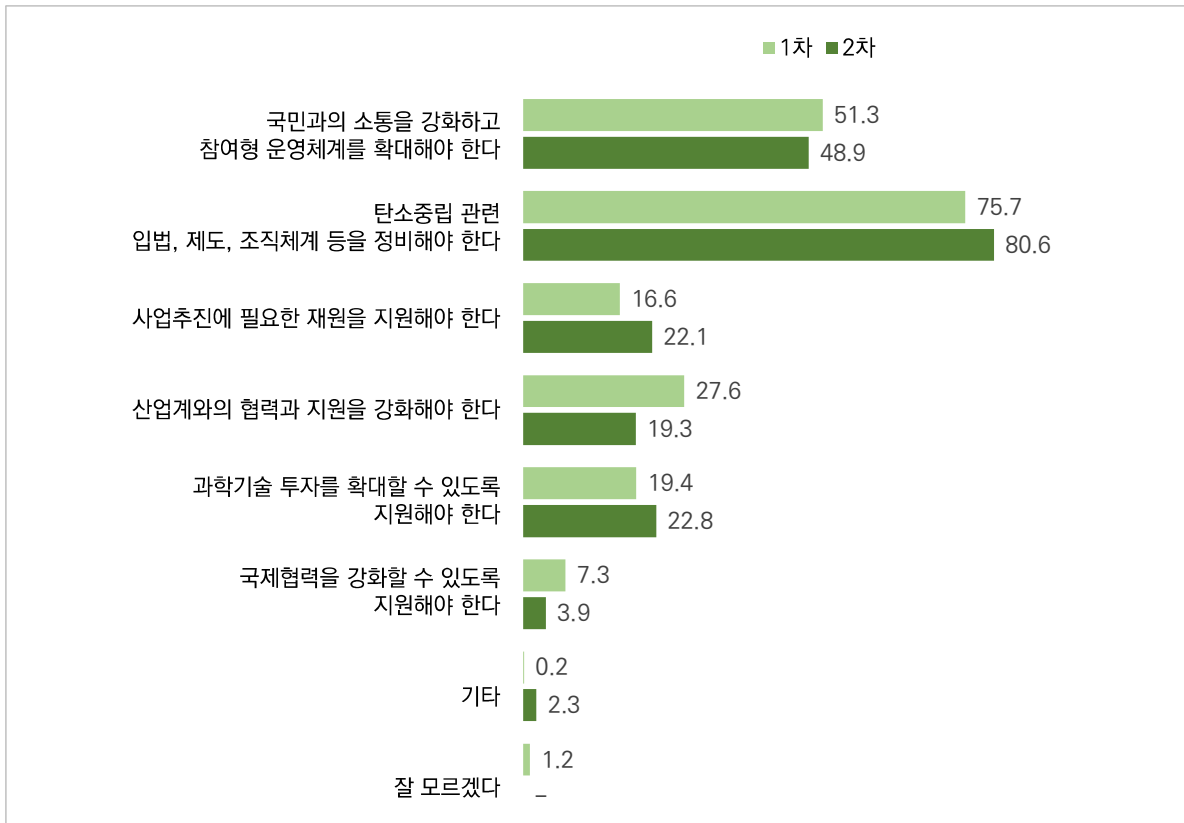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할로는 ‘탄소중립 관련 입법, 제도, 조직체계 등을 정비해야 한다’가 80.6%로 가장 높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형 운영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48.9%,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2.8%,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22.1% 순으로 나타남.

○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

- ‘탄소중립 관련 입법, 제도, 조직체계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1차(75.7%)에서 2차(80.6%)로 3.6%p 증가하여, 속의 이후에도 가장 우선적인 국회의 역할로 인식됨.
-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1차(19.4%)에서 2차(22.8%)로 3.4%p 증가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1차(16.6%)에서 2차(22.1%)로 5.5%p 증가하여, 정책 실행 기반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산업계와의 협력과 지원 강화’는 1차(27.6%)에서 2차(19.3%)로 8.3%p 감소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형 운영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1차(51.3%)에서 2차(48.9%)로 2.4%p 감소함. 또한 ‘국제 협력 강화’ 역시 1차 7.3%에서 2차 3.9%로 감소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할(1+2순위)]

(n=312, 복수응답, 단위 : %)



○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분석

- 성별로는 전반적으로 '탄소중립 관련 입법·제도·조직체계 정비'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남성(79.7%)과 여성(81.5%)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성별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연령별로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입법·제도·조직체계 정비'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30~60대에서 80.0% 이상으로 특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15-19세는 '산업계 협력'(41.9%)과 '재원 지원'(37.1%)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70세 이상에서는 '과학기술 투자'(31.1%)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 응답에 차이가 나타남.
-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입법·제도·조직체계 정비'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부산/울산/경남(92.8%)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며, 광주/전라/제주에서는 '과학기술 투자 확대'(44.6%), 대구/경북에서는 '국민 소통 강화'(68.8%)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권역별 응답에 차이가 나타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할 (1순위)]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형 운영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탄소중립 관련 입법, 제도, 조직체계 등을 정비해야 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산업계와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타	잘 모르겠다	
전체	(312)	25.7	57.7	4.9	4.3	4.7	1.5	1.2	-	
성별	남성	(155)	30.4	49.9	4.4	6.2	4.2	2.4	2.4	-
	여성	(157)	21.0	65.3	5.3	2.5	5.2	0.7	0.0	-
연령	15-19세	(16)	25.8	38.8	12.4	13.1	6.5	0.0	3.5	-
	20-29세	(39)	18.5	48.9	9.3	9.5	7.0	2.5	4.2	-
	30-39세	(45)	21.0	59.1	4.5	3.1	7.8	4.5	0.0	-
	40-49세	(51)	20.6	63.0	4.7	2.2	6.5	0.0	2.9	-
	50-59세	(59)	31.0	61.5	2.7	4.7	0.0	0.0	0.0	-
	60-69세	(54)	23.6	63.9	6.6	2.6	0.0	3.3	0.0	-
	70세 이상	(48)	37.1	52.2	0.0	2.2	8.5	0.0	0.0	-
권역	서울	(58)	19.1	64.4	3.9	7.3	5.4	0.0	0.0	-
	인천/경기	(101)	28.2	52.8	4.4	3.6	5.2	2.7	3.1	-
	대전/충청/강원	(43)	21.9	61.4	1.5	8.8	6.4	0.0	0.0	-
	광주/전라/제주	(34)	35.0	53.7	5.0	1.6	4.7	0.0	0.0	-
	대구/경북	(30)	49.4	29.8	12.2	2.5	2.7	3.4	0.0	-
	부산/울산/경남	(46)	9.6	77.4	5.7	1.3	2.5	2.3	1.2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할 (1+2순위)]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형 운영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탄소중립 관련 입법, 제도, 조직체계 등을 정비해야 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산업계와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타	잘 모르겠다	
전체	(312)	48.9	80.6	22.1	19.3	22.8	3.9	2.3	-	
성별	남성	(155)	47.7	79.7	23.3	16.7	23.0	5.1	4.6	-
	여성	(157)	50.2	81.5	21.0	22.0	22.6	2.8	0.0	-
연령	15-19세	(16)	31.5	62.9	37.1	41.9	17.9	5.3	3.5	-
	20-29세	(39)	35.9	69.6	26.9	23.8	33.7	5.9	4.2	-
	30-39세	(45)	43.3	87.0	24.3	17.2	19.3	4.5	4.4	-
	40-49세	(51)	46.1	81.9	27.1	19.1	20.1	0.0	5.6	-
	50-59세	(59)	53.0	87.2	17.0	13.6	26.5	2.8	0.0	-
	60-69세	(54)	59.9	82.1	17.8	21.5	10.6	8.0	0.0	-
	70세 이상	(48)	56.3	78.3	16.9	15.1	31.1	2.4	0.0	-
권역	서울	(58)	51.0	82.5	12.5	22.6	22.2	7.7	1.5	-
	인천/경기	(101)	52.8	79.9	22.6	13.5	21.3	4.1	5.6	-
	대전/충청/강원	(43)	50.6	72.9	20.5	28.6	24.9	2.4	0.0	-
	광주/전라/제주	(34)	37.3	75.2	26.1	16.8	44.6	0.0	0.0	-
	대구/경북	(30)	68.8	77.5	24.0	16.6	9.6	3.4	0.0	-
	부산/울산/경남	(46)	31.8	92.8	30.1	23.0	17.6	3.5	1.2	-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가 인식하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은 전반적으로 ‘입법·제도·조직체계 정비’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1차(67.5%)에서 2차(70.0%)로 증가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과학기술 투자 확대’는 1차(15.0%)에서 2차(30.0%)로 증가하고, ‘산업계와의 협력 및 지원’도 5.0%에서 22.5%로 증가하여, 기술 및 산업 기반 대응의 중요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국민과의 소통 및 참여 확대’는 1차(57.5%)에서 2차(55.0%)로 소폭 감소하고, ‘재원 지원’(20.0% →12.5%)과 ‘국제협력’(17.5%→5.0%) 역시 감소하여, 일부 정책 수단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 응답은 1차(7.5%)에서 2차(2.5%)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이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나타남.

[탄소중립 추진 주제(1+2순위) 미래세대 응답 비율]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형 운영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탄소중립 관련 입법, 제도, 조직체계 등을 정비해야 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산업계와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타	잘 모르겠다
1차 조사	(40)	57.5	67.5	20.0	5.0	15.0	17.5	2.5	7.5
2차 조사	(40)	55.0	70.0	12.5	22.5	30.0	5.0	-	2.5
GAP	(40)	-2.5%p	+2.5%p	-7.5%p	+17.5%p	+15.0%p	-12.5%p	-2.5%p	-5.0%p

18.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태도

문22. 귀하는 다음 진술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1) 탄소중립정책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기업들은 당장 부담이 커도 탄소중립 추진에 동참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은 우리나라에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최종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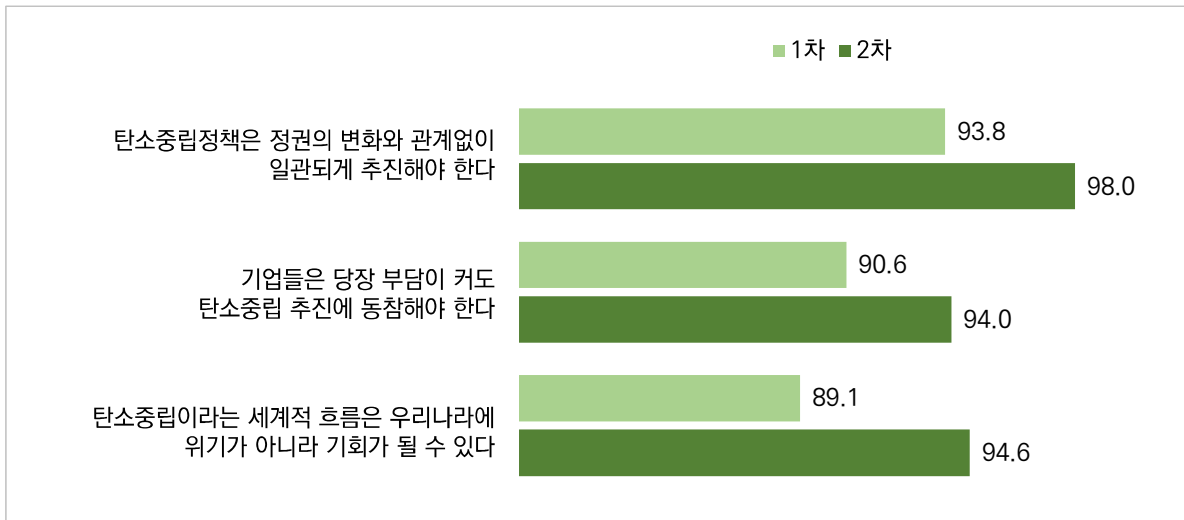
-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탄소중립정책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동의 응답은 9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들은 당장 부담이 커도 탄소중립 추진에 동참해야 한다’는 94.0%,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은 우리나라에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94.6%로 나타남.

○ 속의 단계별 의견 변화

- 1차 대비 2차 조사에서 모든 항목의 동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탄소중립정책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93.8%에서 98.0%로 4.2%p 증가하였으며, ‘기업들은 당장 부담이 커도 탄소중립 추진에 동참해야 한다’는 응답은 90.6%에서 94.0%로 3.4%p 증가함.
- 또한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은 우리나라에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응답도 89.1%에서 94.6%로 5.5%p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동의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태도]

(n=312, 단위 : %)



* 각 항목에 대한 그렇다(매우+대체로) 비율

○ 응답자 특성별 최종 결과 분석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세 항목에 대한 동의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기업들은 당장 부담이 커도 탄소중립 추진에 동참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98.3%)이 남성(89.7%)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세 항목 모두 동의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40대와 60대에서 ‘정권과 관계없이 추진’ 응답이 100.0%로 높게 나타남. 또한 40~50대와 70세 이상에서 ‘기업 참여’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30대는 ‘기회 인식’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특징을 보임.
-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세 항목 모두 동의 응답이 높은 가운데, 대전/충청/강원에서 ‘정권과 관계없이 추진’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전라/제주와 대구/경북에서는 ‘기업 참여’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태도]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탄소중립정책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기업들은 당장 부담이 커도 탄소중립 추진에 동참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은 우리나라에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
전체		(312)	98.0	94.0	94.6
성별	남성	(155)	97.9	89.7	94.8
	여성	(157)	98.2	98.3	94.4
연령	15-19세	(16)	89.3	76.3	96.0
	20-29세	(39)	95.8	81.8	94.5
	30-39세	(45)	95.2	92.8	88.6
	40-49세	(51)	100.0	97.8	95.8
	50-59세	(59)	99.0	99.0	92.9
	60-69세	(54)	100.0	96.7	100.0
	70세 이상	(48)	100.0	97.6	94.3
권역	서울	(58)	98.3	94.6	93.7
	인천/경기	(101)	99.2	92.4	98.9
	대전/충청/강원	(43)	100.0	94.1	95.4
	광주/전라/제주	(34)	94.6	95.6	89.1
	대구/경북	(30)	97.3	96.6	88.7
	부산/울산/경남	(46)	96.6	93.8	93.2

* 각 항목에 대한 그렇다(매우+대체로) 비율

○ 응답자 특성별 의견 변화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1차 대비 2차 조사에서 세 항목 모두 동의 응답이 증가한 가운데, 남성은 '기업 참여' 항목이 86.2%에서 89.7%로 3.5%p 증가한 반면, 여성은 94.9%에서 98.3%로 3.4%p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연령별로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동의 응답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20대는 '정권과 관계없이 추진' 항목이 87.4%에서 95.8%로 8.4%p 증가하고,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은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항목도 82.3%에서 94.5%로 12.2%p 증가하여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남. 반면 30대와 40대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증가 폭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동의 응답이 증가한 가운데, 인천/경기는 '정권과 관계없이 추진' 항목이 92.3%에서 99.2%로 6.9%p 증가하고,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은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항목도 92.7%에서 98.9%로 6.2%p 증가하여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반면 서울은 '기회 인식' 항목이 91.1%에서 93.7%로 2.6%p 증가하는 등 증가 폭이 비교적 낮은 특징을 보임.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태도 차수별 응답 변화]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탄소중립정책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기업들은 당장 부담이 커도 탄소중립 추진에 동참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은 우리나라에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전체	(312)	93.8	98.0	90.6	94.0	89.1	94.6	
성별	남성	(155)	93.3	97.9	86.2	89.7	87.4	94.8
	여성	(157)	94.3	98.2	94.9	98.3	90.9	94.4
연령	15-19세	(16)	76.8	89.3	65.2	76.3	69.4	96.0
	20-29세	(39)	87.4	95.8	73.9	81.8	82.3	94.5
	30-39세	(45)	97.7	95.2	93.6	92.8	88.5	88.6
	40-49세	(51)	90.8	100.0	93.3	97.8	96.5	95.8
	50-59세	(59)	98.8	99.0	94.6	99.0	87.2	92.9
	60-69세	(54)	92.1	100.0	96.7	96.7	94.0	100.0
권역	70세 이상	(48)	100.0	100.0	94.8	97.6	91.0	94.3
	서울	(58)	98.0	98.3	87.8	94.6	91.1	93.7
	인천/경기	(101)	92.3	99.2	91.2	92.4	92.7	98.9
	대전/충청/강원	(43)	92.7	100.0	95.7	94.1	80.7	95.4
	광주/전라/제주	(34)	94.0	94.6	88.2	95.6	86.6	89.1
	대구/경북	(30)	91.9	97.3	87.6	96.6	86.8	88.7
부산/울산/경남	(46)	94.1	96.6	91.6	93.8	90.1	93.2	

* 각 항목에 대한 그렇다(매우+대체로) 비율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가운데, 모든 항목에서 속의 이후 동의 비율이 증가하여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수용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에 대한 동의는 1차(77.5%)에서 2차(85.0%)로 증가하고, ‘기업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동참 필요’ 역시 80.0%에서 92.5%로 증가하여, 정책 지속성과 기업 책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탄소중립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1차(72.5%)에서 2차(82.5%)로 증가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기대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태도 미래세대 응답 비율]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탄소중립정책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기업들은 당장 부담이 커도 탄소중립 추진에 동참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은 우리나라에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
1차 조사	(40)	77.5	80.0	72.5
2차 조사	(40)	85.0	92.5	82.5
GAP	(40)	+7.5%p	+12.5%p	+10.0%p

* 각 항목에 대한 그렇다(매우+대체로) 비율

19. 기후위기 정보 접촉 정도

문23. 귀하는 다음 경로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접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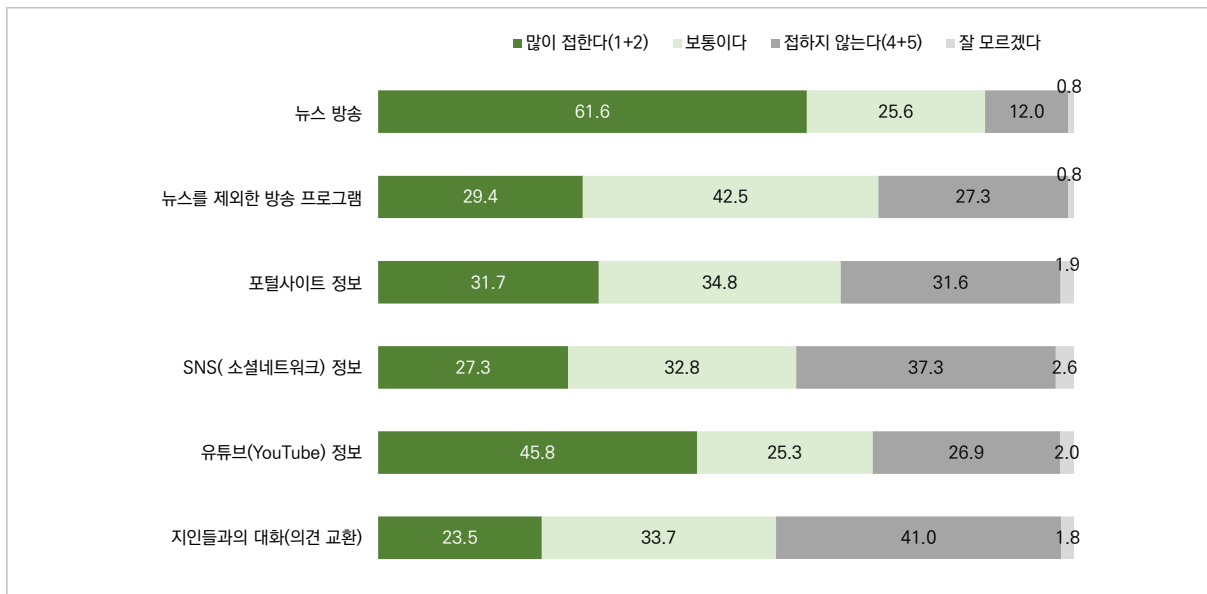
구 분	매우 많이 접한다	대체로 많이 접한다	보통이다	별로 접하지 않는다	전혀 접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1) 뉴스 방송	①	②	③	④	⑤	⑥
2) 뉴스를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3) 포털사이트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⑥
4) SNS(소셜네트워크)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⑥
5) 유튜브(YouTube)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⑥
6) 지인들과의 대화(의견 교환)	①	②	③	④	⑤	⑥

○ 최종 조사 결과

-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 접촉 경로는 ‘뉴스 방송’이 6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튜브(YouTube) 정보’(45.8%), ‘포털사이트 정보’(31.7%), ‘뉴스를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29.4%), ‘SNS(소셜네트워크)’(27.3%), ‘지인들과의 대화’(23.5%) 순임.

[기후위기 정보 접촉 정도 (5점 척도)]

(n=312, 단위 : %)



* ‘매우 많이 접한다(1+2)’ 응답 비율은 ‘매우 많이 접한다(1)’와 ‘대체로 많이 접한다(2)’를 합한 값이며, ‘접하지 않는다(4+5)’는 ‘전혀 접하지 않는다(5)’와 ‘별로 접하지 않는다(4)’의 합계 비율임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정보 접촉 경로를 살펴본 결과, ‘뉴스 방송’(70.0%)과 ‘뉴스를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60.0%)을 통한 정보 접촉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어 ‘유튜브’(50.0%)와 ‘SNS’(37.5%), ‘포털사이트’(32.5%)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정보 접촉도 일정 수준 나타남.
- 반면,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한 정보 접촉은 30.0%로 나타나, 대면 소통보다는 미디어 중심의 정보 접촉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기후위기 정보 접촉 정도 미래세대 응답 비율 (5점 척도)]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뉴스 방송	뉴스를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	포털사이트 정보	SNS(소셜네트 워크) 정보	유튜브 (YouTube) 정보	지인들과의 대화 (의견 교환)
전체	(40)	70.0	60.0	32.5	37.5	50.0	30.0

* 각 항목에 대한 많이 접한다(매우+대체로) 비율

20. 접촉 경로별 기후위기 정보 신뢰 정도

문24. 귀하는 다음 경로별로 접하신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나 내용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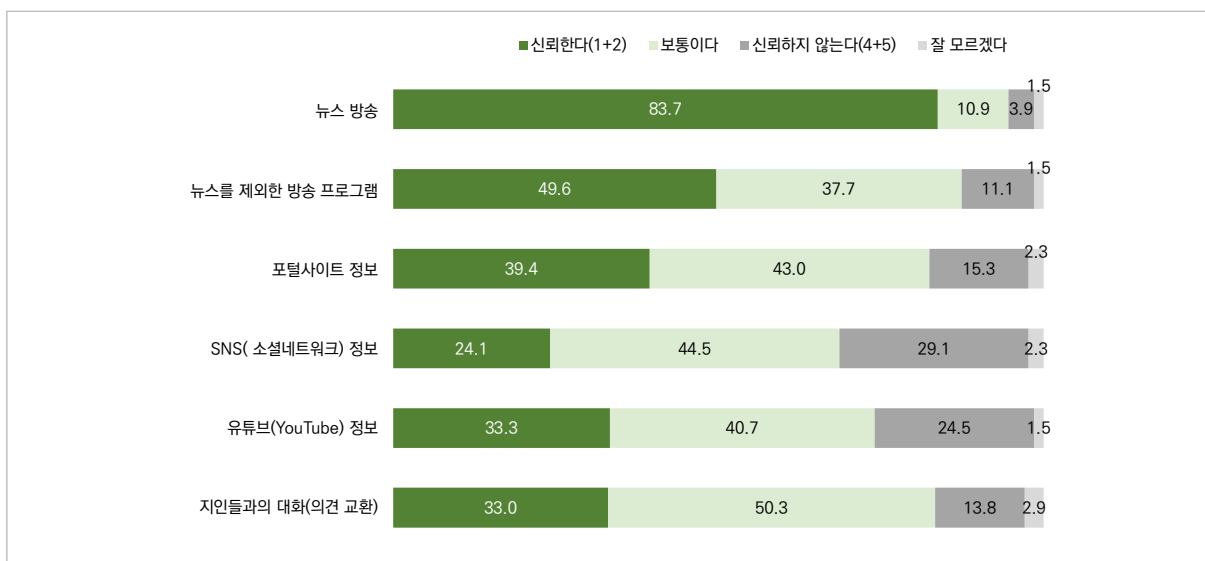
구 분	매우 신뢰한다	대체로 신뢰한다	보통이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1) 뉴스 방송	①	②	③	④	⑤	⑥
2) 뉴스를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⑥
3) 포털사이트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⑥
4) SNS(소셜네트워크)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⑥
5) 유튜브(YouTube) 정보	①	②	③	④	⑤	⑥
6) 지인들과의 대화(의견 교환)	①	②	③	④	⑤	⑥

○ 최종 조사 결과

- 접촉 경로별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신뢰 정도 ‘뉴스 방송’이 8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뉴스를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49.6%), ‘포털사이트 정보’(39.4%), ‘유튜브(YouTube) 정보’(33.3%), ‘지인들과의 대화’(33.0%), ‘SNS(소셜네트워크)’(24.1%) 순임.

[접촉 경로별 기후위기 정보 신뢰 정도 (5점 척도)]

(n=312, 단위 : %)



* ‘신뢰한다(1+2)’ 응답 비율은 ‘매우 신뢰한다(1)’와 ‘대체로 신뢰한다(2)’를 합한 값이며, ‘신뢰하지 않는다(4+5)’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5)’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4)’의 합계 비율임

○ 미래세대 응답 결과 분석

-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정보 접촉 경로별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뉴스 방송’에 대한 신뢰 비율이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뉴스를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은 52.5%로 나타난 반면, ‘포털사이트’(32.5%), ‘유튜브’(22.5%), ‘SNS’(20.0%) 등 온라인 기반 정보에 대한 신뢰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한 정보에 대한 신뢰는 22.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공식 매체 중심의 정보 신뢰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접촉 경로별 기후위기 정보 신뢰 정도 미래세대 응답 비율 (5점 척도)]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뉴스 방송	뉴스를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	포털사이트 정보	SNS(소셜네트 워크) 정보	유튜브 (YouTube) 정보	지인들과의 대화 (의견 교환)
전체	(40)	90.0	52.5	32.5	20.0	22.5	22.5

* 각 항목에 대한 신뢰한다(매우+대체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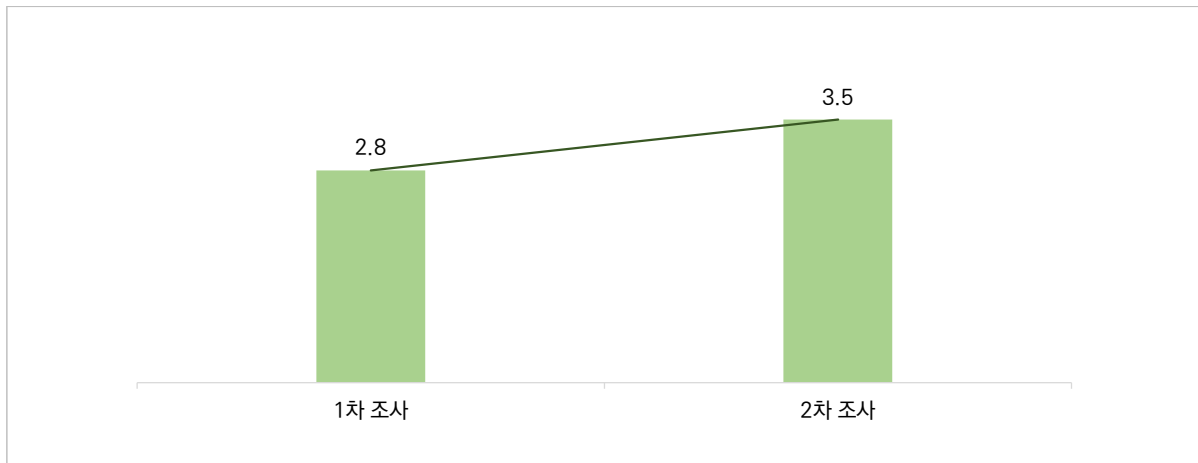
1. 종합 결과

○ 시민대표단

- 기후 전반에 대한 숙의효과를 측정된 결과, 전체 시민대표단의 평균 정답 개수는 전체 5개 문항 중 1차 조사 2.8개, 2차 조사 3.5개로 숙의 전보다 숙의 후에 정답 수가 평균 0.7개 증가하였음.

[지식 측정 문항 정답 수(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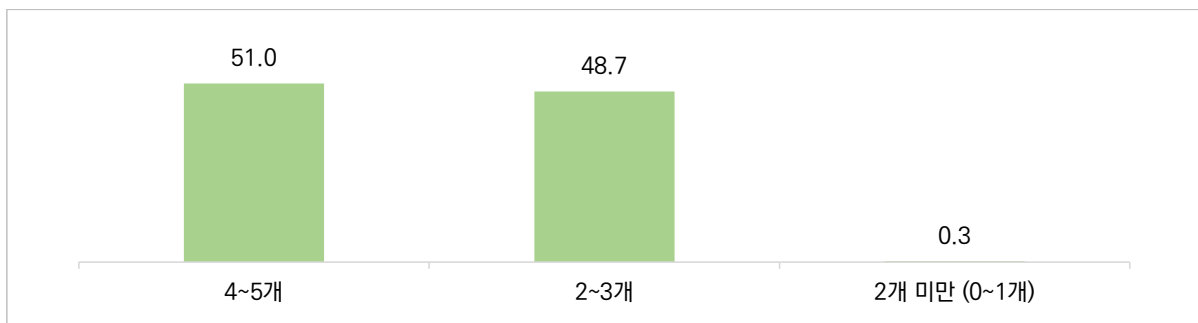
(n=312, 단위 : 개)



- 최종 2차 조사에서 4개 이상 정답을 맞춘 비율은 51.0%임.

[지식 측정 문항 정답 개수별 비율 : 2차 조사]

(n=31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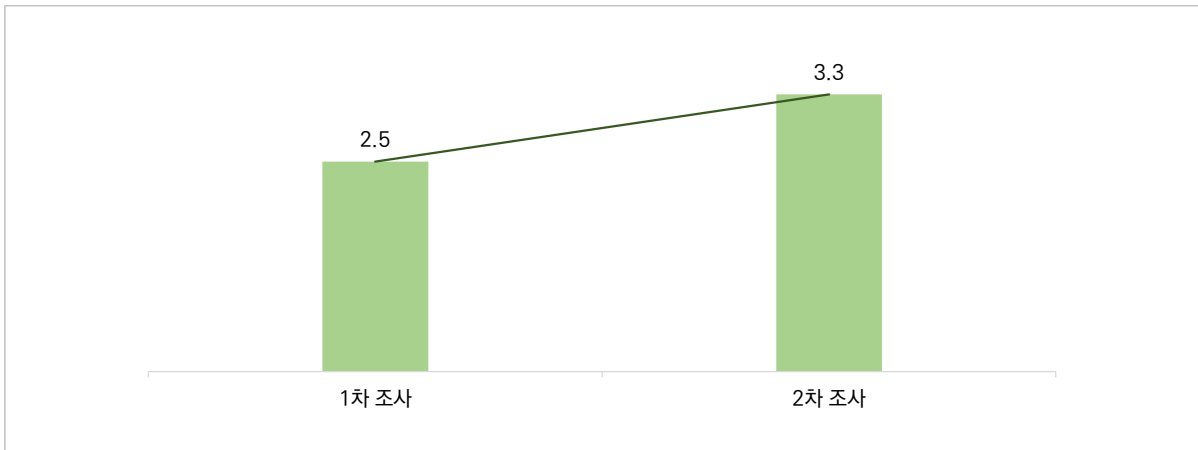


○ 미래세대

- 기후 전반에 대한 숙의효과를 측정한 결과, 전체 미래세대의 평균 정답 개수는 전체 5개 문항 중 1차 조사 2.5개, 2차 조사 3.3개로 숙의 전보다 숙의 후에 정답 수가 평균 0.8개 증가하였음.

[미래세대 지식 측정 문항 정답 수(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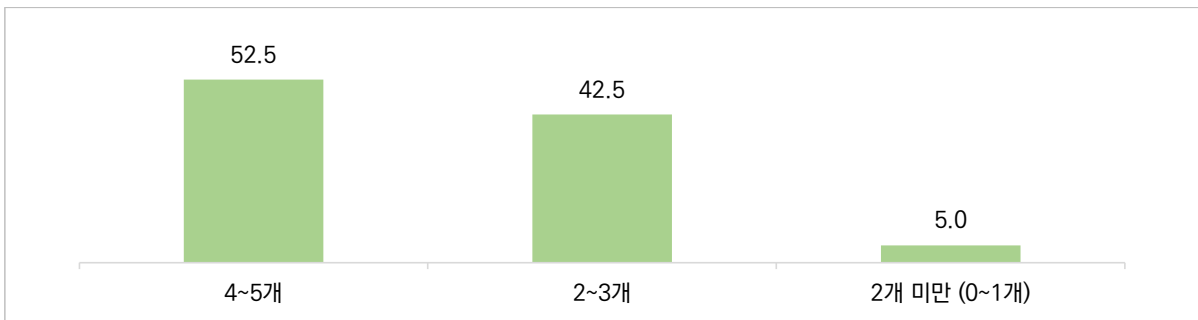
(n=40, 단위 : 개)



- 최종 2차 조사에서 4개 이상 정답을 맞춘 비율은 52.5%임.

[미래세대 지식 측정 문항 정답 개수별 비율 : 2차 조사]

(n=40, 단위 : %)



2. 문항별 정답률

○ 시민대표단

- 각 문항별 정답률을 보았을 때, 가장 정답률이 높은 문항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인지’로 95.2%이며,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연도 인지(93.3%)’와 ‘이상기후 현상 이해(87.5%)’ 순으로 나타남.
- 숙의 전에 비해 숙의 후 가장 정답률이 많이 오른 문항은 ‘파리협정 인지’로, 숙의 전보다 정답률이 32.7%p 상승함.

[숙의 효과 측정 문항별 정답률]

(n=312, 단위 : %)

구분	질문 내용	1차 조사	2차 조사	GAP(%p) (2차-1차)
문항1	이상기후 현상 이해	89.1	87.5	-1.6
문항2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지수(GWP) 인지	10.3	10.6	0.3
문항3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연도 인지	83.3	93.3	10
문항4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인지	69.2	95.2	26
문항5	파리협정 인지	28.2	60.9	32.7
전체 평균		56.0	69.5	13.5

○ 미래세대

- 문항별 정답률을 살펴본 결과, '이상기후 현상 이해'와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연도 인지'가 각각 9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인지'(72.5%), '파리협정 인지'(62.5%) 순으로 나타남.
- 속의 전·후를 비교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정답률이 증가한 가운데, '파리협정 인지' 문항에서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속의 전 대비 47.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미래세대 속의 효과 측정 문항별 정답률]

(n=40, 단위 : %)

구분	질문 내용	1차 조사	2차 조사	GAP(%p) (2차-1차)
문항1	이상기후 현상 이해	90.0	95.0	5.0
문항2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지수(GWP) 인지	5.0	7.5	2.5
문항3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연도 인지	77.5	95.0	17.5
문항4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인지	57.5	72.5	15.0
문항5	파리협정 인지	15.0	62.5	47.5
전체 평균		49.0	66.5	17.5

3. 연령대별 정답률

- 연령대별 평균 정답 수를 비교해 보면, 20-29세와 15-19세가 각각 3.6개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연령대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30~50대는 평균 3.4~3.5개 수준으로 전체 평균(3.3개)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며, 비교적 고른 정답 분포를 나타냄.
- 60대 이상에서는 평균 정답 수가 3.3~3.5개 수준으로 나타나, 타 연령대와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거나 전반적으로 큰 격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별 정답수]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2개 미만	2~3개	4~5개	계	평균 정답 수(개)	
전체	(312)	0.0	58.6	41.4	100.0	3.3	
연령	15-29세	(16)	0.0	43.5	56.5	100.0	3.6
	20-29세	(39)	0.0	44.2	55.8	100.0	3.6
	30-39세	(45)	0.0	50.4	49.6	100.0	3.4
	40-49세	(51)	0.0	48.9	51.1	100.0	3.5
	50-59세	(59)	0.0	50.8	49.2	100.0	3.5
	60-69세	(54)	2.6	54.9	42.5	100.0	3.3
	70세 이상	(48)	0.4	49.5	50.1	100.0	3.5

4절

공론화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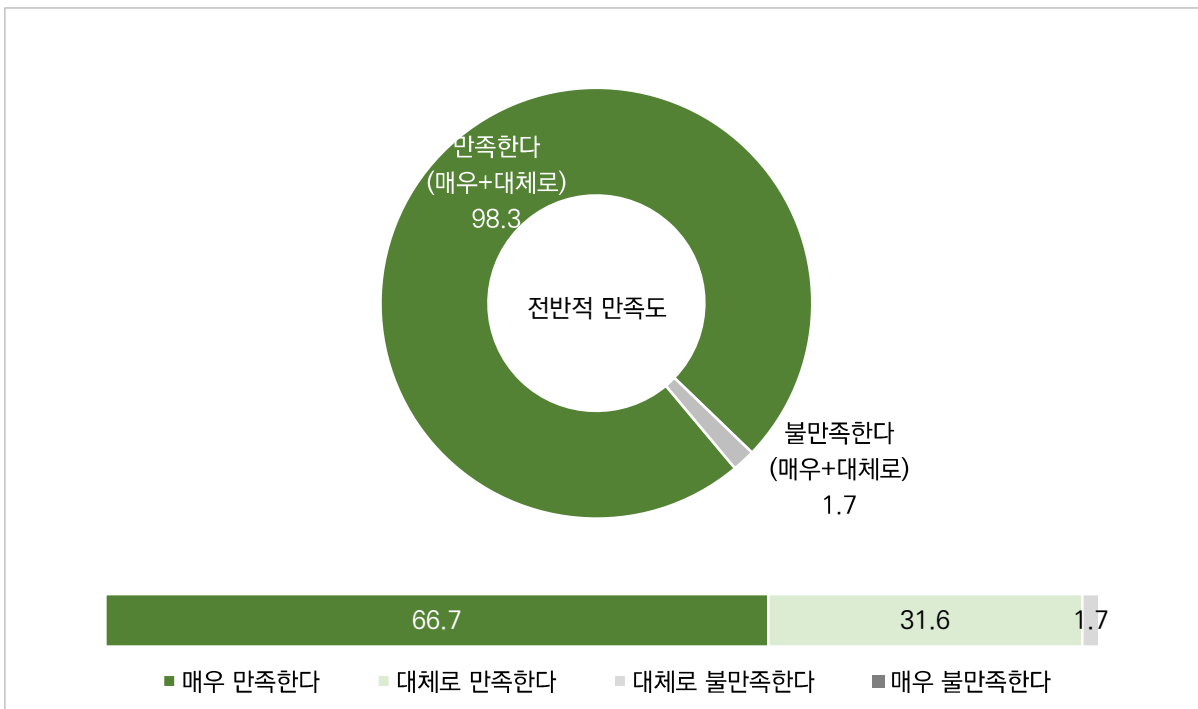
1. 전반적 만족도

○ 조사 결과

- 공론화 전체 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한다(매우+대체로)’ 98.3%, ‘대체로 불만족한다’ 1.7%로, 전체 시민대표단 10명 중 9명 이상은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 과정에 만족함.

[전반적 만족도 (4점 척도)]

(n=312, 단위 :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전 연령대에서 ‘만족한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95% 이상으로 높음.

[전반적 만족도]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만족 (매우+ 대체로)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불만족 (매우+ 대체로)	대체로 불만족 한다	매우 불만족 한다	
전체	(312)	98.3	66.7	31.6	1.7	1.7	0.0	
연령	15-19세	(16)	100.0	38.9	61.1	0.0	0.0	0.0
	20-29세	(39)	95.6	46.7	48.9	4.4	4.4	0.0
	30-39세	(45)	97.7	64.8	32.9	2.3	2.3	0.0
	40-49세	(51)	97.3	62.7	34.5	2.7	2.7	0.0
	50-59세	(59)	100.0	75.4	24.6	0.0	0.0	0.0
	60-69세	(54)	100.0	78.7	21.3	0.0	0.0	0.0
	70세 이상	(48)	97.6	73.8	23.8	2.4	2.4	0.0

○ 미래세대 응답 결과

-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한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97.5%로 매우 높게 나타남.

[전반적 만족도 미래세대 응답 결과]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만족 (매우+ 대체로)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불만족 (매우+ 대체로)	대체로 불만족 한다	매우 불만족 한다
전체	(40)	97.5	57.5	40.0	2.5	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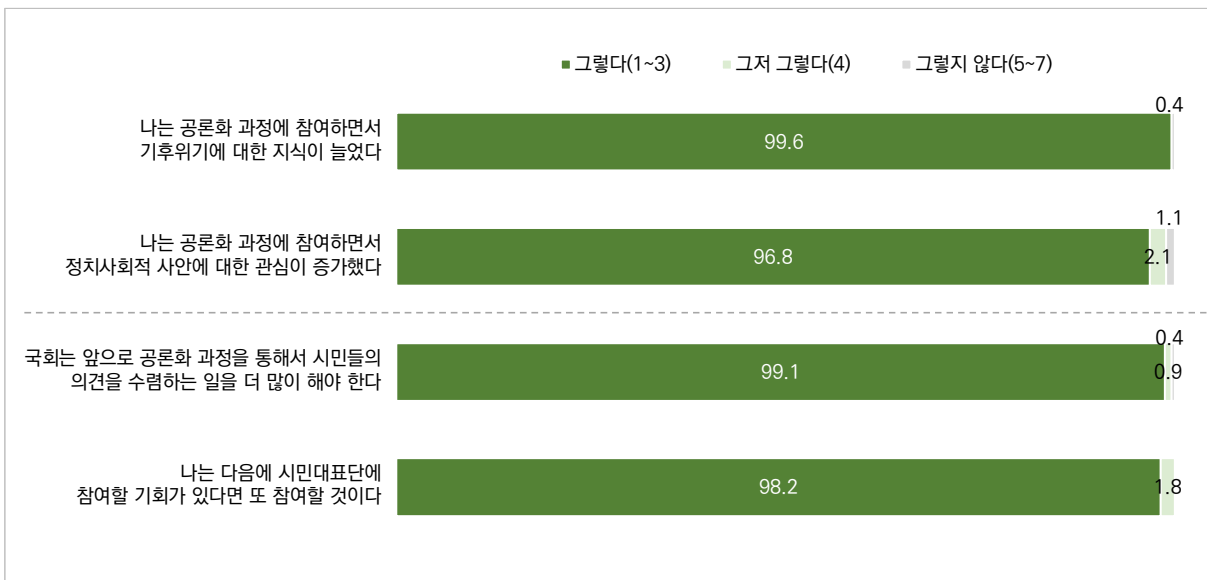
2. 공론화 효과 및 태도

○ 조사 결과

- 시민대표단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은 효과를 측정한 결과, ‘나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지식이 늘었다’ 99.6%, ‘나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96.8%로 긍정적 효과가 96.0% 이상임.
- 공론화 전반에 대해서 ‘국회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한다’ 99.1%, ‘나는 다음에 시민대표단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할 것이다’ 98.2%로 긍정적 태도가 높음.

[공론화 효과 및 태도 (7점 척도)]

(n=312, 단위 : %)



* ‘그렇다(1~3)’ 응답 비율은 ‘매우 그렇다(1)’와 ‘그렇다(2)’, ‘대체로 그렇다(3)’를 합한 값이며, ‘그렇지 않다(5~7)’는 ‘전혀 그렇지 않다(7)’, ‘그렇지 않다(6)’, ‘별로 그렇지 않다(5)’의 합계 비율임.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시민대표단이 공론화 과정에 참석하면서 얻은 효과 및 태도 모든 항목에 대해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 응답이 90% 이상으로 높음.

[공론화 효과 및 태도 (7점 척도)]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나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지식이 늘었다	나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국회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나는 다음에 시민대표단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할 것이다	
전체	(312)	99.6	96.8	99.1	98.2	
연령	15-19세	(16)	100.0	92.4	100.0	95.4
	20-29세	(39)	100.0	91.4	100.0	100.0
	30-39세	(45)	97.5	92.1	100.0	100.0
	40-49세	(51)	100.0	100.0	100.0	93.8
	50-59세	(59)	100.0	100.0	98.2	100.0
	60-69세	(54)	100.0	96.7	96.7	96.7
	70세 이상	(48)	100.0	100.0	100.0	100.0

* 각 항목의 비율은 '그렇다(1~3)'는 응답의 비율로 '매우 그렇다(1)'와 '그렇다(2)', '대체로 그렇다(3)'의 합계 비율임.

○ 미래세대 응답 결과

- 미래세대가 공론화 과정에 참석하면서 얻은 효과 및 태도 모든 항목에 대해 긍정 응답이 85% 이상으로 높음.

[공론화 효과 및 태도 (7점 척도) 미래세대 응답결과]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나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지식이 늘었다	나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국회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나는 다음에 시민대표단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할 것이다
전체	(40)	95.0	87.5	97.5	85.0

* 각 항목의 비율은 '그렇다(1~3)'는 응답의 비율로 '매우 그렇다(1)'와 '그렇다(2)', '대체로 그렇다(3)'의 합계 비율임.

3. 자료집 숙지 및 조사 참여 태도

○ 조사 결과

- 시민대표단의 자료집 숙지를 확인한 결과, ‘끝까지 보았다’와 ‘절반보다 많이 보았다(3/4정도)’를 합한 응답 비율은 ‘기초학습자료집’ 91.9%, ‘이러닝 동영상 자료’ 94.7%, ‘의제자료집 상편’ 90.7%, ‘의제자료집 하편’ 88.8%임.

[자료집 숙지 및 조사 참여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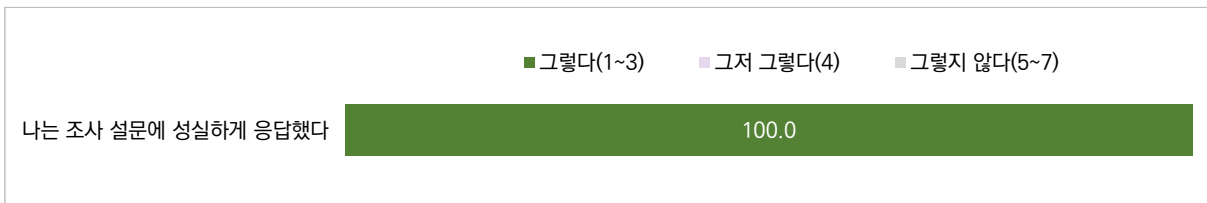
(n=312, 단위 : %)



- ‘나는 조사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했다’에 대해선 시민대표단 100.0%가 ‘그렇다’고 응답함.

[자료집 숙지 및 조사 참여 태도 (7점 척도)]

(n=312, 단위 : %)



* ‘그렇다(1~3)’ 응답 비율은 ‘매우 그렇다(1)’와 ‘그렇다(2)’, ‘대체로 그렇다(3)’를 합한 값이며, ‘그렇지 않다(5~7)’는 ‘전혀 그렇지 않다(7)’, ‘그렇지 않다(6)’, ‘별로 그렇지 않다(5)’의 합계 비율임.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각 자료집에 대해 ‘끝까지 다 보았다 + 절반보다 많이 보았다(3/4정도)’의 응답 비율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기초학습자료집’은 30대 이상이 90%대, 15-19세와 20대는 각각 70%대와 80%대임.
- ‘이러닝 동영상 자료’는 모든 연령대가 90%대임.
- ‘의제자료집 상편’은 30대 이상이 90%대, 15-19세와 20대는 각각 60%대와 80%대임.
- ‘의제자료집 하편’은 40대·50대는 90%대, 20대·30대와 70세 이상은 80%대, 15-19세는 70%대임.

[자료집 숙지 정도]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기초학습자료집	이러닝 동영상 자료	의제자료집 상편	의제자료집 하편	
전체	(312)	91.9	94.7	90.7	88.8	
연령	15-19세	(16)	77.9	93.3	65.5	75.7
	20-29세	(39)	84.3	93.1	82.3	82.3
	30-39세	(45)	91.4	94.5	90.0	83.0
	40-49세	(51)	97.8	97.8	95.7	95.7
	50-59세	(59)	91.8	96.7	95.3	92.5
	60-69세	(54)	92.7	91.9	92.7	91.9
	70세 이상	(48)	95.4	94.5	93.1	88.7

* 자료집 숙지 정도의 각 비율은 ‘끝까지 다 보았다’와 ‘절반보다 많이 보았다(3/4정도)’를 합한 비율임.

○ 미래세대 응답 결과

- 자료집 숙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이러닝 동영상 자료와 기초학습자료집 중심으로 숙지 비율이 높은 가운데, 의제자료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미래세대 자료집 숙지 정도]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기초학습자료집	이러닝 동영상 자료	의제자료집 상편	의제자료집 하편
전체	(40)	75.0	82.5	67.5	62.5

* 자료집 숙지 정도의 각 비율은 ‘끝까지 다 보았다’와 ‘절반보다 많이 보았다(3/4정도)’를 합한 비율임.

- ‘나는 조사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했다’에 대해선 미래세대 100.0%가 ‘그렇다’고 응답함.

[자료집 숙지 및 조사 참여 태도 (7점 척도)]

(n=40, 단위 : %)



* ‘그렇다(1~3)’ 응답 비율은 ‘매우 그렇다(1)’와 ‘그렇다(2)’, ‘대체로 그렇다(3)’를 합한 값이며, ‘그렇지 않다(5~7)’는 ‘전혀 그렇지 않다(7)’, ‘그렇지 않다(6)’, ‘별로 그렇지 않다(5)’의 합계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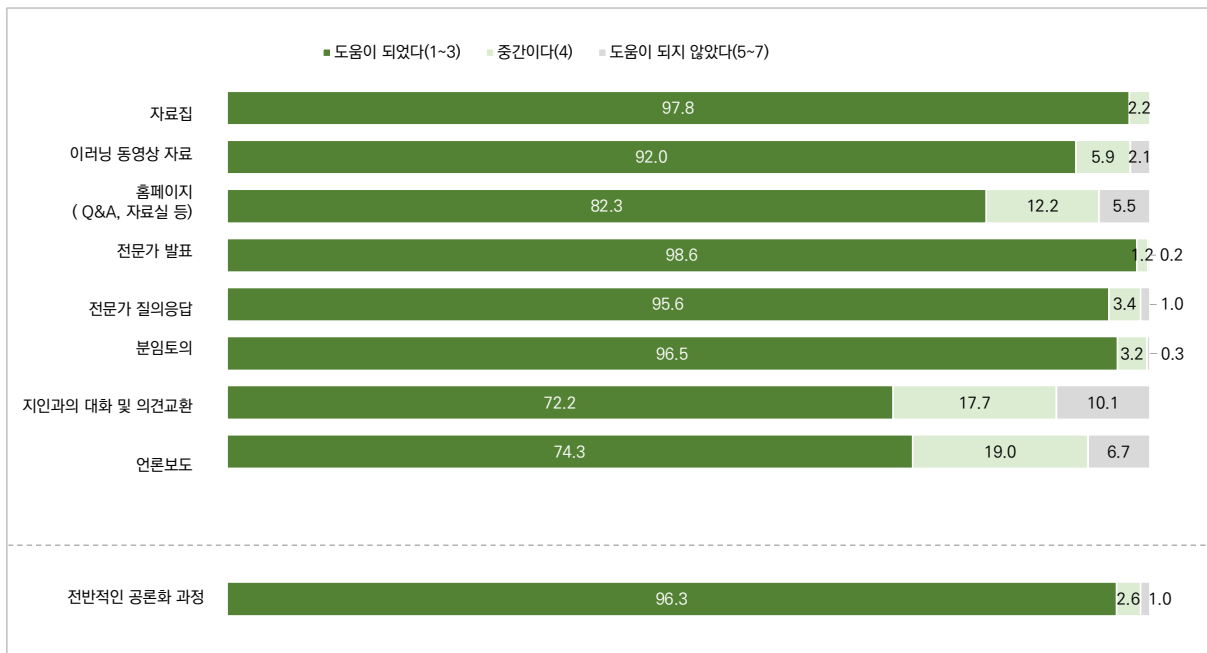
4. 속의 과정별 도움정도

○ 조사 결과

- 속의 과정별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문가 발표’(98.6%), ‘자료집’(97.8%), ‘분임토의’(96.5%), ‘전문가 질의응답’(95.6%), ‘이러닝 동영상 자료’(92.0%) 순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주요 프로그램 전반에서 90.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임
- 반면, ‘홈페이지 활용’(82.3%), ‘언론보도’(74.3%), ‘지인과의 대화 및 의견교환’(72.2%)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한편,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6.3%로 높게 나타나, 시민대표단 10명 중 9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함

[속의 과정별 도움 정도 (7점 척도)]

(n=31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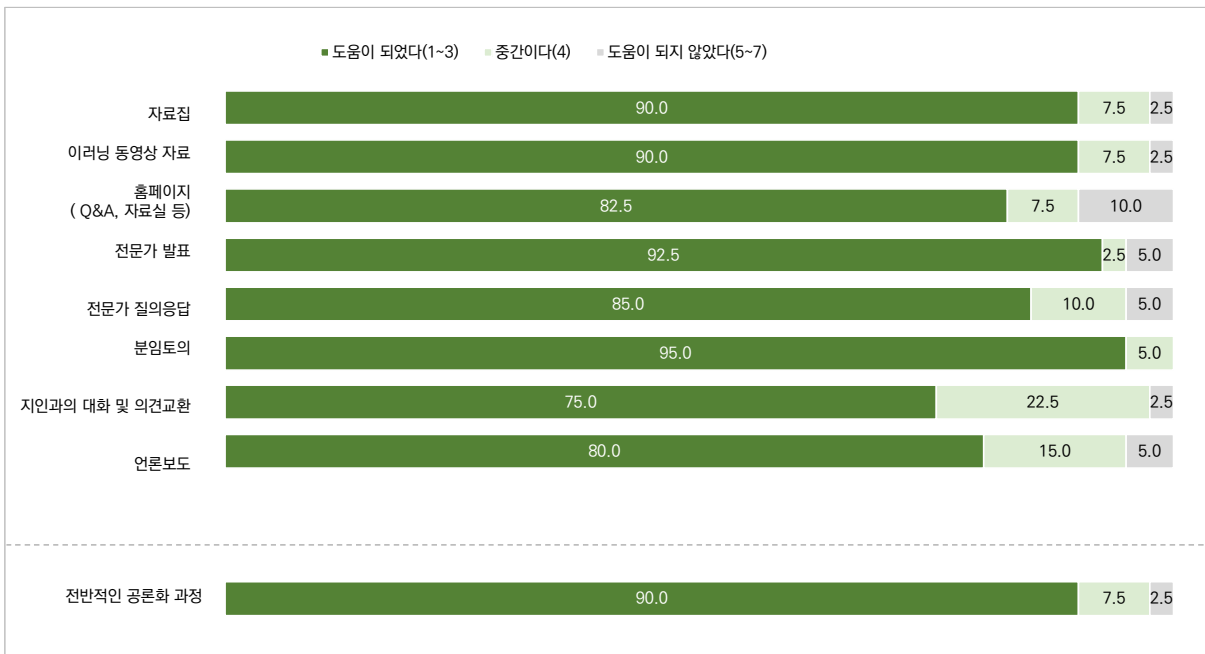
* ‘도움이 되었다(1~3)’ 응답 비율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1)’와 ‘도움이 되었다(2)’, ‘조금 도움이 되었다(3)’를 합한 값이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5~7)’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7)’, ‘도움이 되지 않았다(6)’,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5)’의 합계 비율임.

○ 미래세대 응답 결과

- 속의 과정별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분임토의'(95.0%), '전문가 발표'(92.5%), '자료집'(90.0%), '이러닝 동영상 자료'(90.0%) 순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이어 '전문가 질의응답'(85.0%), '언론보도'(80.0%), '지인과의 대화 및 의견교환'(75.0%)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한편,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0.0%로 높게 나타남

[속의 과정별 도움 정도 (7점 척도) 미래세대 응답 결과]

(n=40, 단위 : %)



* '도움이 되었다(1~3)' 응답 비율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1)'와 '도움이 되었다(2)', '조금 도움이 되었다(3)'를 합한 값이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5~7)'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7)', '도움이 되지 않았다(6)',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5)'의 합계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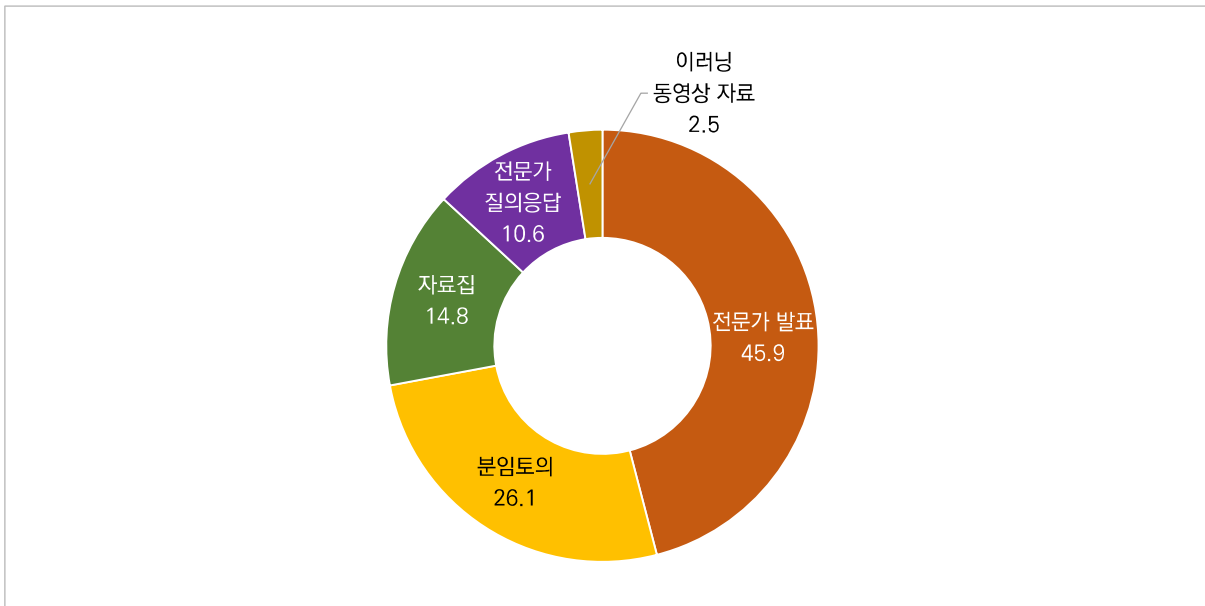
5. 가장 도움이 된 속의 과정

○ 조사 결과

- 전체 속의 과정 중 가장 도움이 된 속의 과정을 확인한 결과, '전문가 발표'가 45.9%로 가장 높고, 각각 '분임토의'가 26.1%, '자료집'이 14.8%, '전문가 질의응답'이 10.6%, '이러닝 동영상 자료' 2.5% 순으로 나타남.

[가장 도움이 된 속의 과정]

(n=312, 단위 :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전체 숙의 과정 중 가장 도움이 된 숙의 과정에 대해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15-19세, 20-29세, 30-39세의 경우, '분임토의'가 상대적으로 높고, 40-49세, 50-59세, 60-69세의 경우 '전문가 발표'가 상대적으로 높음.
- 70세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료집'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가장 도움이 된 숙의 과정]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자료집	이러닝 동영상 자료	전문가 발표	전문가 질의응답	분임토의	홈페이지 활용(Q&A, 자료실 등)	
전체	(312)	14.8	2.5	45.9	10.6	26.1	-	
연령	15-19세	(16)	11.1	4.2	27.1	11.5	46.1	-
	20-29세	(39)	11.6	0.0	33.2	6.6	48.7	-
	30-39세	(45)	7.4	0.0	39.2	13.0	40.4	-
	40-49세	(51)	7.3	2.7	48.6	10.2	31.1	-
	50-59세	(59)	17.6	0.0	51.2	9.8	21.4	-
	60-69세	(54)	14.0	3.7	62.1	11.1	9.1	-
	70세 이상	(48)	31.5	7.9	41.1	12.3	7.1	-

○ 미래세대 응답결과

- 전체 숙의 과정 중 가장 도움이 된 숙의 과정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분임토의'와 '전문가 발표'가 상대적으로 높음.

[가장 도움이 된 숙의 과정 미래세대 응답결과]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자료집	이러닝 동영상 자료	전문가 발표	전문가 질의응답	분임토의	홈페이지 활용(Q&A, 자료실 등)
전체	(40)	7.5	7.5	37.5	-	4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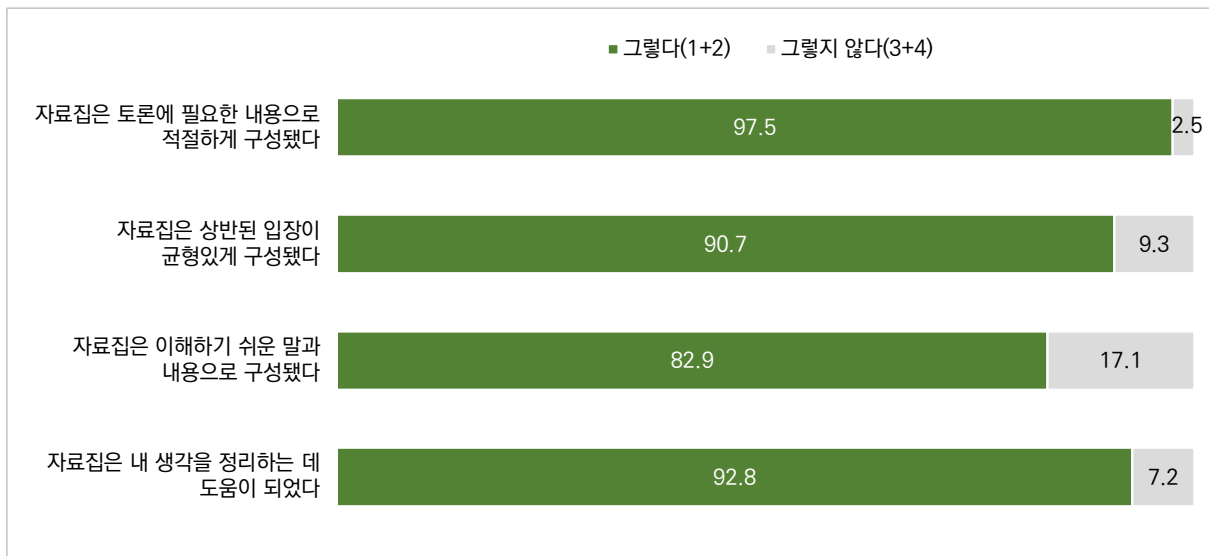
6. 속의자료집 평가

○ 조사 결과

- 속의자료집에 대한 평가로 ‘자료집은 토론에 필요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97.5%)’, ‘자료집은 내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92.8%)’, ‘자료집은 상반된 입장이 균형있게 구성됐다(90.7%)’의 3개 항목은 9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자료집은 이해하기 쉬운 말과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82.9%로 상대적으로 낮음.

[속의자료집 평가 (4점 척도)]

(n=31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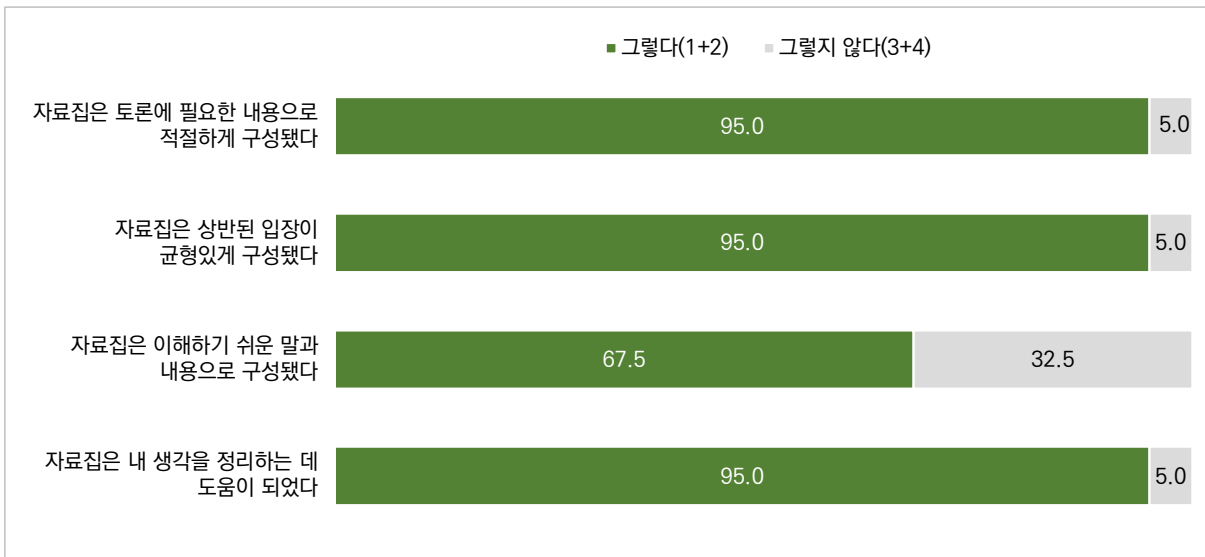
* ‘그렇다(1+2)’ 응답 비율은 ‘매우 그렇다(1)’와 ‘대체로 그렇다(2)’를 합한 값이며, ‘그렇지 않다(3+4)’는 ‘전혀 그렇지 않다(4)’, ‘별로 그렇지 않다(3)’의 합계 비율임.

○ 미래세대 응답 결과

- 숙의자료집 평가를 살펴본 결과, ‘토론에 필요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95.0%), ‘상반된 입장이 균형 있게 구성되었다’(95.0%),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95.0%)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높음.
- 반면, ‘이해하기 쉬운 말과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67.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숙의자료집 평가 (4점 척도) 미래세대 응답 결과]

(n=40, 단위 : %)



* ‘그렇다(1+2)’ 응답 비율은 ‘매우 그렇다(1)’와 ‘대체로 그렇다(2)’를 합한 값이며, ‘그렇지 않다(3+4)’는 ‘전혀 그렇지 않다(4)’, ‘별로 그렇지 않다(3)’의 합계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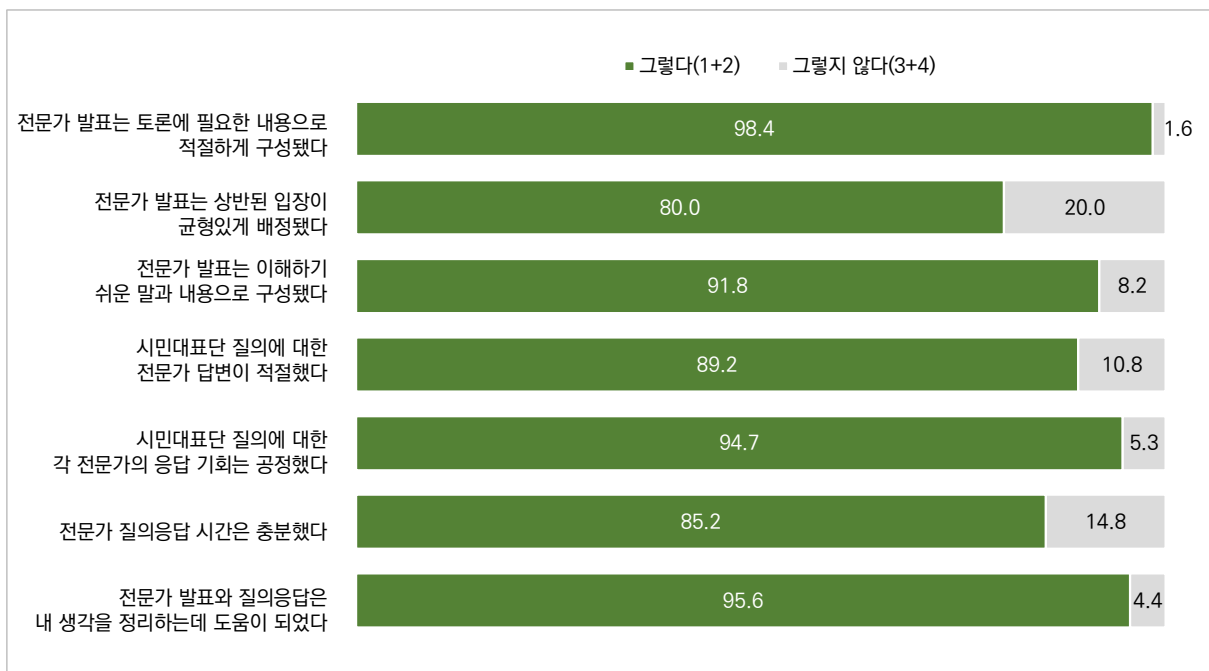
7. 전문가 발표 평가

○ 조사 결과

- 전문가 발표에 대한 평가로, ‘전문가 발표는 토론에 필요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구성됐다’는 98.4%,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은 내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95.6%, ‘시민대표단 질의에 대한 각 전문가의 응답 기회는 공정했다’는 94.7%, ‘전문가 발표는 이해하기 쉬운 말과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91.8%로 90%대임.
- ‘시민대표단 질의에 대한 전문가 답변이 적절했다’는 89.2%, ‘전문가 질의응답 시간은 충분했다’는 85.2%, ‘전문가 발표는 상반된 입장이 균형있게 배정됐다’ 80.0%로 80%대임.

[전문가 발표 평가 (4점 척도)]

(n=31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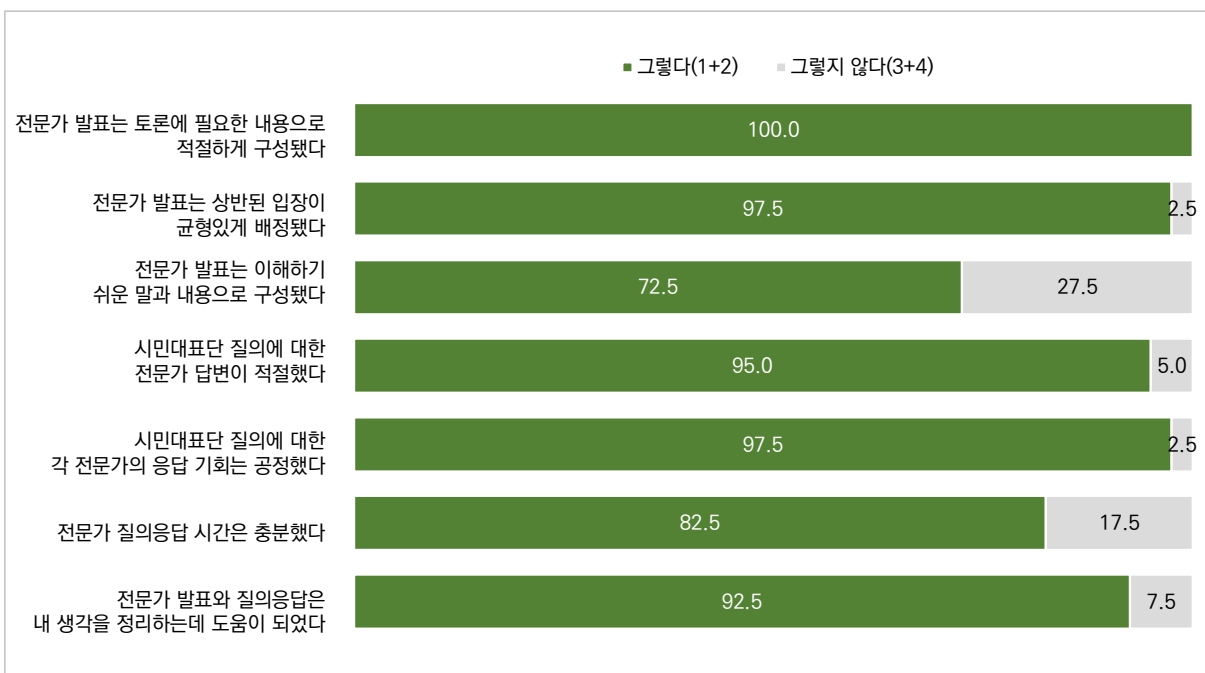
* ‘그렇다(1+2)’ 응답 비율은 ‘매우 그렇다(1)’와 ‘대체로 그렇다(2)’를 합한 값이며, ‘그렇지 않다(3+4)’는 ‘전혀 그렇지 않다(4)’, ‘별로 그렇지 않다(3)’의 합계 비율임.

○ 미래세대 응답 결과

- 전문가 발표 평가를 살펴본 결과, ‘전문가 발표는 토론에 필요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구성됐다’(100.0%), ‘상반된 입장이 균형 있게 배정되었다’(97.5%), ‘질의에 대한 응답 기회가 공정했다’(97.5%),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적절했다’(95.0%),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92.5%)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높음.
- 반면, ‘이해하기 쉬운 말과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72.5%, ‘질의응답 시간은 충분했다’는 82.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전문가 발표 평가 (4점 척도) 미래세대 응답 결과]

(n=40, 단위 : %)



* ‘그렇다(1+2)’ 응답 비율은 ‘매우 그렇다(1)’와 ‘대체로 그렇다(2)’를 합한 값이며, ‘그렇지 않다(3+4)’는 ‘전혀 그렇지 않다(4)’, ‘별로 그렇지 않다(3)’의 합계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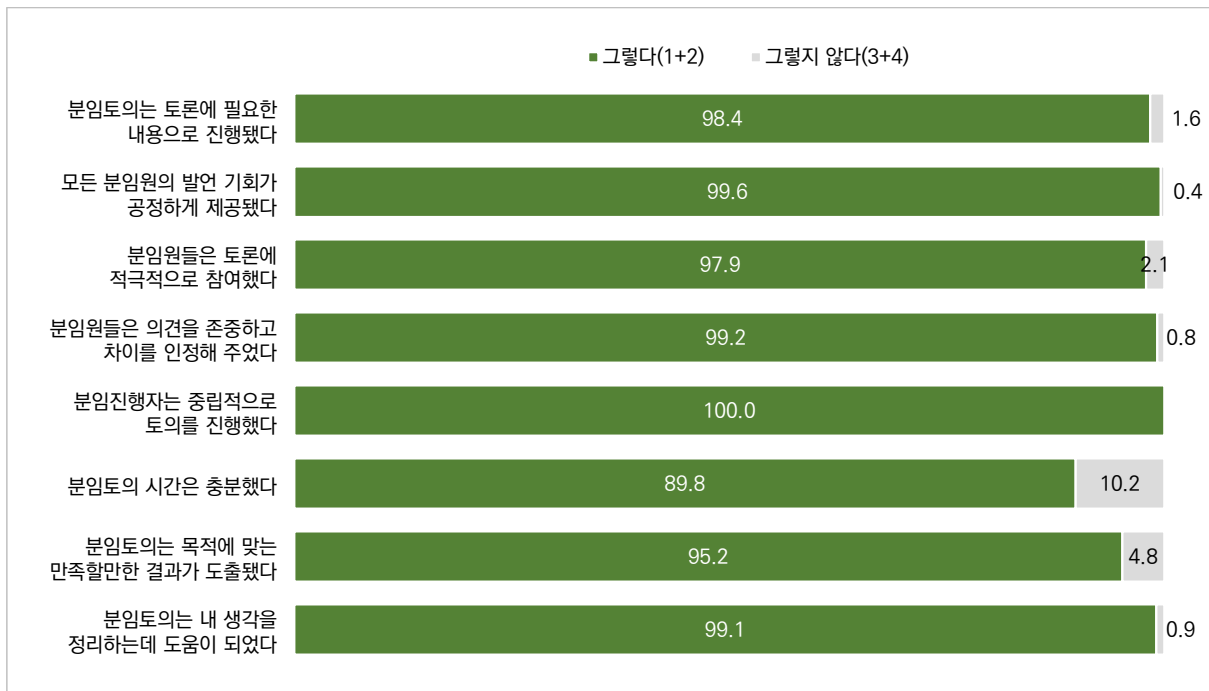
8. 분임토의 평가

○ 조사 결과

- 분임토의 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항목이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임.
- ‘분임토의는 토론에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98.4%, ‘모든 분임원의 발언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됐다’ 99.6, ‘분임원들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97.9%, 분임원들은 의견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해 주었다’ 99.2%, ‘분임진행자는 중립적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100.0%, 분임토의는 목적에 맞는 만족 할만한 결과가 도출됐다’ 95.2%, ‘분임토의는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99.1%임.
- ‘분임토의 시간은 충분했다’는 89.8%로 상대적으로 낮음.

[분임토의 평가 (4점 척도)]

(n=31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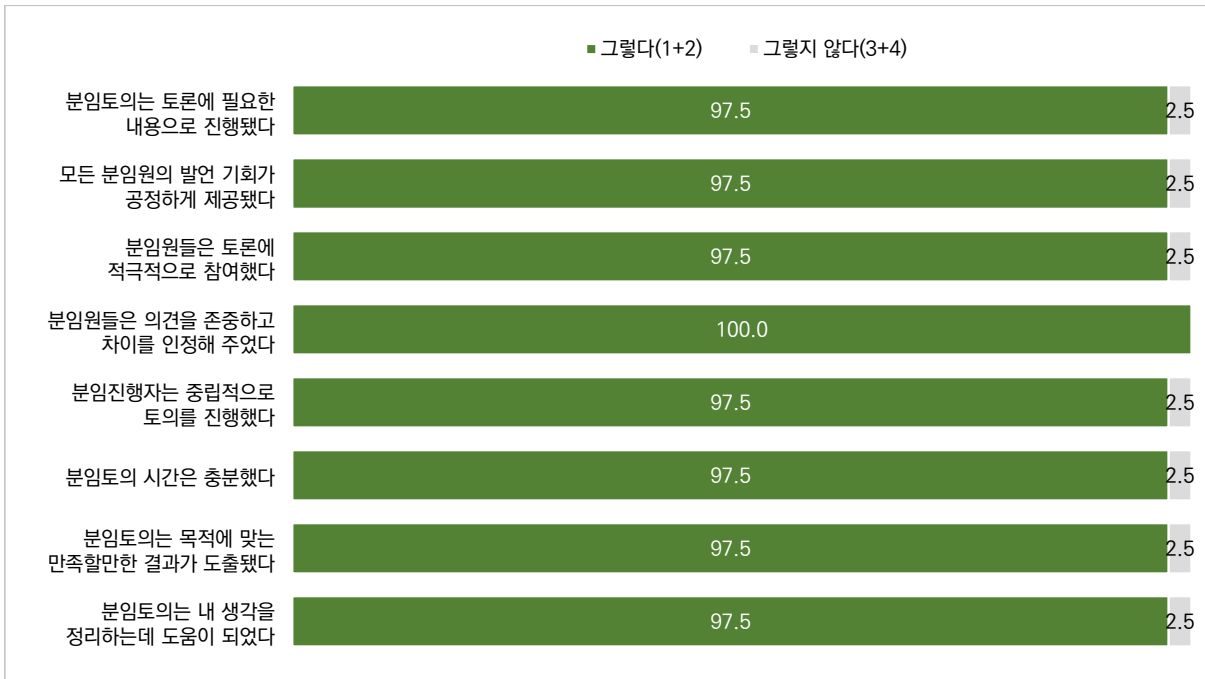
* ‘그렇다(1+2)’ 응답 비율은 ‘매우 그렇다(1)’와 ‘대체로 그렇다(2)’를 합한 값이며, ‘그렇지 않다(3+4)’는 ‘전혀 그렇지 않다(4)’, ‘별로 그렇지 않다(3)’의 합계 비율임.

○ 미래세대 응답 결과

- 분임토의 평가를 살펴본 결과, 의견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해 주었다'는 100.0%로 가장 높고, 나머지 항목도 모두 97.5%로 높게 나타남.

[분임토의 평가 (4점 척도) 미래세대 응답 결과]

(n=40, 단위 : %)



* '그렇다(1+2)' 응답 비율은 '매우 그렇다(1)'와 '대체로 그렇다(2)'를 합한 값이며, '그렇지 않다(3+4)'는 '전혀 그렇지 않다(4)', '별로 그렇지 않다(3)'의 합계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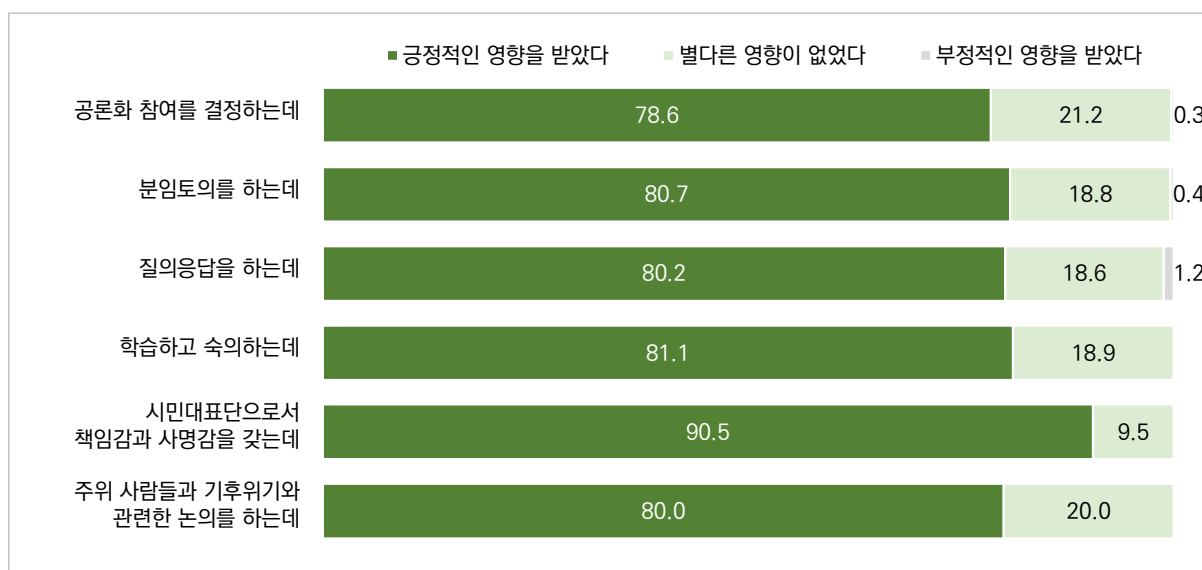
9. KBS 생중계와 보도의 영향

○ 조사 결과

-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의 KBS 생중계와 뉴스, 시사프로그램 관련 보도의 영향을 파악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시민대표단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는데’가 90.5%이며, ‘학습하고 숙의하는데’ 81.1%, ‘분임토의를 하는데’ 80.7%, ‘질의응답을 하는데’ 80.2%, 주위 사람들과 기후위기와 관련한 논의를 하는데’ 80.0%, ‘공론화 참여를 결정하는데’ 78.6%임.

[KBS 생중계와 보도의 영향 (3점 척도)]

(n=312, 단위 : %)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의 KBS 생중계와 뉴스, 시사프로그램 관련 보도의 영향은 ‘시민대표단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는데’의 긍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특히 15-19세와 60대에서 긍정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KBS 생중계와 보도의 영향]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공론화 참여를 결정하는데	분임 토의를 하는데	질의 응답을 하는데	학습하고 숙의하는데	시민대표단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는데	주위 사람들과 기후위기와 관련한 논의를 하는데	
전체	(312)	78.6	80.7	80.2	81.1	90.5	80.0	
연령	15-19세	(16)	84.5	83.6	60.5	78.7	92.4	69.5
	20-29세	(39)	73.2	75.5	74.8	75.7	86.0	62.8
	30-39세	(45)	60.0	70.3	70.6	72.4	87.8	72.3
	40-49세	(51)	80.2	83.0	81.4	85.7	90.9	86.1
	50-59세	(59)	82.7	85.9	85.9	84.2	88.7	85.0
	60-69세	(54)	85.4	89.5	91.6	89.5	97.2	86.6
	70세 이상	(48)	83.9	75.1	78.8	76.3	90.4	84.4

* 각 항목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응답 비율임.

○ 미래세대 응답 결과

- KBS 생중계 및 관련 보도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분임 토의를 하는데’(90.0%)에서 긍정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론화 참여를 결정하는데’(85.0%), ‘시민대표단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는데’(85.0%) 순으로 높음.

[KBS 생중계와 보도의 영향 미래세대 응답 결과]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공론화 참여를 결정하는데	분임 토의를 하는데	질의 응답을 하는데	학습하고 숙의하는데	시민대표단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는데	주위 사람들과 기후위기와 관련한 논의를 하는데
전체	(40)	85.0	90.0	82.5	75.0	85.0	77.5

* 각 항목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응답 비율임.

기후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보고서

CHAPTER 03

시민대표단 의견

03

※ 기후위기 대응 또는 공론화 전반에 대해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전달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구분	시민대표단 소감
입법/ 법제화 요청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시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입법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 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안정적인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제도, 조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숙의 과정을 기반으로 다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 의견도 함께 고려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준과 방향을 충실히 반영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등 생활 현장에서 친환경 정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함께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체계적인 입법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대상 홍보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 제정과 정책 실행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투명하게 법제화되기를 바랍니다.	

구분	시민대표단 소감
적극적/ 신속한 대응 요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투명하고 강력한 제도 및 규제 마련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적극적인 규제 및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실효성 있는 강력하고 촘촘한 법·제도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민간, 개인이 함께 참여하는 적극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전기차 등 전환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제적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실행력이 요구됩니다.
	정책이 신속히 추진되어 투자 활성화 및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정책 이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강력한 실행력이 요구됩니다.	

구분	시민대표단 소감
기후위기 대응 당부	각 지역별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후위기 체험관’ 등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합니다.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즉각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이해하기 쉽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규제가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책 설계의 정교함이 요구됩니다.
	목표 중심이 아닌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 위원회와 제도의 설립 취지와 목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위기 정보를 국민에게 쉽게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 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법과 제도는 정교하게 마련하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기 감축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 의견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원자력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책 내용이 국민에게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적 과제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생태계 보전과 환경적 가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사회 전반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책 실행 과정과 논의 내용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은 의미 있는 참여 경험이었으며, 향후 정책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실행 과정과 논의 내용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정책 변화를 점검할 수 있는 후속 참여 기회 제공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다른 사회문제 간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구분	시민대표단 소감
정책 일관성/ 지속성 요청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수립된 정책이 정부 교체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계획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관성과 함께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단기적 접근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외부 요인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국가적 우선순위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등 숙의 기반 참여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은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토론과 숙의 문화가 정책 과정에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된 규제와 정책 방향이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함께 정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시민대표단 소감
	시민대표단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실행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시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공론화를 통해 제시된 시민대표단 의견이 정책 및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속의 문화가 정책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시민 의견을 기반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들이 정부 정책 결정에 폭넓게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견 반영 요청	시민 의견이 국회 및 정책 과정에 전달되고, 반영 여부에 대한 피드백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민대표단 의견이 누락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공론화가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시민 참여 확대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론화와 같은 참여의 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공론화 결과가 국회에 전달되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정리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시민대표단 소감
공론화 확대/지속 요청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되, 특정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화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대상 정보 제공과 공론화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공론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 참여 기회가 보다 많은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공론화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 과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공론화 기회를 확대하여 참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 프로그램 및 시민 참여형 정책 논의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노출 강화가 필요합니다.
	공론화 참여 경험이 정책 이해와 인식 제고에 기여하는 만큼,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뿐 아니라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 절차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구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 결과와 정책 추진 과정이 지속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 관련 플랫폼(홈페이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정보 제공과 참여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속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정책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공론화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분	시민대표단 소감
공론화 운영/일정 개선	공론화 일정과 운영 방식이 향후 정책 및 국회 논의에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일정이 다소 촘촘한 편이었으며, 토론 시간과 속의 시간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임토의 시간을 늘리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및 심층 토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 질문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 사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플립드러닝 등 다양한 방식의 학습·토론 기법을 활용하여 참여자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 일정 및 운영 안내(휴식시간, 이동시간 등)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자료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자료 배포 시점과 내용의 완성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 관련 정보와 자료가 사전에 충분히 공유되어 참여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이 가능한 소통 채널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시각자료와 글자 크기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 운영 과정에서 친환경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사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행사장 환경(좌석, 조명, 온도 등) 등 전반적인 운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절한 휴식시간을 확보하여 참여자의 피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분임 토의에 직접 참여하는 등 심층적인 논의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산업 구조와 특성을 고려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론화 운영은 의미 있었으나, 일정·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분	시민대표단 소감
전문가/ 토론 방식 개선	토론 패널 구성이 다양하지 않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시민 참여 의견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의 조율과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발표 내용은 전반적으로 유익했으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설명과 논의는 전문가 중심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제시 이후 바로 관련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토론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전문가 발표 및 설명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정치권과 전문가의 협력적 참여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 질문 중심 운영뿐 아니라 소수 의견에 대한 질문도 전문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찬반 입장의 전문가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토론 주제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전문가 요약 제공이 필요합니다.	

구분	시민대표단 소감
	기후위기 대응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를 통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과 결과, 반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교육을 통해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요구됩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인식 제고 필요	공론화 결과 및 정책 내용이 시민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홍보는 화제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교육과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 및 미디어를 통한 기후위기 관련 정보 노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대상 홍보와 참여 유도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참여 기반 확대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시민대표단 소감
미래세대 고려 요청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미래세대뿐 아니라 2030세대 등 다양한 세대를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세대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시민대표단 구성 시 세대별 인구 구조를 반영하여 보다 균형 있는 참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발전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미래세대 보호와 함께 국가 경쟁력 및 경제 발전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구분	시민대표단 소감
기업/ 산업계 관련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캠페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의 효율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뿐 아니라 학계, 산업계, 정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확대가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목표 수립 과정에서 기업과 국민의 공동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산업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참여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 중심 접근뿐 아니라 연구개발(R&D) 등 투자 중심의 정책 수단 확대가 필요합니다.
재원/ 경제적 부담	기후위기 대응 재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세 등 부담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재정 지원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재원 마련뿐 아니라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전환	취약 산업 종사자와 지역사회가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담이 사회 전반에 공정하게 분담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참여와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시민대표단 소감
감사/ 긍정적 평가	공론화 과정 운영에 대한 노력에 감사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 추진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공론화 과정은 의미 있는 경험과 참여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래를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한 기대가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 관련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는 평가가 확인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참여 기회 확대 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론화 과정이 학습과 토론의 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 및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목표와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정성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 촬영을 원하지 않는 참여자에 대한 배려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문제들이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의견이 누락 없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방식과 자료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책임성과 엄정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정책 지연과 미흡한 대응에 대한 점검과 책임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책 결정은 충분한 검토와 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 편의를 고려한 세부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제별 장단점과 다양한 입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제 논의 과정에서 중간 점검이나 의견 확인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충분한 숙의 기간과 예산 지원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